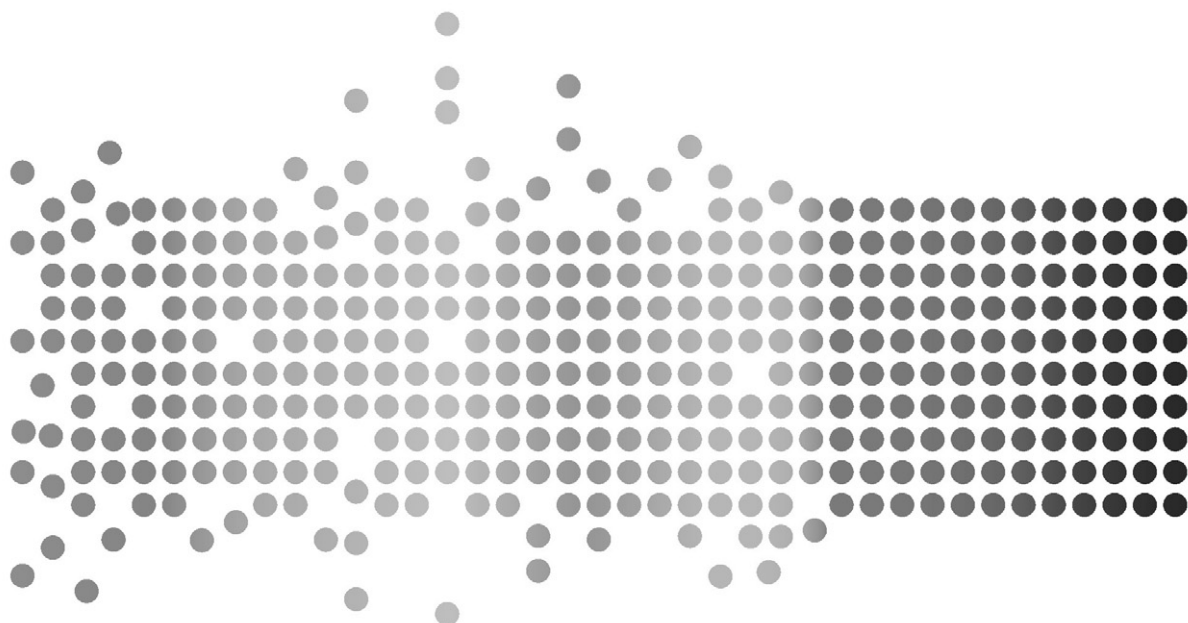


저출산의 파급효과와 정책방안

이삼식 · 이지혜 · 최효진 · 한진희 · 방하남 · 김현숙 · 우석진 · 최준욱 ·
김순옥 · 배성일 · 박효정 · 서문희 · 김혜원 · 이태진 · 신윤정 · 최성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집필진]

집필진	집필내용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총괄, 인구학적 파급효과
최효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인구학적 파급효과
한진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김현숙(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자리 창출 및 산출에 미치는 영향
최준욱(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정에 미치는 영향
김순옥(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배성일(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박효정(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보육료 내실화 방안
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일가정 양립제고 방안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방안
최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아동수당 도입 방안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부모보험제도 도입 방안
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결혼지원기금조성 방안
최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재원확보 방안



머리말

금세기 초 한국사회는 극저출산이라는 과거에 결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급격한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초저출산현상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1800년대 말 이래 많은 석학과 정치가들이 저출산으로 인하여 문명이 몰락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사회에 미치는 인구학적,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인구학적으로는 저출산이 인구규모 감소정도와 인구구조 불균형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저출산과 거시적인 경제와의 인과성을 파악하고, 저출산의 양적 및 질적 노동력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고, 일자리와 생산 감소효과를 추정하며, 재정적인 위험도를 논의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성, 교육 기능의 쇠퇴 등을 논의하였다.

저출산의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효과는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고, 차선으로 그 정도를 최대한 완화시켜야만 한다. 최근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현상은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심지어 미래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대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한 정부 관계자나 학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준 보건복지가족부의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이상영 국장, 저출산인구정책과 김용수 과장, 손주영 사무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해준 본 원의 김수봉 박사와 오영희 박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요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17
제3절 연구 방법 및 한계성	18
제2장 출산을 추이와 전망	21
제1절 출산율 변동추이	23
제3장 저출산의 파급효과	27
제1절 저출산의 인구학적 파급효과	29
1. 인구규모에 미치는 영향	29
2.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30
3. 가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33
제2절 저출산의 경제적 파급효과	34
1.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34
2.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46
3.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	53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77
제3절 저출산의 사회적 파급효과	90
1.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90
2.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101
3. 교육에 미치는 영향	120

제4장 향후 정책 과제	125
제1절 단기 정책과제	127
1. 보육료 내실화 방안	127
2. 일-가정 양립제고 방안	136
3.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방안	144
제2절 중장기 정책 과제	162
1. 아동수당 도입 방안	162
2. 부모보험제도 도입 방안	172
3. 결혼지원기금조성 방안	186
제3절 재원확보 방안	198
1. 세수 기반 확대	198
2. 목적세, 기금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203
제5장 결론	207
참고문헌	212

표 목차

〈표 2- 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3
〈표 2- 2〉 주요 OECD 국가와의 합계출산율 비교	25
〈표 2- 3〉 주요국가의 출산율 추이	26
〈표 3- 1〉 총인구 및 특성별 인구규모 전망	30
〈표 3- 2〉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32
〈표 3- 3〉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전망, 2005~2050	32
〈표 3- 4〉 잠재적부양비 변동 전망	33
〈표 3- 5〉 우리나라 가구구조 변동 전망	33
〈표 3- 6〉 15세 이상 인구 기준 취업률 추이	36
〈표 3- 7〉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전망	37
〈표 3- 8〉 인적자본지수 증가율 및 경제성장기여도 최종 전망	39
〈표 3- 9〉 한국의 저축률 추이	39
〈표 3-10〉 시나리오별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	42
〈표 3-11〉 실질GDP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 요인별 기여도	43
〈표 3-12〉 실질GDP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I: 요인별 기여도	43
〈표 3-13〉 일인당 실질GDP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 요인별 기여도	45
〈표 3-14〉 일인당 실질GDP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I: 요인별 기여도	46
〈표 3-15〉 인구집단별 평균연령 변동전망(2010~2050)	47
〈표 3-16〉 아동의 시기별 소비, 산출, 고용 효과 개관	53
〈표 3-17〉 출생에서 영유아기까지 대표적인 소비활동	54
〈표 3-18〉 아동 1인당 산전진찰 및 분만 비용	55
〈표 3-19〉 아동 1인당 분만 및 소아진료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56
〈표 3-20〉 주요 분유회사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	57
〈표 3-21〉 이유식 방식과 주요 기업	58

〈표 3-22〉 아동 1인당 분유 및 이유식 소비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58
〈표 3-23〉 영유아 의류 대표기업의 산출 및 고용	59
〈표 3-24〉 아동 1인당 의류 · 화장품 · 기저귀 소비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60
〈표 3-25〉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61
〈표 3-26〉 시설규모별 만0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I	62
〈표 3-27〉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관련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62
〈표 3-28〉 보육시설 종사자수(2008.12.31)	63
〈표 3-29〉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용	63
〈표 3-30〉 아동 1인당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64
〈표 3-31〉 아동 1인당 서적 및 장난감 이용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65
〈표 3-32〉 출산아동 1인당 영유아기의 산출 및 고용창출 효과	65
〈표 3-33〉 2008년 초등학교 관련 고용 및 세출 예산 현황	67
〈표 3-34〉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67
〈표 3-35〉 초등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67
〈표 3-36〉 사교육비 규모	69
〈표 3-37〉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69
〈표 3-38〉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70
〈표 3-39〉 초등학교 사교육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71
〈표 3-40〉 학령기 교육의 일자리 및 생산효과	72
〈표 3-41〉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72
〈표 3-42〉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생산효과	73
〈표 3-43〉 노동시장참여기간 소비지출의 일자리창출 및 생산효과	73
〈표 3-44〉 결혼산업의 일자리창출 및 생산효과	74
〈표 3-45〉 고령친화사업의 생산 및 고용	74

Contents

〈표 3-46〉 자동차, 금융, 주택 산업의 1인당 생산 및 고용	75
〈표 3-47〉 전체 산업에 미친 고용효과	76
〈표 3-48〉 전체산업에 미친 산출효과	76
〈표 3-49〉 인구구조(기본가정)	91
〈표 3-50〉 가입자 및 수급자 추이 (기본가정)	92
〈표 3-51〉 재정수지전망(기본가정)	93
〈표 3-52〉 부과방식이용률 추이	94
〈표 3-53〉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95
〈표 3-54〉 합계출산율 가정	96
〈표 3-55〉 인구 및 국민연금 가입자수, 수급자수 (대안가정)	96
〈표 3-56〉 재정수지전망 : 대안가정	97
〈표 3-57〉 출산율 가정별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98
〈표 3-58〉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99
〈표 3-59〉 가정별 GDP 대비 급여지출비율 추이	99
〈표 3-60〉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전망 (2010~2030년)	103
〈표 3-61〉 수입 및 지출 증가율 전망 (2011~2030년)	104
〈표 3-62〉 당기수지 균형 예상 연도	106
〈표 3-63〉 건강보험 적용인구 전망 (2011~2030년)	107
〈표 3-64〉 건강보험 적용인구 증가율 (2011~2030년)	108
〈표 3-65〉 건강보험 가입자수 전망 (2011~2030년)	109
〈표 3-66〉 근로자, 공·교, 지역 노인인구 구성비 전망 (2011~2030년) ..	109
〈표 3-67〉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가입자수 증가율 (2011~2030)	110
〈표 3-68〉 국내총생산(GDP) 추계 (2011~2030년)	112
〈표 3-69〉 1인당 GDP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추계 (2011~2030년) ·	113
〈표 3-70〉 국민의료비 대비 요양급여비 비율 (2001~2006년)	114
〈표 3-71〉 수가 변동에 따른 국민의료비 추계 (2011~2030년)	115

〈표 3-72〉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의 증가율 (1981~2006)	·117
〈표 3-73〉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추정118
〈표 3-74〉 수가 변동에 따른 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계 (2011~2030년)	118
〈표 3-75〉 적정 국민의료비 비율과 추계값과의 차이119
〈표 3-76〉 학령기 인구 변화 예측121
〈표 4- 1〉 취업모 영유아 연령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 (1월 1일 연령 기준/조사 3월 기준)129
〈표 4- 2〉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시간131
〈표 4- 3〉 12시간 종일제 이용 아동수 추정132
〈표 4- 4〉 보육료 지원방안에 따른 예산규모 추정133
〈표 4- 5〉 양육수당 지급방안에 따른 예산규모 추정134
〈표 4- 6〉 맞벌이가구 지원 보육료 추정134
〈표 4- 7〉 보육시설 이용시간별 유형135
〈표 4- 8〉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별 교사 지원액 추정136
〈표 4- 9〉 OECD 주요국의 산전후휴가제도 비교139
〈표 4-10〉 OECD 주요국가의 육아휴직제도 비교140
〈표 4-11〉 OECD 주요국가의 육아휴직급여의 재원 비교141
〈표 4-12〉 주거지원제도의 종류와 범주146
〈표 4-13〉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08년)148
〈표 4-14〉 최저주거기준150
〈표 4-15〉 방 기준 미달가구151
〈표 4-16〉 면적 기준 미달가구151
〈표 4-17〉 임차가구의 실제지불임대료 기준 주거비부담(RIR)152
〈표 4-18〉 임차가구의 최저주거비 기준 주거비부담(RIR)152
〈표 4-19〉 임차가구의 주택 점유형태153
〈표 4-20〉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규모별 입주비율154

〈표 4-21〉 국민임대주택 다자녀 가구가 부담하는 임대료와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평균임대료	154
〈표 4-22〉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156
〈표 4-23〉 2009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및 최저주거비	159
〈표 4-24〉 주거비 가구균등화	159
〈표 4-25〉 소득별 침실조정수(Number of Bedrooms Adjustment to Income) 사례	159
〈표 4-26〉 외국의 아동수당 사례	164
〈표 4-27〉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기존연구의 도입시나리오	169
〈표 4-28〉 아동수당 도입시 소요예산	170
〈표 4-29〉 아동수당 및 가족정책의 출산율 증진 효과에 관한 해외문헌	171
〈표 4-30〉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2006년)	173
〈표 4-31〉 스웨덴 부모보험제도의 도입연혁 및 변천사	177
〈표 4-32〉 스웨덴 부모보험지출액의 변동추이 (1995~2006년)	178
〈표 4-33〉 부모 보험 도입 방안 시나리오	180
〈표 4-34〉 시나리오 1안: 여성 고용보험가입자 대상 (여성 인구의 15.7%)	181
〈표 4-35〉 시나리오 2안: 여성 임금 근로자 대상 (여성 인구의 33.3%)	183
〈표 4-36〉 시나리오 3안: 여성 취업자 대상 (여성 인구의 52.1%)	184
〈표 4-37〉 평균 초혼연령 추이	186
〈표 4-38〉 평균 출산연령 및 첫째아 출산연령 추이	187
〈표 4-39〉 2007년도 전체 결혼 비용 및 부담 비율	189
〈표 4-40〉 결혼자금대출 도입 방안 시나리오	193
〈표 4-41〉 2008년 20~30대 연령별 혼인율	194
〈표 4-42〉 2009~2013년 연령별 추계인구	194
〈표 4-43〉 2009~2013년 연령별 결혼 추계 인원	195
〈표 4-44〉 결혼 비용 대출 시나리오 1안: 주택 비용을 제외한 결혼 비용 기준	195

〈표 4-45〉 결혼 비용 대출 시나리오 2안: 전체 결혼 비용 기준	196
〈표 4-46〉 결혼지원계좌 예산	196
〈표 4-47〉 담배소비세 국제비교	199

그림 목차

[그림 2- 1] 출산율 추이(1980~2008)	24
[그림 2- 2] 가임기(15~49세) 여성규모 변동 전망	24
[그림 2- 3]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추이(1980~2008)	26
[그림 3- 1]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변동 추이	29
[그림 3- 2] 장래 인구구조 변동 전망	31
[그림 3- 3] 피부양인구비율과 저축률(2003년 기준)	40
[그림 3- 4] 총저축률 전망 결과	41
[그림 3- 5] 시나리오별 실질GDP 전망 추이	44
[그림 3- 6] 시나리오별 일인당 실질GDP 전망 추이	45
[그림 3- 7] 인구의 연령 구성 추이 및 장기전망: 1980-2050	47
[그림 3- 8] 생산가능인구의 구성추이 및 전망	48
[그림 3- 9] 연도별(1980~2005) 신생아수에 따른 (20년 후)노동력 감소전망	49
[그림 3-10] 한국과 주요국의 노동력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980-2050 ..	49
[그림 3-11] 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전망: 2000~2050	50
[그림 3-12] 주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2003)	52
[그림 3-13] 초등학교 학생 대 교사 비율	66
[그림 3-14] 출산율 가정별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98

Contents

[그림 3-15]	가정별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 추이	100
[그림 3-16]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변화 전망 (2011~2030년)	105
[그림 3-17]	건강보험 당기수지 변화 전망 (2011~2030년)	105
[그림 3-18]	가입자수 추이 전망 (2011~2030년)	108
[그림 3-19]	국내총생산(GDP) 추계 (2011~2030년)	111
[그림 3-20]	수가 변동에 따른 국민의료비 추계 (2011~2030년) ..	116
[그림 3-21]	수가 변동에 따른 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계 (2011~2030년)	119
[그림 4- 1]	GDP대비 보육·유아교육·농업인 양육비 예산 비율 (2002~2009)	128
[그림 4- 2]	평균 초혼연령 추이	186
[그림 4- 3]	평균 출산연령 및 첫째아 출산연령 추이	188
[그림 4- 4]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변화 추이	202
[그림 4- 5]	일본의 아동수당 재원조달 및 운용체계	204

요약

I. 서론

□ 연구 목적

- 저출산의 파급효과를 진단하여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당위성 근거로 활용
-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연구방법

- 선행연구 고찰 및 선진국 사례 분석

II. 출산율 변동 추이와 전망

□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초저출산현상 지속

- 1983년 이래 저출산현상 지속 및 1998년부터 초저출산사회 진입
- 이와 달리, OECD국가 대부분 장기간 정책효과로 출산율 상승 (OECD평균: '00년 1.60→'07년 1.73)
 - * 미국 2.1, 영국 1.9, 프랑스 2.0, 스웨덴 1.91, 일본 1.37('05년 1.25이래 지속상승)

III. 저출산의 파급효과

1. 저출산의 인구학적 파급효과

- 2018년부터 인구감소국(평상상태)으로 전환(현재 일본이 유일)
 - 총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 4,234만 명('09년 인구에 비해 640만명 감소)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2,242만명으로 급격 감소(약 1천5백만명 감소)
- 유소년·생산층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구고령화가 압축적으로 진행
 - 총인구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09년 10.7%에서 2050년 38.2%로 급상승하여 세계최고령국가 전망
 - －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는 2020~2028년간 노인인구는 매년 73만명씩 증가하나, 출생아수는 37만명에 불과('16년 유소년인구(654만명)가 노인인구(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으로 고령국가로 전환)
 - 고령화 속도가 세계 유례없이 빨라 대응 곤란
 - － 고령화사회(노인비율 7%)에서 고령사회(14%)로 이행에 18년 소요(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등 소요)
 -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부양할 노동세대 감소로 부담 가중
 - － 노인 1명 부양 생산층인구(잠재적부양비)는 2008년 6.8명, 2020년 4.6명, 2030년 2.8명, 2050년 1.4명으로 부담 가중
 - 노인인구 부양을 둘러싸고 세대간 갈등 심화 우려

2. 저출산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고령화로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자본스톡 증가율이 200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5.8%에서 2041~2050년 1.6%로 둔화 감소
- 최근의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실질GDP 성장률은 200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4.8%에서 2041~2050년 1.2%로 둔화

나.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 노동력 감소
 - 취업자수는 2008년 약 2,350만에서 2019년 2,48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50년 경 1,700만명 정도로 감소 전망
- 노동력 고령화
 -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38.5세에서 2010년 39.7세, 2015년 40.9세, 2020년 42.3세, 2040년 44.1세로 증가
 - 생산가능인구 중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000년 12.2%, 2020년 23.3%, 2040년 28.9%로 증가
 -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통제할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 추정

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출산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와 생산유발액 수준에 대해 한 개인이 출생으로부터 영유아기, 교육기, 노동시장 참여시기, 은퇴이후의 소비시기를 거치면서 영위하는 소비활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소비활동을 통해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와 생산수준을 측정

□ 산업 산출 효과

- 자녀1명의 출산은 생애주기 동안 12억2천만원 산출
 - 합계출산율 1.25명시 26조8천억원, 합계출산율 1.6명시 177조원 산출

□ 일자리 창출효과

- 자녀1명의 출산은 생애주기 동안 1.15개의 일자리 창출
 - 합계출산율 1.25명시 2만5천개, 합계출산율 1.6명시 16만7천개 일자리 창출
- 영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거의 1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평균할 경우 출생 후 20년 동안에 걸쳐 매년 약 0.05명의 일자리를 창출

□ 연구결과로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단기적으로도 이미 일자리수가 줄어들고 생산이 위축되는 것을 확인

-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술과 산업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한 일자리 수와 생산증가의 효과가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나 적어도 2008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한 개인이 생애주기에 걸쳐 창출하는 일자리 수와 생산액은 출생이 발생한 시점부터 그 리 길지 않은 기간내에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저출산 문제가 미래 경제활력만이 아니라 단기간 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

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그로 인해 국민부담도 크게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접적인 증가
 -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및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 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현재 1% 미만에서 '50년에 6%대로 상승 전망

- 기타 공적연금지출(1% 미만 → 2%대), 기초노령연금(0.4% → 3%대), 건강보험지출(2.87% → 4.6~5.5%), 장기요양보험(0.27% → 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지출 0.25% → 0.4% 이상, 의료급여지출 0.28% → 0.6% 이상) 상승이 전망됨.

□ 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 소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입과 관련된 정책 변화 및 다른 분야의 지출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적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제외한 재정에서의 적자 요인은 2050년에는 현재보다 GDP의 약 5% 정도로 확대될 수 있음.
- 2009년의 실제 재정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2050년까지는 조세부담률 상향조정 및 지출감축에 필요한 정도는 GDP의 10% 정도(재정적자)가 될 수도 있음.

□ 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며, 재정상태를 안정화하고자 한다면 조세부담(국민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임.

- 조세부담률은 2050년까지 현재보다 약 4~5%p, 혹은 20~25% 정도 상향조정 필요
- 국민부담률도 2050년까지는 현재보다 약 6~7%p, 혹은 22~26% 내외 정도 상향조정

□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생산성 향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3. 저출산의 사회적 파급효과

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의 영향으로 2055년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수급자수보다 적어질

것으로 전망

- 가입자수는 2014년 18,897천명을 정점으로 2078년 7,496천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수는 2059년 11,121천명을 정점으로 감소
- 2055년 국민연금가입자수(10,928천명)가 노령연금수급자수(11,049명)보다 적어지기 시작(제도부양비 2008년 10.3% → 2055년 101.1% → 2078년 115.4%)
 - － 합계출산율 1.6 지속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항상 많음(제도부양비 최고점은 2063년 94.0%)

□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 2044년부터 당년도 수지적자 발생(지출이 총수입 초과) 및 2060년 적립기금은 소진(2043년 2,465조원 정점 후)
- 2060년 보험료수입은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하여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나 대규모의 국고보조 불가피(이 경우 재정수지 악화)
 - － 재정안정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은 12.5~17.5% 인상 불가피(현재 보험료율은 9%)하여 국민부담 가중

나.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수와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는 적용인구수의 차이가 매년 벌어져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가중 불가피
 - 2011년 대비 2030년에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가입자의 증가율이 각각 -1.19%와 -14.77%로 건강보험 가입자수가 적용인구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감소하여 국민개인당 부담 증가
 - － 적용인구수-가입자수 차이는 2011년 872만명에서 2030년 1,071만명으로 증가
- 저출산고령화로 전체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급여 지출이 더 커져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위험도가 증가

- 보험료 적자가 2011년 9.3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으로 급격히 증가(보험료수입 대비 보험급여비 비율이 1.36배에서 1.61배로 증가)
 - －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적자는 '30년 317조원으로 추정
-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민 부담 가중
 - 2017년에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매년 8% 인상 불가피(수가 3% 인상 가정)
 - － 현재 직장+개인 보험료를 5.08%

다. 교육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령인구 '09년 346만명에서 '20년 251만명(95만명 감소), 중등학교령인구 409만명에서 266만명(143만명 감소), 대학학령인구 251만명에서 227만명(24만명 감소)으로 각각 감소
-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분야에 지대한 영향 불가피
 - 학교 수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하여 신입생수가 적은 지역에서 학교통폐합이 불가피하나, 지역중심 교육의 중요성 무시 등에 따른 폐단 발생 우려
 - 교원 수요 감소로 교원수급조정 필요
 - 대학의 미충원율이 증가하여 대학의 슬림화(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및 그로 인한 내실 있는 고등교육 지장

IV. 향후 정책과제

1. 단기 정책 과제

가. 보육료 내실화 방안

□ 영유아 보육비용 국가책임제 확립(둘째아 이상 보육비용 조건없이 전액 지원)

- OECD국가: 유아공교육체계 및 영유아공보육교육체계 확립, 출생순위별 차등정책 실시(프랑스, 스웨덴, 일본, 호주 등)

	첫째아	둘째아 이상	소요예산 ('11년기준)
영유아(0~4세) 차등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12년까지 하위 80%까지 단계적 확대	'10년부터 별도조건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29,041억원
만5세아 무상보육	'12년까지 전체 아동으로 확대	'10년부터 소득계층 제한 철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현 차상위 이하 2세미만 영아 → 소득 하위 80% 이하 3세미만 영유아 확대 *지원액은 현 10만원에서 단계적 인상	'10년부터 0~1세아 소득제한 철폐	4,247억원

□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 중산층이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수요계층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므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세계적 추세)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 맞벌이가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완화(약 3만명 추가 지원 효과, '11년 392억원 소요 예상)

$$\begin{aligned}
 & * \text{예시 : 현재} \text{ 재산} + \text{소득} \{ (A \text{배우자소득} + A \text{배우자소득}) \times 100\% \} \\
 & \Rightarrow \text{변경} \text{ 재산} + \text{소득} \{ (\text{높은 소득}) \times (\text{낮은 소득}) \times 50\% \}
 \end{aligned}$$

□ 보육시간별 비용 및 지원기준 이원화: 종일제 추가 지원

-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용시간 유형을 기본형(5~6시간)과 종일제형(12시간)으로 이원화하여, 적용 대상도 모의 취업 등 조건을 두어 이용시간 자격을 제한

* 기본형 :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여 차등보육료의 차등체계를 새로이 구축

* 종일형 : 취업모 등 가정에서 아동을 적절하게 돌보기 어려운 부모에 한하므로 추가되는 비용은 국가가 인건비 형태로 지원 조정(연 약 4000억원 추가 소요)

이용시간	시간	지원대상	지원정도
기본형	5~6시간	전체	일반
종일제	8~12시간	취업모 등 가정사정을 반영하여 지원 허용	기본형 이외 지원 비율 추가

나. 일가정 양립제고 방안

□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 수준을 제고하여 사업주의 가임기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완화하여 경력유지 희망 여성의 출산 욕구를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현행 대기업에 대한 1개월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3개월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 현행 135만원의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장기적으로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강화('10년 155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고용 친화적 개편을 통해 경제활동과 출산의 조화 추구

- 빠른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육아휴직 초기 6개월의 지급액을 후기 6개월의 지급액에 비해 높여서 차등화하는 개혁이 필요함.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처럼 조기 복귀자에 대해 복귀로 인해 절약된 육아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귀 6개월 후에 보너스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둘째 자녀 이후의 경우 연장. 첫째 자녀의 경우 정률제를 6개월 적용하고 둘째 자녀 이후부터는 12개월 적용하는 것으로 고안함으로써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이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 원직장 복귀 후 계속 취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신설(예: 복귀 후 6개월까지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경우 150만원의 복귀 축하금 지급)

* 다자녀 출산자의 경우 육아휴직후 원직장 복귀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 육아휴직급여제도(현 월50만원 정액제)의 정률제 개편

- 육아휴직 초기 6개월 동안은 현재 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액을 정률 급여의 하한액으로 하고 출산전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하며 이후 6개월은 50만원의 정액급여를 지급(단,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캐나다 수준인 100만원 정도)

* 중간수준 임금을 받는 여성들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

□ 육아휴직기간 중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액의 사회적 부담 확대

- 육아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의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에 비례한 감면 추진
-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연금보험료(근로자 개인 및 사업 주 부담금)를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원하는 방안 추진
- 육아휴직자를 위한 퇴직금 적립액의 정부 지원 검토

다.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방안

(1) 현행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

□ 공공임대주택지원제도 개선

- 자녀수와 자녀연령을 고려하여 적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 * 현행 임대주택수준에 따라 일정소득이하만을 고려하고 있어 과밀한 주거생활문제를 개선(주택크기에 따른 임대료 수준을 가구

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 현행 다가구 매입이나 전세임대 중 일부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공동생활거주 물량 일부도 최저소득층의 다자녀가구에게 배정
- 용자지원제도 개선
 - 현행 제도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은 유지하되 다자녀가구에게는 주택면적의 제한(현재 85㎡이상)을 상향조정하거나 철폐

(2) 주거비경감을 위한 다자녀 가족주택수당지원 도입 방안

-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가족주택수당 지원
- 지원방법 : 월13만원 지급 고려, 3자녀 초과시 1명 증가마다 월 4만원 (월평균임대료의 0.1%) 추가 지원
 - 국민임대주택거주 3자녀이상 가구의 월평균 임대료 320,449원(시세의 80%)의 시세 약 400,561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인가구 최저주거비 271,120원(주거급여 상한선)을 자부담으로 한 나머지 금액(129,441원) 지원임.
- 소요예산 : 연간 약2,848억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시)
 - 자녀가 3명인 174,845가구에 월13만원, 자녀가 4명인 5,892가구에 월17만원 지원
- 기대효과
 - 가구의 직접적 주거비 경감을 통한 가계안정 및 적정한 주거환경 내 자녀교육 증진(사회적 투자 기능)
 - 주거비 지불능력(housing affordability) 신장을 통한 양육부담 완화

2. 중장기 정책 과제

가. 아동수당 도입 방안

- 최저생계비이하 저소득층 또는 소득하위 70% 이하 7세미만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점진적으로 초등학생(만 13세미만)까지 확대
 - 아동수당이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아동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시스템 전반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는 일본과 같은 선별적 아동수당의 형태로 운용
- 소요예산
 -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출산시 소득공제,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등이 중복적인 개념의 세제혜택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재원마련 가능

소득기준	자녀연령기준	수당규모	소요예산(억원)
최저생계비	7세미만	10만원	2,813
		5만원	1,406
	13세미만	10만원	7,122
		5만원	3,561
소득70%	7세미만	10만원	21,988
		5만원	10,994
	13세미만	10만원	41,230
		5만원	20,615

□ 기대효과

-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음.
 - 예로 프랑스의 경우 비근로소득이 5% 증가하면 출산율이 1.5% 상승할 것으로 추정(Laroque and Salanie, 2005).

나. 부모보험제도 도입 방안

- 필요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한 출산을 제고
- 주요 내용: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
- 급여일수: 만 0~만 5세 취학 전 자녀 1명당 365일
- 혜택 범위: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부모 급부금”만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시나리오	대상자	이용율	급여 액수	소요예산 ('11년 임금의 50%, 75% 이용률가정)
1안	여성 고용 보험 가입자 (여성 인구의 15.7%)	34.2%, 50%, 75%, 100%	임금의 50%, 80%	4982억원
2안	여성 임금 근로자 (여성 인구의 33.3%)	34.2%, 50%, 75%, 100%	임금의 50%, 80%	10347억원
3안	여성 취업자 (여성 인구의 52.1%)	34.2%, 50%, 75%, 100%	임금의 50%, 80%	16208억원

- 기대효과
 - 스웨덴은 1970년대 이전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부모보험”을 비롯한 적극적인 모성보호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08년 현재 1.91명의 높은 출산율 기록

다. 결혼지원기금조성 방안

- 결혼자금대출 방안
 - 대상: 20~30대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남녀
 - 대출액수: 전체 결혼비용 또는 주택비용 제외 후 결혼비용(전체 결혼 비용 중 20~30%) 중 30~80% 수준
 - 고려사항
 - － 소득기준 등에 따른 대출액의 상한선
 - － 상환방법(상환 기간, 연리, 다자녀출산시 인센티브로서 면제 등)

- 대표성 있는 샘플에 의한 정확한 결혼 비용 산출 필요
- 만혼 방지를 위한 연령 제한 여부 등

□ 결혼지원계좌(매칭 펀드) 도입방안

- 대상: 20~30대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신혼부부 중 저소득층
- 매칭 비율 및 액수
 - 월 최대 5만원까지 1:1매칭, 최대 매칭액수 180만원(3년)까지(참고 : 아동발달지원계좌)
- 사용용도 제한 등
- 고려사항: 소득기준 등, 항목별 비용 제한, 이율 등

3. 재원확보 방안

□ 저출산대책을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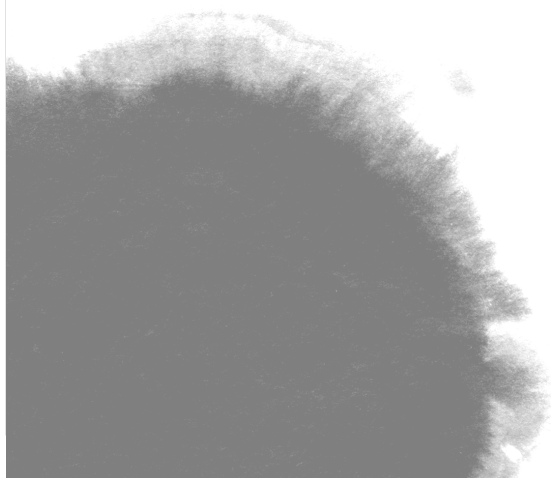
- 정권 교체, 기타 경제 및 재정여건등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용하여 장기적인 사업효과 기대 가능

□ 새로운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거나, 특별회계의 세출계정으로 세입과의 연계를 유도

- 현재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중 보건관련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재원조달
 - 향후 담배가격인상 등으로 인하여 건강증진부담금등 수입금이 증가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자녀양육비 경감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이며,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추가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여, 보다 안정적인 기금을 통한 재원조달 가능
 - 이때 세입원은 담배소비세의 일부, 경마 도박관련 개별소비세의 일부 등 sin tax재원을 활용할 수 있음.

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 1983년 이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온데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1.0명으로 근접하는 등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임.
- 출산율이 아주 낮아온데다가 가임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이상자녀수마저 감소하는 등 한국사회가 점차 "저출산 덩(low fertility trap)"에 빠져 들어 가고 있어, 미래 사회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저출산의 영향력 진단은 출산율 제고와 저출산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당위성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활용될 것임.
 - 정책과제들은 기존의 정책들에서 부가적이며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됨.

제2절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출산율 변동추이 분석, 저출산의 파급효과 진단, 정책과제 제안 등의 세 부문으로 구성함.
- 출산율 변동 추이에 대한 분석은 최근의 출산율 하락세와 외국과의 비교 등을 주로 다루고 있음.

- 저출산의 파급효과는 그 성격에 따라 인구학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파급효과로 세분화하여 진단함.
 - 인구학적 파급효과로는 인구규모, 인구구조, 가구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저출산의 영향을 분석함.
 -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거시경제, 노동력, 일자리, 재정 등으로 구분하여 저출산의 영향을 분석함.
 - 사회적 파급효과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교육, 국방 등으로 구분하여 저출산의 영향을 분석함.
-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과제 개발은 정책 도입 가능성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안함.
 - 단기적 정책과제로는 보육료 내실화 방안, 일·가정 양립제고 방안,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방안 등을 제안함.
 -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아동수당 도입 방안, 부모보험제도 도입 방안, 결혼지원자금 조성 방안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안함.
 - 끝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제안함.

제3절 연구 방법 및 한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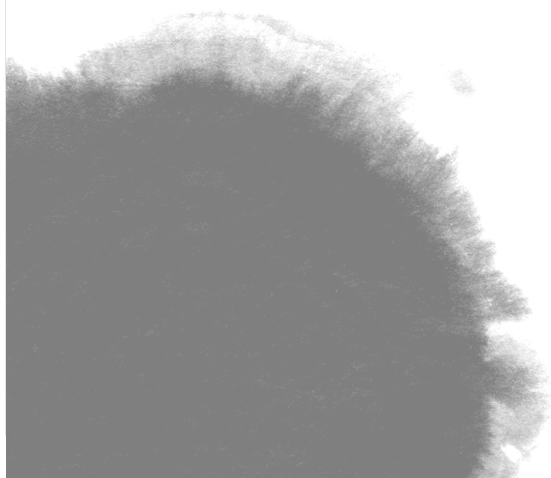
- 본 연구에는 선행연구 고찰과 외국사례 검토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함.
 -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저출산의 파급효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함.
 - 정책 방안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함.
- 저출산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대응과제도 방대하다는 특성을 가짐.
 - 본 연구의 시간과 예산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사회전반에 걸쳐 세부분야별로 심층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실정임.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각각의 연구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함.

- 이와 같은 연구 방법으로 인한 구체적인 한계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 파급효과 분석이 주제별로 추진됨으로써 일부 가정들이나 이용변수들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성이 존재함.
 - － 저출산의 파급효과 분석에서 누락된 부문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저출산 대응 방안들은 주로 지금까지 연구가 미흡한 부문들에 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지 않음. 종합방안들은 기존연구의 결과를 참조하도록 하며, 필요시 별도의 연구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2장

출산율 추이와 전망



제2장 출산율 추이와 전망

제1절 출산율 변동추이

□ 출산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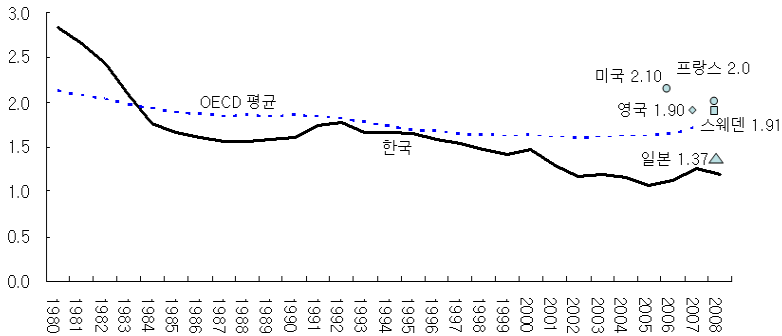
-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치수준(TFR 2.1)으로 급감
- 이후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에는 다소 불규칙적이거나 1.6 전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은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 감소폭이 더욱 커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 지속
 - － 합계출산율은 1998년 1.48에서 2001년 1.30, 2005년에는 1.08 까지 감소
-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6년 1.13, 2007년 1.26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에 1.19로 다시 감소

〈표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단위: 명, 만명)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합계출산율(명)	4.53	2.82	1.57	1.63	1.47	1.08	1.12	1.25	1.19	
출생아수(만명)	101	86	65	72	63	44	45	49	47	

자료: 통계청, KOSIS, 2009.

[그림 2-1] 출산율 추이(198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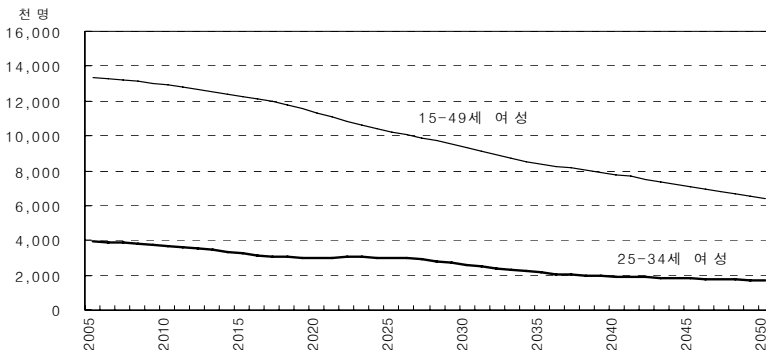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 향후 출산율 변동 전망

- 과거 가족계획사업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코호트(cohort)가 가임기에 진입하면서 주출산연령층의 여성인구(25~34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출생아수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low fertility trap)
 - 전체 가임기 여성(15~49세)은 2007년 1,323만명에서 2015년 1,226만명, 2030년 931만명, 2050년 637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 주출산연령층 여성규모는 2007년 386만명에서 2015년 325만명, 2030년 260만명, 2050년 172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

[그림 2-2] 가임기(15~49세) 여성규모 변동 전망



자료: 통계청, KOSIS, 2009.

□ 주요 OECD 국가와 비교

- 우리나라와 달리,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최근 출산율 상승세
 - － 이는 OECD국가들이 장기간에 걸쳐 정책을 추진한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표 2-2〉 주요 OECD 국가와의 합계출산율 비교

국가명	최저수준(연도)	최근 출산율(연도)	상승폭(최근상승기간)
일본	1.26명('05년)	1.37명('08년)	.11명(2년)
프랑스	1.66명('94년)	2.00명('08년)	.34명(4년)
스웨덴	1.50명('99년)	1.91명('08년)	.41명(9년)
영국	1.63명('01년)	1.90명('07년)	.27명(6년)
독일	1.24명('94년)	1.37명('07년)	.13명(13년)
미국	1.80명('83년)	2.10명('06년)	.30명(23년)
OECD 국가 평균	1.60명('00년)	1.73명('07년)	.13명(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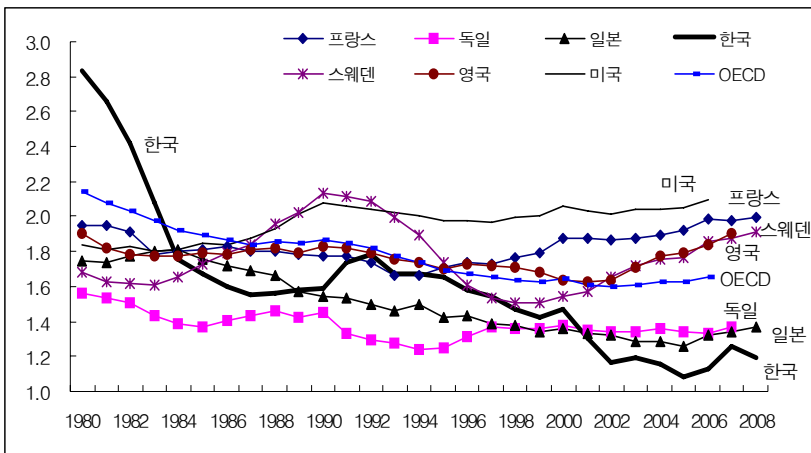
주: * 2000~2005년간 세계적 평균출산율은 2.65. 개도국은 2.90, 선진국은 1.56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로 인식되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도 지속 상승
 - －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에 근접
 - ※ 이는 우리나라도 강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인구대치수준까지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도 정책의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상승세로 전환
 - －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6명을 저점으로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여 조만간 1.4명대로 진입 예정
 - － 유럽국가들 중 전통적인 가톨릭(Catholic) 가족주의적 영향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인 독일의 경우에도 가족법 전면개정('05) 등을 통한 프랑스식 모형을 채택한 이래 증가세로 전환
- 한편, 다문화국가(multi-cultural country)로서 미국과 영국의 출산율

은 최근에 들어 뚜렷한 상승세 유지

- 영국의 경우 2001년 1.63명을 최저점으로 2007년 1.90명으로 지속적 상승
-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말 이래 2.0명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2006년에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인구대치수준인 2.1명으로 상승

[그림 2-3]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추이(1980~2008)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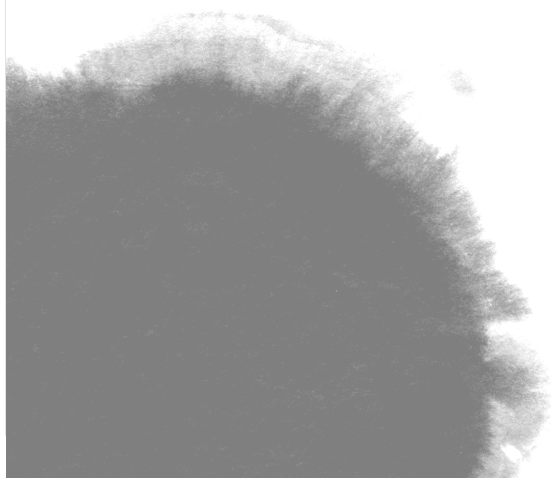
〈표 2-3〉 주요국가의 출산율 추이

	최저수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05)1.08	2.83	1.67	1.59	1.65	1.47	1.30	1.17	1.19	1.16	1.08	1.13	1.26	1.19
일본	'05)1.26	1.75	1.76	1.54	1.42	1.36	1.33	1.32	1.29	1.29	1.26	1.32	1.34	1.37
프랑스	'94)1.66	1.95	1.81	1.78	1.71	1.87	1.88	1.86	1.87	1.90	1.92	1.98	1.98	2.00
독일	'94)1.24	1.56	1.37	1.45	1.25	1.38	1.35	1.34	1.34	1.36	1.34	1.33	1.33	1.37
스웨덴	'99)1.50	1.68	1.73	2.14	1.74	1.55	1.57	1.65	1.72	1.75	1.77	1.85	1.88	1.91
영국	'01)1.63	1.90	1.79	1.83	1.70	1.64	1.63	1.64	1.71	1.77	1.79	1.84	1.90	
미국	'83)1.80	1.84	1.84	2.08	1.98	2.06	2.03	2.01	2.04	2.05	2.05	2.10		
OECD	'00)1.60	2.14	1.89	1.86	1.69	1.64	1.61	1.60	1.61	1.62	1.62	1.65	1.73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3장

저출산의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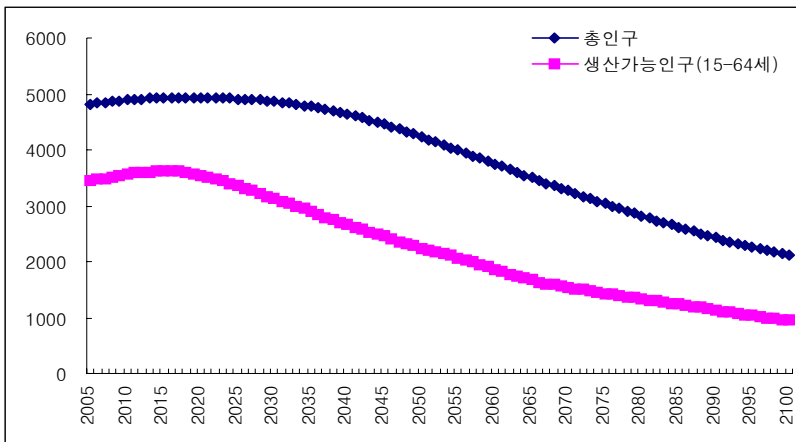
제3장 저출산의 파급효과

제1 절 저출산의 인구학적 파급효과

1. 인구규모에 미치는 영향

- 총인구는 2009년 4,875만명에서 증가하나,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50년 4,234만명, 2100년 2,120만명으로 추정
- 우리나라는 자연적인 인구감소국이 될 전망(현재 일본이 인구감소국)

[그림 3-1]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이삼식 외, 『국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구축』,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국가로 진입 예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9년 3,537만명에서 증가하나,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50년에 2,242만명(약 1천5백만명 감소)에 이를 전망

〈표 3-1〉 총인구 및 특성별 인구규모 전망

(단위 : 만명)

	총인구	노동공급인구		가임여성 및 출생아수		노인인구		
		생산가능인구 (15~64세)	핵심 노동층	가임여성 인구	출생아 수	노인진입 인구	총노인인구 (65세이상)	총인구대비 노인비율
2010	4,888	3,561	2,020	1,291	44	35	536	11
2015	4,928	3,616	1,897	1,226	40	44	638	13
2020	4,933	3,551	1,808	1,131	38	62	770	16
2025	4,911	3,356	1,690	1,022	37	78	977	20
2030	4,864	3,130	1,549	931	35	75	1,181	24
2035	4,773	2,895	1,389	840	31	80	1,355	28
2040	4,634	2,653	1,278	779	27	73	1,504	32
2045	4,452	2,450	1,126	708	24	74	1,580	35
2050	4,234	2,242	996	637	23	60	1,616	38
2055	3,994	2,071	928	586	22	58	1,576	39
2060	3,746	1,862	875	544	21	63	1,557	42
2065	3,501	1,670	812	503	19	56	1,522	43
2069	3,308	1,560	762	473	17	43	1,457	44
2070	3,261	1,538	749	466	17	40	1,436	44
2075	3,032	1,433	684	430	15	39	1,339	44
2080	2,815	1,332	617	391	14	36	1,249	44
2085	2,614	1,236	564	358	13	35	1,165	45
2090	2,425	1,136	524	329	12	34	1,091	45
2095	2,253	1,034	489	305	11	33	1,034	46
2100	2,102	944	454	282	10	28	986	4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이삼식 외,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구축』,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2.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 인구고령화 압축적 진행

- 유소년인구(0~14세)가 지속 감소하여 2016년에는 654만명으로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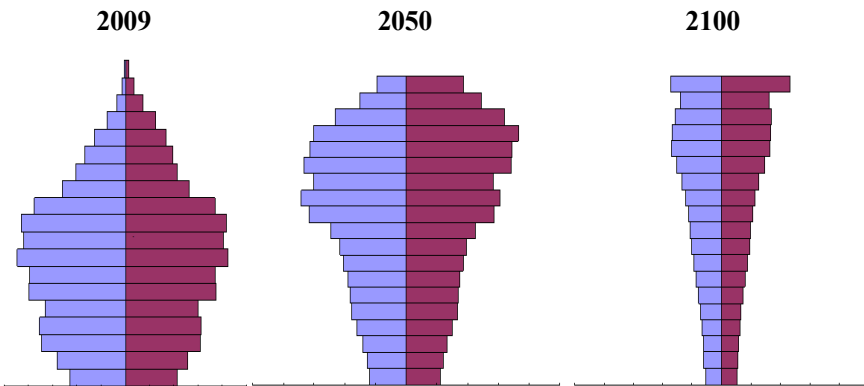
인구(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

－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는 2020~2028년간 노인인구는 매년 73만명씩 증가하나, 출생아수는 37만명에 불과

○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고령화수준)은 2000년 7%(고령화사회)에 도달한 이래 2018년 14.3%(고령사회 진입), 2026년 20.8%(초고령사회 진입), 2050년 38.2%로 급상승하여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¹⁾

－ 노인인구(65세 이상)는 2008년에 처음으로 500만명을 상회하였으며, 2026년 1,000만명, 2040년 1,500만명을 초과할 전망

[그림 3-2] 장래 인구구조 변동 전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이삼식 외,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구축』,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고령화 속도

○ 고령화사회(노인 7%)에서 고령사회(노인 14%)로 이행에 18년 소요

－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등에 비해 빠르게 진행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노인비율 20%)로 이행에 8년 소요

－ 프랑스 40년, 이탈리아 20년, 미국 16년 등에 비해 빠르게 진행

1) 노인인구 비중이 7%에 도달할 경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에 도달할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에 도달시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구분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아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준비가 미흡하여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

〈표 3-2〉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국가	특정 노인비율 도달연도			소요기간(년)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독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표 3-3〉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전망, 2005~2050

연도	(단위: %)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	영국
2005	19.7	16.3	18.8	19.7	16.8	17.2	12.3	16.1
2010	22.5	16.5	20.5	20.6	17.3	18.4	12.8	16.6
2015	26.2	18.5	20.9	22.1	18.3	20.2	14.1	18.1
2020	28.4	20.2	22.4	23.2	19.5	21.1	15.8	18.9
2025	29.5	21.7	24.4	24.6	21.4	21.9	17.8	19.9
2030	30.6	23.2	27.3	27.0	23.9	22.8	19.4	21.6
2035	32.3	24.3	29.8	29.6	26.7	23.7	20.2	23.1
2040	34.9	25.3	30.3	31.8	29.7	24.2	20.5	23.7
2045	36.6	25.6	30.1	32.8	32.2	24.2	20.6	23.7
2050	37.7	25.9	30.2	32.6	33.2	24.1	21.0	24.1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

□ 노인부양을 위한 인구구조 약화

- 노인인구는 증가하나 이들을 부양하여야 할 노동세대는 감소하여 노인부양부담 심화 전망
 - 2005년 생산가능인구 7.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

에 4.6명, 2030년 2.8명, 2050년 1.4명이 부담
 ※ 노인인구 부양을 둘러싸고 세대간 갈등 심화 우려

〈표 3-4〉 잠재적부양비 변동 전망

(단위: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수)

연도	1990	2000	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50
잠재적부양비	13.5	12.4	7.0	6.6	5.7	4.6	3.4	2.7	2.1	1.8	1.4

주: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3. 가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형태 변화

- 출산을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인 “부부와 자녀”가구는 2009년 703만 가구(전체의 41.6%)에서 2030년 671만 가구(전체의 33.8%)로 감소
- 대신 1인가구는 동기간 342만 가구에서 471만 가구, 부부가구는 253만 가구에서 411만 가구로 각각 증가

〈표 3-5〉 우리나라 가구구조 변동 전망

(단위: 가구, %)

	2009	2015	2020	2025	2030
총가구	16,916,966	18,191,663	19,011,815	19,593,767	19,871,144
부부가구	2,530,730	2,953,367	3,360,429	3,790,207	4,112,353
부부+자녀가구	7,032,014	7,282,487	7,215,406	7,003,859	6,709,402
1인가구	3,415,121	3,773,408	4,109,276	4,421,560	4,713,083
비율					
부부가구	15.0	16.2	17.7	19.3	20.7
부부+자녀가구	41.6	40.0	38.0	35.7	33.8
1인가구	20.2	20.7	21.6	22.6	23.7

자료: 통계청, KOSIS.

제2절 저출산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²⁾

가. 개요

□ 인구구조 고령화는 경제성장률, 임금, 금리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실질경제성장률은 "bottom-up" 및 "top-down" 방식을 반복적용하여 전망

— bottom-up 방식이란 GDP 증가율을 Cobb-Douglas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한 성장회계 방법을 이용하여 노동, 인적자본, 물적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고, 각 요인에 대한 전망치를 합산하여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방법을 의미

• 생산함수 접근법: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

$$Y_t = A_t K_t^\alpha (h_t L_t)^{1-\alpha}$$

• Y_t 는 실질 GDP, K_t 는 물적자본 스톡, L_t 는 취업자수, h_t 는 취업자의 평균 인적자본, 그리고 α 는 산출물의 자본탄력성

• $\alpha (=1-\text{산출물의 노동탄력성})$ 는 김광석(1998)³⁾의 1979~95년 기간 중 비주택기업부문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 0.654를 토대로 0.346으로 설정

— 한편 top-down 방식이란 bottom-up 방식을 따라 도출된 성장률 전망치가 경제성장률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합의, 관련 실증연구에서 확립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

2) 본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한진희, 최경수, 신석하, 임경묵 박사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에 따라 수행한 『국민연금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2007)을 토대로 작성

3) 김광석, 『우리경제의 성장요인과 성장잠재력 전망』, 세계경제연구원, 1998.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bottom-up 방식의 전망에 다시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모형소위 발표자료인 이삼식(2007)⁴⁾의 합계출산율 가정 A1: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시나리오 I) 및 C1:정부목표I(시나리오 II)에 대하여 거시경제변수 전망을 실시
 - 시나리오 I (통계청 중위 연장): 합계출산율이 2050년까지는 통계청의 중위가정을 따르고, 이후 2075년까지는 2050년 수준인 1.28로 지속되는 경우
 - 시나리오 II (정부목표 I):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에서 2015년까지 1.60으로 상승하고, 이후 2075년까지 동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의 정부목표 I에 해당

나. 노동공급 전망⁵⁾

- 15세 이상의 인구를 성별 및 연령별에 따라 $2 \times 16 = 32$ 개 세부 집단으로 세분하여 각 집단의 취업률을 전망
- 2006~2017년까지의 전망은 통계 모델로부터 얻어진 전망치를 토대로 추세적 변화 및 제도적 요인을 감안하여 조정함으로써 도출
 - 개인 i 의 취업확률

$$P_{it}^i = \text{Logit}(-X_{it}^i \beta_{it}) = 1/[1 + \exp(-X_{it}^i \beta_{it})]$$

- 설명변수로서는 상수항을 포함하여 학력더미변수(고졸 및 대졸이상 더미), 농가더미, 재학중 여부의 더미를 사용
- 장래 노동공급 예측은 2000~2001년 2년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대상으로 각 성별·연령계층별로 추정된 추정계수 활용

4) 이삼식 외,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구축』,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5) 한진희 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 한국개발연구원, 2002. (3.3.2. 노동공급의 절차(pp.33~41) 참조)

- 성별·연령계층별 세부집단 j 의 취업률은 각 설명변수의 기대치를 이용하여 다음의 근사식을 사용:

$$\hat{P}_{jt} \simeq \frac{1}{1 + \exp(-E[X_{jt}]'\hat{\beta}_{jt})}$$

- 2017년 이후 2075년까지의 전망에서는 통계모델(logit model)보다는 외국의 추이와 제도적 요인의 변화를 감안하여 추계
 - 앞의 통계모델은 기본적으로 배경변수의 변화를 전망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으로서 배경변수의 변화가 크지 않은 먼 장래의 경우에는 logit model에 의한 분석결과의 시사점이 약함.
 - 그러므로 여성 취업률의 상승, 은퇴연령의 상승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요인을 감안하여 전망치를 도출
- 노동공급 전망 결과, 연령계층별 취업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전체 취업률(15세 이상 인구기준)은 지속적 하락 전망
 - 시나리오 I(시나리오 II)의 경우 인구 15세 이상 취업률은 2005년의 약 60%에서 2050년 49%(50%), 2075년 48%(51%)로 하락할 전망
 - 이러한 15세 이상 인구 취업률(L/N)의 하락세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L/W) 증가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W/N)이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으로 주로 인구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임.

〈표 3-6〉 15세 이상 인구 기준 취업률 추이

(단위 : %)

	시나리오 I (통계청 중위 연장)			시나리오 II (정부목표 I)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2005	59.7	71.6	48.4	59.7	71.6	48.4
2010	59.6	71.4	48.2	59.6	71.5	48.2
2020	59.4	70.9	48.3	59.4	70.9	48.3
2030	56.3	67.3	45.6	55.6	66.4	45.2
2040	52.0	62.1	42.3	52.1	61.8	42.9
2050	49.0	58.2	40.2	50.3	59.4	41.8
2060	47.7	56.3	39.5	49.8	58.4	41.7
2070	47.2	55.0	39.8	50.5	58.1	43.2
2075	47.5	55.1	40.4	51.1	58.5	44.1

□ 취업자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둔화하며 2020년대 이후에는 인구감소세와 더불어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표 3-7> 참조).

○ 본 전망에서 연령별 취업률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2030년 이후 -1% 이상(시나리오 I의 경우)의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인구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데에 따른 결과

— 급격한 고령화의 결과, 2050년까지는 취업자가 인구보다 빠르게 감소

○ 시나리오 II(정부목표)의 경우가 시나리오 I(통계청 중위연장)에 비해 취업자증가율이 높으며, 시나리오간 취업자 증가율의 차이는 204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

—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이므로 15년 이후인 2020년까지는 시나리오별로 나타나는 출산율 차이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030년까지도 그 차이는 미세한 데에 그침

〈표 3-7〉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전망

(단위 : %)

	시나리오 I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II (정부목표 I)
2005~2010	1.1	1.1
2011~2020	.5	.5
2021~2030	-.5	-.4
2031~2040	-1.1	-.7
2041~2050	-1.3	-.8
2051~2060	-1.6	-1.1
2061~2075	-1.7	-.9

다. 인적자본 지수 전망

□ 인적자본 지수는 성별, 연령대별 및 학력수준별 임금격차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

$$h_t = \sum_{s,e,a} w_{s,e,a} l_{s,e,a,t}$$

s: 성별: 남자 및 여자

e: 학력수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a: 연령계층: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w_{s,e,a}$: 상대임금수준-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여성, 중졸이하, 15~24세를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채택

상대임금수준은 1990~2000년간 평균임금을 채택

$l_{s,e,a,t}$: t년도의 s,e,a 집단의 고용비중

자료 : 임금: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학력및고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2030년까지의 인적자본 지수 증가율은 위의 방법론을 통하여 전망 하되, 2030년 이후 인적자본지수 증가율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0.3%p에 수렴하는 것으로 전제

○ 미국의 경우 1915~99년간 유사한 방법으로 측정된 인적자본지수 증가율은 0.53%(기여도 0.37%)수준유지(Goldin and Katz, 2001)⁶⁾

— 1960~80년간 0.63%(0.44%), 1980~99년간 0.43%(0.30%)

○ 이와 같이 인적자본지수 증가율을 2030년 이후 위의 방법으로 전망 하지 않고 일정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가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적자본지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학력수준 상승을 반영할 뿐 전반적 교육의 질 향상 그 자체는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임.

— 인구의 학력수준은 무한히 증가할 수 없으나 교육의 질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통념임.

— 위의 방법을 통하여 인적자본지수를 전망할 경우 2030년 이후 인적자본지수의 증가율이 0으로 점차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2030년 이후에도 인적자본지수가 일정 수준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인적자본지수의 한계를 보정하고자 한 것임.

6) C. Goldin and L.F. Katz, "The legacy of U.S. Educational Leadership: Notes on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20th Century", AEA Papers and Proceedings, v91 n2, May 2001.

〈표 3-8〉 인적자본지수 증가율 및 경제성장기여도 최종 전망

단순추정치	인적자본지수 증가율(%)	경제성장기여도(%)
1993~2002	1.02	.67
2006~2010	.96	.63
2010~2020	.85	.56
2020~2030	.76	.50
2030~2040	.61	.40
2040~2050	.46	.30
2050~2060	.46	.30
2060~2070	.46	.30
2070~2080	.46	.30

라. 저축률 및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

- 과거 저축률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에 따라 살펴본 후 이러한 결정요인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저축률을 전망
-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8년 40.4%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02년에는 31.3%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반등하여 2005년에는 33.0%를 기록

〈표 3-9〉 한국의 저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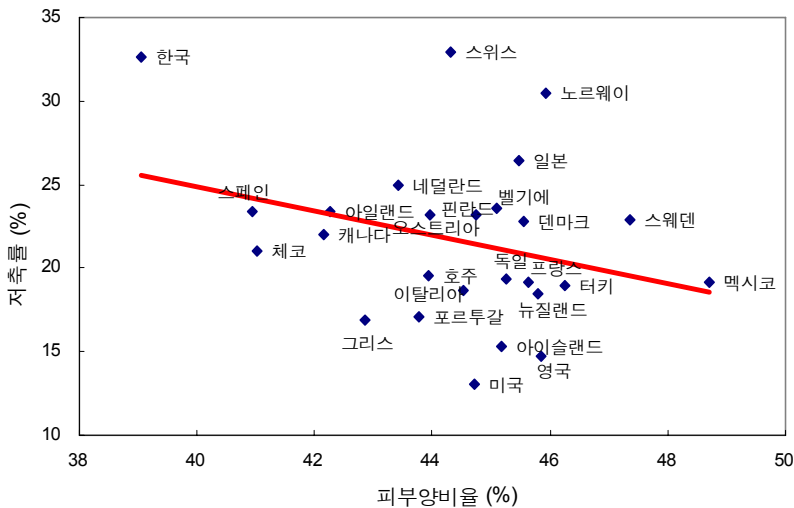
연 도	총저축률	민 간	가 계	기 업	정 부
1975	19.5	16.2	8.5	7.7	3.2
1980	24.7	19.2	8.1	11.1	5.5
1985	31.2	25.1	12.5	12.6	6.1
1990	37.5	29.6	16.7	12.9	7.9
1995	36.3	27.2	13.3	13.9	9.1
1996	35.5	25.8	13.6	12.2	9.6
1997	35.5	25.6	12.5	13.1	10.0
1998	37.5	28.6	19.9	8.7	8.9
1999	35.3	26.1	14.1	12.0	9.2
2000	33.7	21.9	10.6	11.2	11.8
2001	31.7	20.7	8.0	12.6	11.0
2002	31.3	19.6	5.1	14.5	11.7
2003	32.8	21.1	6.2	15.0	11.6
2004	34.9	24.6	7.5	17.2	10.2
2005	33.0	22.8	6.5	16.3	10.2

□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통한 분석 이외에도 여러 국가의 저축률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국가별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분석대상 기간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진전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스페인,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9개국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90~2004년임.

[그림 3-3] 피부양인구비율과 저축률(2003년 기준)



〈Box 2〉 고정효과(fixed effect)가 감안된 패널 회귀분석 결과

$$\text{총저축률} = 0.4269 - 0.5086 \times \text{피부양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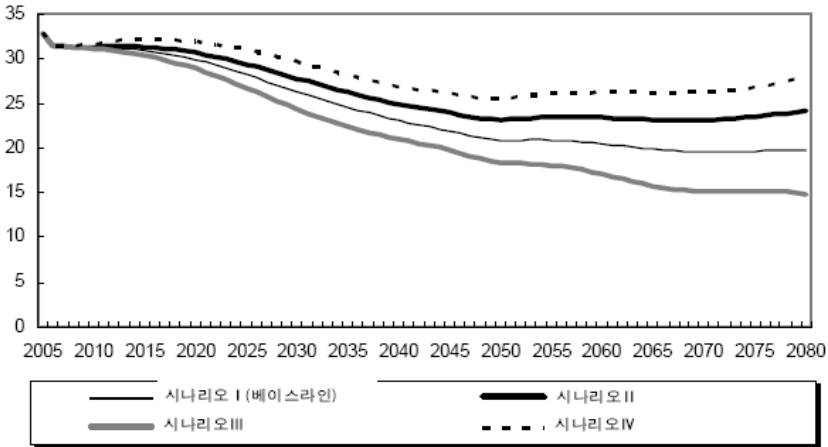
(5.88) (3.11)

주: 1990~2004년 연간자료를 사용한 회귀식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임
자료: OECD, UN.

□ 국가별 패널분석으로 추정된 회귀식을 활용하여 총저축률을 전망한 결과 저축률은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의 경우 모두 장기적으로 20%대 초반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2075년 각각 21.7% 및 23.4%)

- 이와 같은 전망 결과는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 총저축률 수준인 22%에 비교적 근사한 수준임

[그림 3-4] 총저축률 전망 결과



주: 시나리오 I, II는 각각 중위, 출산율이 1.6을 유지할 경우의 전망치를 활용한 결과임.

□ 자본스톡 전망은 다음의 세 가지 가정 하에서 이루어짐.

- 첫째, 자본스톡 전망에서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취하였음.
- 둘째, 한국의 경우 과거 경상가처분소득과 경상 GDP의 차이는 무시하여도 좋을 만큼 작다고 판단하여 향후 전망에서 경상가처분소득 대비 경상 총투자비율은 경상 GDP 대비 경상 총투자비율과 같다고 가정
- 셋째, 실질 GDP 대비 실질 총투자의 비율은 경상 GDP 대비 경상 총투자의 비율에 기준연도 대비 GDP 디플레이터와 투자디플레이터의 상대적 변화율을 추정하여 곱해줌으로써 계산
- 넷째, 위의 과정을 통하여 계산된 실질 GDP 대비 실질 총투자 비율을 초기 실질 GDP에 곱하여 줌으로써 실질투자액을 산출하고, 이러한 실질투자액을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여 차기 자본스톡을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전 기간에 대한 자본스톡을 전망

- 〈표 3-10〉에는 시나리오별 자본스톡 증가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자본스톡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3-10〉 시나리오별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

(단위 : %)

단순 추정치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2006~2010	5.8	5.8
2011~2020	5.4	5.3
2021~2030	4.0	3.8
2031~2040	2.5	2.5
2041~2050	1.6	1.9
2051~2060	1.3	1.7
2061~2075	1.0	1.7

주: 시나리오 I, II는 각각 중위, 출산율이 1.6을 유지할 경우의 전망치를 활용한 결과임

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가정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일인당 GDP 격차 축소 속도, 그리고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크게 축소되는 2050년경 이후에는 한국경제가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가정

- 본 연구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향후 소득수준이 상승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0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1.4%, 2011~2020년 기간 중 1.3%, 2021년 이후 연평균 1.2%의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바. 실질 GDP 증가율 전망 결과

- 본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실질 GDP 증가율 및 일인당 실질 GDP 증가율 전망 결과를 제시

□ 시나리오 I(시나리오 II)의 경우 한국경제의 실질GDP 성장률은 200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4.8%에서 2041~2050년 1.2%(1.6%)로 둔화되고, 그 이후 2075년까지 0.7~0.9%(1.4~1.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

- 특히 2020년 이후 2050년까지 GDP 증가율은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세 전환, 피부양인구 비율의 빠른 상승 등 고령화의 효과로 인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
- 2050년 이후에는 여전히 대체출산율을 하회하는 합계출산율(1.28)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인구비율 등 인구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GDP 증가율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냄.

〈표 3-11〉 실질GDP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 요인별 기여도

(단위 : 증가율, %)

	GDP	물적자본	취업자수	취업자 일인당 인적자본	TFP
2006~2010	4.8	2.0	.7	.6	1.4
2011~2020	4.1	1.9	.4	.6	1.3
2021~2030	2.8	1.4	-.3	.5	1.2
2031~2040	1.7	.9	-.7	.4	1.2
2041~2050	1.2	.6	-.9	.3	1.2
2051~2060	.9	.4	-1.0	.3	1.2
2061~2075	.7	.4	-1.1	.3	1.2

〈표 3-12〉 실질GDP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I: 요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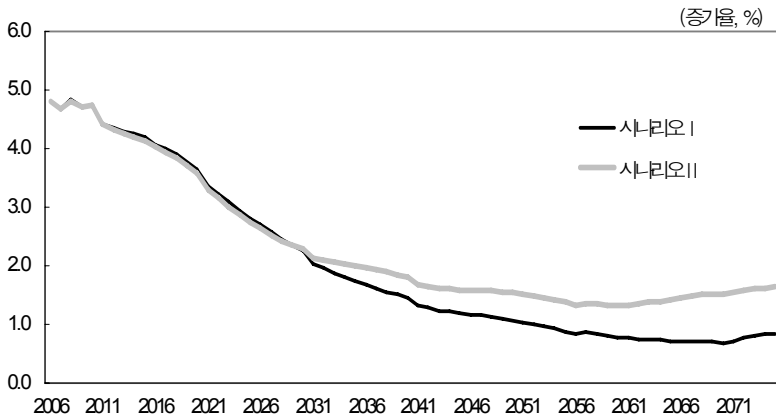
(단위 : 증가율, %)

	GDP	물적자본	취업자수	취업자 일인당 인적자본	TFP
2006~2010	4.8	2.0	.7	.6	1.4
2011~2020	4.0	1.8	.4	.6	1.3
2021~2030	2.7	1.3	-.3	.5	1.2
2031~2040	2.0	.9	-.5	.4	1.2
2041~2050	1.6	.7	-.6	.3	1.2
2051~2060	1.4	.6	-.7	.3	1.2
2061~2075	1.5	.6	-.6	.3	1.2

□ 각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시나리오 I의 경우).

- 자본축적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2006~2010년 기간 중 2.0%에서 점차 하락하여, 고령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2020년대 1.4%, 2040년대 이후 0.6% 이하로 크게 낮아짐.
- 노동공급의 GDP 성장률 기여도도 점차 하락하여 202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반전되며, 2030년 이후 2075년까지는 -0.7~-1.1% 포인트 수준을 유지
 - － 노동공급의 성장 기여도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수준을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인구전망에 기인

[그림 3-5] 시나리오별 실질GDP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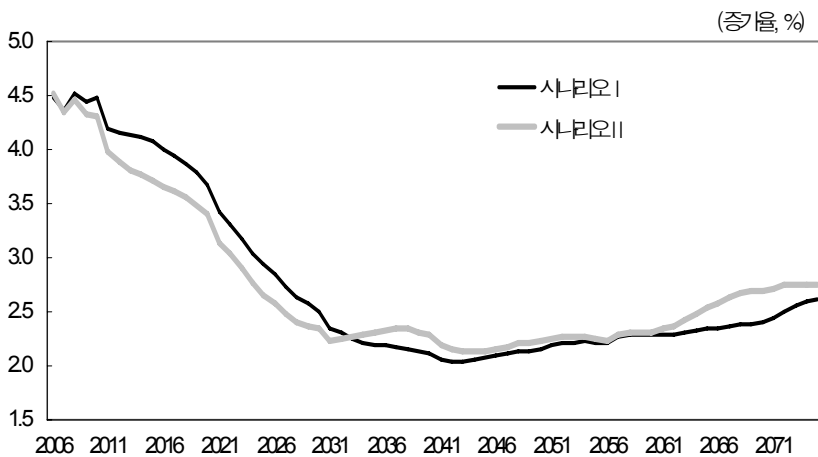


□ 시나리오 I의 경우 인구 일인당 GDP 증가율은 2006~2010년 기간 중 약 4.5%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점차 둔화되어 2040년대 이후에는 2.1~2.4(2.2~2.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일인당 GDP 증가율의 둔화는 주로 취업자 일인당 자본스톡 증가율(기여도)의 둔화 및 고용률(=취업자/총인구) 마이너스 기여도의 확대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음.
 - － 고용률 마이너스 기여도의 확대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에도 불

- 구하고 생산가능연령인구비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함에 따른 것
- 한편 2050년대 이후 일인당 GDP 증가율이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인구전망에 전제된 출산율의 회복에 따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
 - 한편 합계출산율의 빠른 회복을 상정하는 시나리오 II의 경우가 시나리오 I에 비하여 2030년경까지 일인당 GDP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주로 출산율 증가가 생산가능연령인구의 증가 및 저축률 증가로 연결되는 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

[그림 3-6] 시나리오별 일인당 실질GDP 전망 추이



〈표 3-13〉 일인당 실질GDP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 요인별 기여도

(단위 : 증가율, %)

	일인당 GDP	취업자 일인당 물적자본	취업자 /인구	취업자 일인당 인적자본	TFP	취업자 /15-64 인구	15-64인구 /인구
2006~2010	4.5	1.6	.8	.6	1.4	.8	.0
2011~2020	4.0	1.7	.5	.6	1.3	.5	-.1
2021~2030	2.9	1.5	-.3	.5	1.2	.7	-1.1
2031~2040	2.2	1.3	-.7	.4	1.2	.5	-1.2
2041~2050	2.1	1.0	-.4	.3	1.2	.4	-.8
2051~2060	2.2	1.0	-.2	.3	1.2	.3	-.5
2061~2075	2.4	.9	.0	.3	1.2	.1	-.1

〈표 3-14〉 일인당 실질GDP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II: 요인별 기여도

(단위 : 증가율, %)

	일인당 GDP	취업자 일인당 물적자본	취업자 /인구	취업자 일인당 인적자본	TFP	취업자 /15-64 인구	15-64인구 /인구
2006~2010	4.4	1.6	.7	.6	1.4	.8	-.1
2011~2020	3.7	1.6	.2	.6	1.3	.5	-.4
2021~2030	2.7	1.5	-.5	.5	1.2	.5	-1.0
2031~2040	2.3	1.1	-.4	.4	1.2	.5	-.9
2041~2050	2.2	.9	-.3	.3	1.2	.3	-.6
2051~2060	2.3	1.0	-.2	.3	1.2	.1	-.3
2061~2075	2.6	.9	.2	.3	1.2	.0	.2

2.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신규진입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이민정책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력이 진입하지 않는 한,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임(<표 3-15> 참조).

○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38.5세에서 2010년에 39.7세, 2016년경에는 41.2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 OECD(2004)⁷⁾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전 취업자의 약 30% 이상이 50세 이상인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약 40%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

○ 생산가능인구 중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000년 12.2%에서 2020년 23.3%, 2040년 28.9%로 증가하는 반면, 15~29세 청년층은 동 기간 35.4%에서 24.7%와 20.5%로 감소할 전망

—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4명 중 1명, 2040년에는 3명 중 1

7)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Paris, 2004.

명이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될 전망이다 반면, 창의적이고 동
적인 생산인구인 15~29세 연령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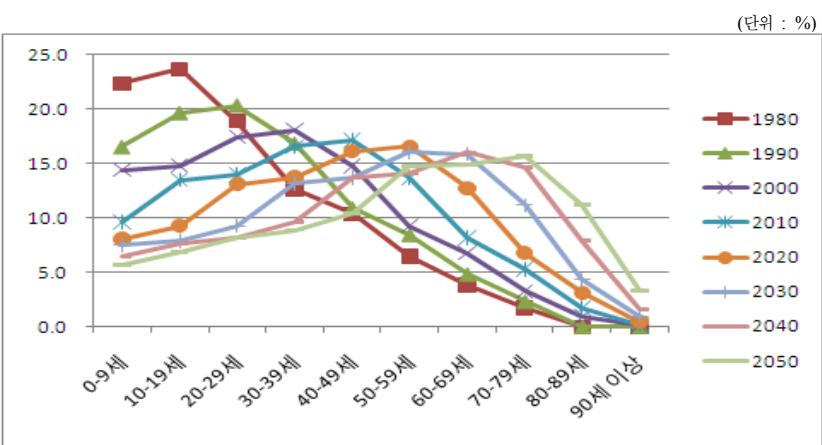
〈표 3-15〉 인구집단별 평균연령 변동전망(2010~2050)

구분	평균연령(세)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2010	38.5	39.7	74.5
2015	40.9	40.9	75.1
2020	43.2	42.3	75.3
2025	45.3	43.1	75.0
2030	47.3	43.6	75.3
2035	49.1	44.0	75.9
2040	51.0	44.1	76.7
2045	52.6	44.1	77.6
2050	53.9	43.9	78.4

자료: 문형표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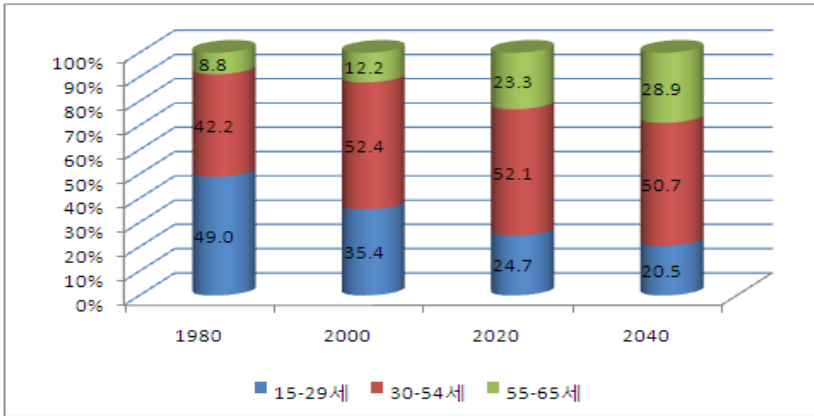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의 고령화는 다른 정책적 개입이 없는 한 노
동생산성의 하락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됨.
- 이미 출생한 인구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나, 향후 노동력고령화
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개입과 추진이 필요

〔그림 3-7〕 인구의 연령 구성 추이 및 장기전망: 1980-2050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8] 생산가능인구의 구성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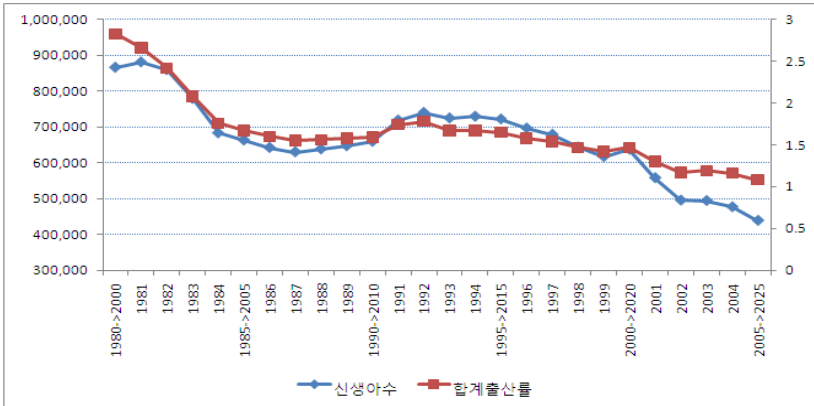
나.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1) 노동력의 양, 즉 규모의 감소와 (2) 노동력의 질, 즉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미래: 저출산의 노동력 감소효과는 20여년 후에 누적적으로 나타남([그림 3-9] 참조).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1.6 수준 대에 접어들은 결과 그 20년 후인 2000년부터 젊은 층 노동력의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002년 이후 1.2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율의 효과는 2020년 이후 경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취업자수는 2008년 약 2,350만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 약 2,48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50년 경에는 총 취업자수가 약 1,700만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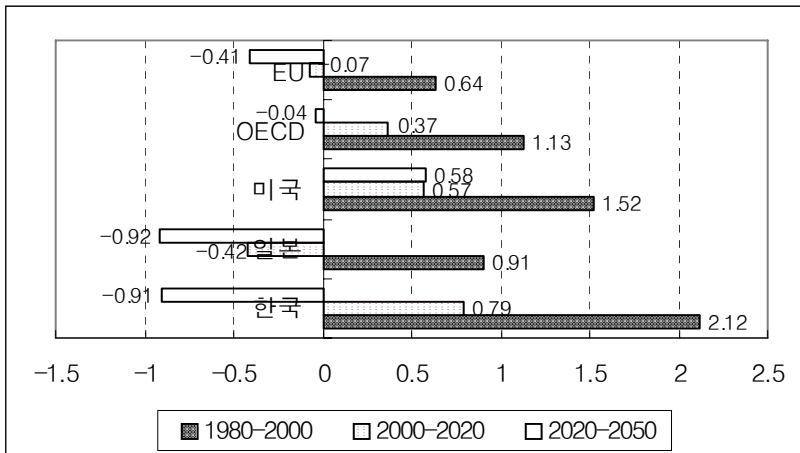
[그림 3-9] 연도별(1980~2005) 신생아수에 따른 (20년 후)노동력 감소전망



자료: 통계청, KOSIS.

- 노동력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경제의 성장률 변화에는 노동력의 증가 혹은 감소 비율이 더 중요하게 작용
 - － OECD에 의하면 향후 20년간 한국의 노동력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으나, 2020~2050년간은 급격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저출산·고령화의 효과가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그림 3-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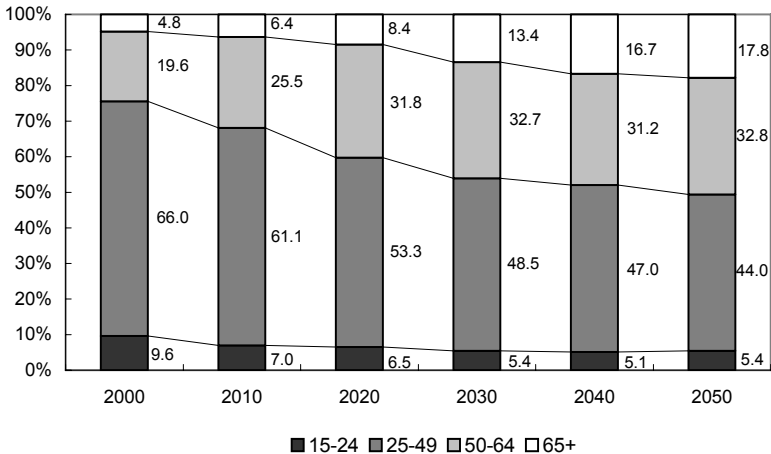
[그림 3-10] 한국과 주요국의 노동력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980-20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인구전망 2000~2050』, 2002.

- 저출산·고령화는 고령층 노동력의 증가와 함께 노동력의 고령화를 수반하게 됨.
 - － OECD(2004)의 전망에 의하면 한국 노동력의 규모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2020년까지 증가할 것이지만 노동력의 연령구성은 다음 20~30년간 지속적으로 노령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5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약 25% 미만인데 비해 2050년에는 그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핵심 노동력인 25~49세 사이의 취업자는 2000년의 66%에서 2050년에는 44%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림 3-11] 참조).
 - 향후 30년 동안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될 나라는 일본이 단연 두드러지지만, 한국도 노르웨이, 독일과 함께 고령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보임.

[그림 3-11] 한국 노동력의 고령화 전망: 2000~20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인구전망 2000~2050』, 2002.

다.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생산성

-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노동력의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공급의 절대수준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KDI(2006)⁸⁾의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통제할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의 증가와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통해 경제의 잠재성장력과 개개인의 복지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높음.
 - 잠재적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1) 자본축적을 통해 자본장비율을 제고하는 것, (2)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3) 여성 노동력의 노동공급을 유도하는 것 등이 있음.

라.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 경제의 선진화와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라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인 바 이는 출산율의 회복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
- 그러나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참여율간에는 미시차원에서는 자연적인 부(-)적인 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나 거시차원에서는 정(+)적인 관계가 관측되고 있음 ([그림 3-12] 참조).
 - 상대적 고출산국가(출산율이 1.6명 이상)들인 북유럽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등)와 프랑스어권국가(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 초저출산국가(출산율 1.3 이하) 유럽국가군. 남유럽국가(이탈리아, 그리

8) 문형표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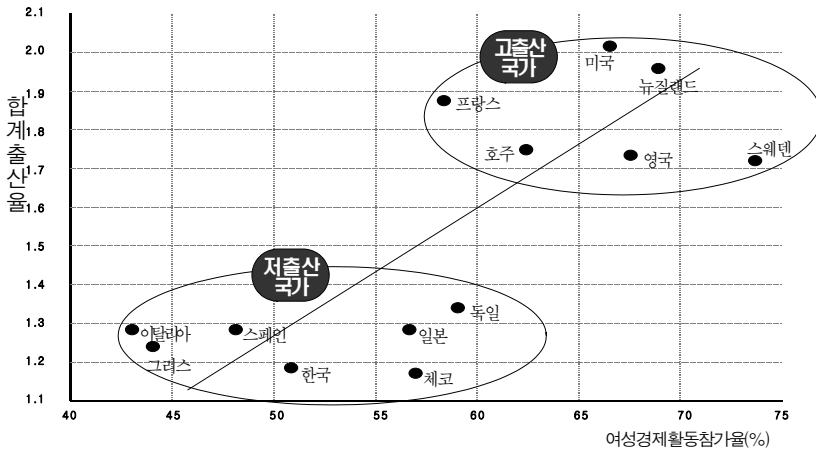
스, 스페인 등)들보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높음.

— 즉,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출산율도 높고 경제활동참여율도 높음.

이는 적절한 정책적 개입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 지속에 친화적인 사회제도와 법 그리고 문화가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

○ 이는 여성의 출산율제고 정책과 경제활동참여율제고 정책이 동시-융합적으로(synchronized policy mix) 같이 가야 됨을 시사

[그림 3-12] 주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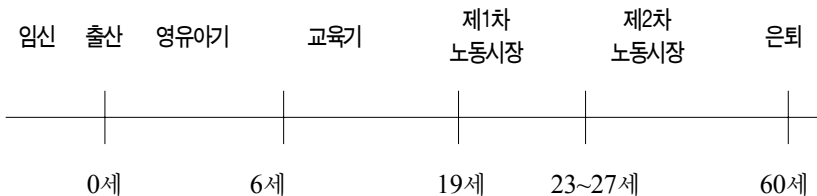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4 출생·사망통계』, 2005 ; OECD, 『OECD Factbook』, 2005

3.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⁹⁾

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활동

□ 생애주기의 구분

- 임신, 출산부터 시작해서 영유아기, 교육기, 노동시장을 거쳐 은퇴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로 구분



□ 각 시기별 관련 효과개관

- 저출산과 관련된 효과로 크게 소비효과, 산출효과, 고용유발효과, 출산모의 노동공급 감소효과 등을 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출산이 줄게 되면 산부인과 등 임신, 출산관련 소비가 줄어, 해당 산업의 산출과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됨. 한편, 출산이 줄면서 엄마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음.

〈표 3-16〉 아동의 시기별 소비, 산출, 고용 효과 개관

시기	소비효과	산출효과	고용효과	
			고용유발	노동공급감소 (출산모)
임신, 출산준비기간 출산(①)	○	○	○	○
영/유아기간(②)	○	○	○	○
교육기간(③)	○	○	○	

9) 본 원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 과제인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김현숙, 우석진, 2009)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시기별 소비활동 구분

○ 출생에서 영유아기 소비활동

〈표 3-17〉 출생에서 영유아기까지 대표적인 소비활동

	관련 재화 및 서비스	내용
임신 전	산전진찰 관련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태아주기에 따른 검사항목 (혈액, 풍진, 간염, 양수천자, 초음파 등)
출산	분만관련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출산 후 신생아	- 각종 예방접종관련 의료서비스 (소아과, 보건소)	생후 월령에 따른 예방접종
	- 건강검진	
	- 신생아 의류	
	- 기저귀 등 신생아 관련 소모품	
영유아기	- 분유, 이유식 등 식료품	소아기의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서비스
	- 소아과 의료서비스	
	- 의류 및 기저귀	
	- 영유아기 장남감 및 서적	
	- 영유아 공적 보육 및 교육서비스	
	- 영유아 기타 교육서비스 (사교육)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 수에 근거하여 시설투입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하여 산정 -영어유치원, 보습학원, 미술학원 등

○ 청소년기 및 청년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공교육 부문, 사교육 부문, 소비지출 부문으로 분류

○ 노동시장참여기간

- 통상적인 소비지출과 추가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에 대해서 분석

○ 은퇴기 이후

- 정부가 고령친화사업 진흥법을 제정하면서 고령친화제품으로 분류한 재화와 서비스를 은퇴기 이후 소비품목으로 설정하여 산출 및 고용효과를 분석

○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 소비지출이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생애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는 산업에 자동차, 금융서비스, 주택소비를 포함시킴

나. 출생에서 영유아기까지의 소비항목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1) 임신, 출산, 영유아기 의료서비스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 산전진찰 및 분만관련 총수요(소비) 및 총산출

- 2008년 잠정 신생아수가 466,000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출산 및 분만관련 소비지출액은 약 8,620억원
 - － 산업연관표의 의료서비스 생산유발효과 1.77을 적용하면, 출산 및 분만관련 생산유발액은 1조 5,286억원 수준으로 신생아 1인당 약 328만원의 산출을 창출
- 한편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7년 0.86으로 출산 및 분만 관련 부가가치액은 약 7,460억원이며 신생아 1인당 160만원으로 산정

□ 산전진찰 및 분만관련 의료서비스로 인한 취업유발인원

- 교육 및 보건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인 21.74명/10억원에 소비지출액인 8,620억원을 곱하면 18,746명이며, 이들은 의료서비스 관련 인력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창출한 고용 유발
-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산부인과 전문의는 5,869명(전체 의사의 9.1%), 산부인과에 종사하는 간호사수는 8,712명, 간호조무사수는 8,883명으로 총 23,464명으로 집계
 - － 전체 산부인과 진료서비스 관련 인력의 64% 수준이 신생아의 탄생으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

〈표 3-18〉 아동 1인당 산전진찰 및 분만 비용

구분	총비용	보험급여비 구성		비 용	
산전진찰	70만원	보험자 부담		14.0만원	(7.6%)
		본인 부담	급여	7.4만원	(4.0%)
			비급여	48.6만원	(26.3%)
분만	115만원	보험자 부담		69.0만원	(37.3%)
		본인 부담		46.0만원	(24.8%)
합계	185만원	-		185.0만원	(100.0%)

자료 :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소아과 진료관련 산출효과

- 2007년 전국 소아과전문의는 대한의사협회 기준으로 4,937명이고, 간호사는 7,755명, 간호조무사는 7,907명, 보건복지가족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수는 95,179명이고 이중 소아과의는 5,272명임.
- 2008년 기준(추계치)으로 만0~5세아 총 인구수는 2,744,597명이므로 영유아 1인당 소아과 의사수는 0.0018명이고 간호사는 0.0028명
- 소아과 진료비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년 5월에 발표한 자료인 의원급 외래진료비를 분석할 경우, 2008년 평균 1개소당 2억 6,400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되었고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원수는 1,998개소이므로 총 진료비 지출은 5274.72억원
- 소아과 진료비 지출에 따른 국민경제 내 총 산출은 약 9,354억원으로, 영유아 1인당 소아진료 관련 외래진료 서비스를 통해 340,820원의 총 산출이 발생하고 부가가치는 152,380원이 창출

□ 소아과 진료관련 고용유발효과

- 총 고용유발효과는 11,460명이며, 소아과 관련 의료진수는 9,211명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보다 다소 적음.

〈표 3-19〉 아동 1인당 분만 및 소아진료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산출 및 최종수요	고용(명)
산전진찰 및 분만	산업 내	185만원	.03
	전산업	328만원	.04
소아과 진료 (연간)	산업 내	192,186원	.003
	전산업	340,820원	.004

(2) 분유 및 이유식 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 분유시장의 산출 및 고용효과

-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의 세 회사는 현재 전체 분유매출액

의 98% 이상 차지¹⁰⁾

- 이들 세 회사를 통한 총 소비액은 3,913억원 수준이고, 분류생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모두 1,124명

〈표 3-20〉 주요 분류회사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

분류회사	분류매출액 (백만원)	분류생산관련 종업원수
남양유업	158,921	410
매일유업	157,383	371
일동후디스	75,000	343

- 2007년 육류 및 낙농품의 국내 생산유발계수값인 2.723185를 이용하여 총 산출효과를 산정하면 1조 656억원 수준

- 분류는 일반적으로 생후 12~18개월까지 먹이고 있으므로 18개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동 1인당 산출액은 1,591,312원(만0세아의 수는 446,738명이고 만1세는 445,796명이므로 18개월 이하 아동의 수는 669,636명으로 추산)

- 산업별 취업계수는 2006년 통합중분류상 육류 및 낙농품은 2.567(10억원 기준)이므로 총 1,004명의 고용을 육류 및 낙농품 내에서 창출. 분류산업 내 고용은 소비지출액과 취업계수를 이용할 경우 1,004명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위 세 개의 분류회사의 분류생산관련 고용자수가 1,124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유사

- 전체 산업에는 약 9,66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분류소비를 통해 아동 1인당 유발하는 총 일자리수는 0.014

□ 이유식 시장의 산출 및 고용효과

- 국내 이유식 시장의 매출액크기는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이 중 90%가 타먹는 이유식이 차지
- 배달식 이유식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시장규

10) 그 외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시밀락과 같은 분류에 대한 소비도 있으나 이는 국내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모는 가장 큰 크레원이 60억원 수준으로 전체 100억원 수준

〈표 3-21〉 이유식 방식과 주요 기업

이유식 방식	기업명	제품명
유기농 타먹는 이유식	남양유업	명품유기농
	매일유업	유기농 맘마밀
	일동후디스	후이스 아기밀 초이스모어
	파스퇴르	파스퇴르유기농장 100
프리즌 드라이 이유식	보령메디앙스	큐피 베이비푸드
	커머스채판(주)	와코도
배달식 이유식	(주) 닥터고아기밥	아기밥
	(주) 허준맘마밥	맘마밥
	(주) 크레원	베베죽
	(주) 푸드케어시스템	eusik
	(주) 아기21	뽀뽀뜨

- 따라서 이유식으로 인한 산출 및 고용효과는 분유시장의 1/2 수준이므로 아동 1인당 산출액은 795,656원
-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한 전체 산업의 고용창출 인원은 4,827명으로 아동 1인당 고용창출은 0.007명

〈표 3-22〉 아동 1인당 분유 및 이유식 소비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분유 (연간)	산업 내	584,347	.002
	전산업	1,591,312	.014
이유식 (연간)	산업 내	287,094	.001
	전산업	795,656	.007

(3) 아동의류·화장품 및 기저귀 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 의류시장 관련 산출 및 고용효과

- 산업연관표 상 의복 및 섬유제품의 생산유발계수는 2.126447이므로 영유아 의류 대표기업(아기방, 이에프이)의 총 산출은 3,862억원 규모
- 고용계수는 8.7831이므로 1,595명인 반면 두 업체의 의류관련 직원수

는 321명(고용계수 6.9515를 이용할 경우 1,263명)으로 매우 작음.

－ 이와 같은 괴리는 대규모 브랜드가 아닌 의류제조 관련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산업연관표 상 섬유 및 의복의 고용계수를 사용하여 아동의류 단독의 고용계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

- 취업유발계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경우 17.2이므로 전체 산업의 고용창출 인원은 3,123명 정도로 만0~2세 아동 1인당 290,134원의 산출효과가 있고¹¹⁾ 일자리는 아동 1인당 0.002개 창출

〈표 3-23〉 영유아 의류 대표기업의 산출 및 고용

아동의류업체	아동의류매출액	직원수
아가방	884억	125명
이에프이	932억	196명

□ 영유아 화장품 관련 산출 및 고용효과

- 유아용 화장품의 최종수요에 따른 국민전체의 총 산출액은 2,861억 원이며, 취업유발계수가 8.5이므로 총 고용인원은 1,275명 수준
- 이를 아동 1인당 (만0~5세)으로 산출해보면 총산출은 1인당 104,240원이고, 고용인원은 0.0005명

□ 기저귀시장 산출 및 고용효과

- 현재 국내 아동용 기저귀시장 규모는 약 4천억원 수준
 - － 유한킴벌리의 하키스가 약 75%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대한펄프가 약 12%, 쌍용 C&B가 5% 정도의 시장점유율
 - － 하키스의 경우 전체 직원 1,700명 중 약 680명, 대한펄프는 전체 496명 중 89명, 쌍용 C&B는 전체 300명 중 약 30명이 기저귀 생산에 종사

11) 아가방과 이에프이가 36개월 정도의 아동수준까지 의류를 생산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만 0~2세 아동 1,331,110명을 기준으로 산정

- 산업연관표 분류 상 펄프 및 종이제품인 기저귀의 생산유발계수는 2.070986으로 다른 산업에 미친 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를 포함할 경우 산업전체로 8,284억원의 생산 창출
- 취업계수는 4.1168로 산정된 1,647명은 실제 기저귀 생산회사의 종업원 수의 약 2배(이는 펄프 및 종이제품 전체의 취업계수를 사용하였기 때문)
 - － 취업유발계수는 12.3이므로 취업계수의 약 3배가 되므로 전체 고용창출은 2,400명 수준
- 일반적으로 24~30개월 정도까지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약 1,112,822명(30개월 이하 아동 수)이 기저귀를 이용하는 대상
 - － 아동 1인당 최종소비지출은 359,800원, 산출은 745,083원

〈표 3-24〉 아동 1인당 의류·화장품·기저귀 소비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아동의류(연간)	산업 내	136,427	.001
	전산업	290,134	.002
아동화장품(연간)	산업 내	54,652	.0002
	전산업	104,240	.0005
아동 기저귀	산업 내	359,800	.0007
	전산업	745,083	.0021

(4)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관련 산출효과와 고용효과

□ 보육시설 서비스의 산출 및 고용효과

-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수(5세 이하)는 2008년 기준으로 총 1,625천명이며, 이는 전체 아동의 59%에 해당
 - － 연령별로 육아지원시설 이용률은 급격하게 높아져, 만5세아의 경우 86%에 이르고 있음.

〈표 3-25〉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구분	전체아동(A)	육아지원시설 이용아동(B)		시설이용률 (B/A)
		보육시설	유치원	
0세	446,738	99,245	-	22%
1세	445,796	160,320	-	36%
2세	438,576	242,324	-	55%
0~2세(소계)	1,331,110	501,889	-	38%
3세	448,625	229,424	99,499	73%
4세	475,449	192,668	184,178	79%
5세	489,413	175,323	246,871	86%
3~5세(소계)	1,413,487	597,415	530,548	80%
0~5세(총계)	2,744,597	1,094,304	530,548	59%
만6세 이상	-	36,198	7,274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보육통계』, 2009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통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와의 관련산업은 표준보육비용(김현숙 외, 2008¹²⁾)과 표준유아교육비용(김현숙 외, 2008¹³⁾)의 연구결과에 따라 구분
 -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용에는 모두 크게 다섯 가지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동 1인당 투입비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총수요 산정
- 영아의 비용은 조세연구원(2005)¹⁴⁾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위의 표준보육비용 항목의 비율에 따라 각각 종사자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분류가 가능
 - 다만 유아의 경우에는 현 보육료 내에 각 항목별 단가투입 비율에 대한 기준도 없고, 표준보육비용과도 큰 괴리

12) 김현숙·서병선,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숭실대학교·보건복지가족부, 2008.

13) 김현숙 외, 『연령별 적정학급규모를 통한 유아의무교육대비 표준교육비 산정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8.

14) 박기백 외,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2005.

〈표 3-26〉 시설규모별 만0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I

(단위: 원)

시설규모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표준보육비용
20	1안	527,000	57,900	32,600	37,000	14,000	668,500
	2안	945,000	57,900	38,500	50,000	20,000	1,111,400
50	1안	596,000	57,100	32,600	37,000	15,700	738,400
	2안	1,056,000	57,100	38,500	48,000	22,700	1,222,300
77	1안	572,000	56,900	29,300	37,000	14,700	709,900
	2안	1,017,000	56,900	38,500	43,000	21,700	1,177,100
97	1안	575,000	56,800	27,800	37,000	14,700	711,300
	2안	1,014,000	56,800	38,500	41,000	21,700	1,172,000
124	1안	570,000	55,800	27,700	37,000	14,700	705,200
	2안	1,008,000	55,800	38,500	40,000	20,700	1,163,000
142	1안	572,000	55,100	26,000	37,000	14,700	704,800
	2안	1,008,000	55,100	38,500	39,000	20,700	1,161,300
169	1안	565,000	54,100	25,400	37,000	14,700	696,200
	2안	998,000	54,100	38,500	38,000	20,700	1,149,300

- 만0~5세 전체 아동이 1년간 보육시설에 지출하는 최종소비액(정부지원액 포함)은 약 4조2,660억원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1인당 3,880,414원, 그리고 만0~5세 전체아동 평균 1,554,327원으로 산정
- 항목별 산출효과는 관련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하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 1인당 6,224,311원, 전체 아동 1인당 2,393,115원

〈표 3-27〉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관련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산업	생산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교육서비스	1.37	20.2
음식료품: 육류 및 낙농품,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기타식료품, 음료품	2.02	24.7
펄프 및 종이제품	2.07	12.3
컴퓨터 및 사무기기	1.42	8.3
가정용 전기기기	2.45	8.3
가구	2.31	16.4
기타제조업	2.04	16.4
건축건설	2.07	16.6
통신	1.88	9.7

- 보육시설 종사자수는 2008년 연말 184,902명이고, 2007년 기준으로 교육 및 서비스의 취업계수는 19.7259, 취업유발계수는 27.6

- 두 계수 간의 비율인 1.4를 이용하면 전체 고용창출인원은 258,863명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1인당 당 0.235명 및 전체 영유아 1인당 0.09명으로 산정

〈표 3-28〉 보육시설 종사자수(2008.12.31)

(단위: 명)

구 분		계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취사부
전 국	총 계	184,902	33,499	139,060	1,053	475	10,815
	국공립	16,821	1,826	12,398	308	95	2,194
	법인	15,547	1,458	11,583	481	278	1,747
	민간	법인외	7,206	969	5,255	60	890
		민간개인	87,057	13,306	68,729	183	4,772
	부모협동		46,723	13,251	32,931	21	517
	가정		8,503	2,339	5,823	-	341
	직장		3,045	350	2,341	-	35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보육통계.

□ 유치원 서비스의 산출 및 고용효과

- 김현숙 외(2008)¹⁵⁾의 사립유치원 투입비용결과를 이용하여 사립유치원 평균규모인 5학급의 표준교육비를 활용하여 산정

〈표 3-29〉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용

(단위: 원)

시설규모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표준보육비
2학급 (55)	1안	165,300	38,100	30,800	21,000	14,700	269,900
	2안	165,300	47,800	44,500	29,900	19,700	307,200
3학급 (80)	1안	166,500	35,500	29,500	19,900	14,700	266,100
	2안	166,500	44,500	43,900	28,300	20,600	303,800
5학급 (135)	1안	147,500	33,000	28,400	18,000	13,700	240,600
	2안	147,500	45,900	44,100	25,800	19,600	282,900
6학급 (160)	1안	164,100	32,000	28,100	18,200	13,900	256,300
	2안	164,100	43,900	43,900	27,600	18,200	297,700
7학급 (190)	1안	151,800	30,800	27,400	17,000	12,500	239,500
	2안	151,800	45,400	42,200	24,300	17,900	281,600
9학급 (235)	1안	133,700	28,800	27,700	17,000	12,500	219,700
	2안	133,700	45,200	42,700	24,200	17,900	263,700

15) 전계서

- 월 240,600원을 기준으로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산정하면 유치원 이용아동이 창출하는 최종소비지출액은 약 1조 5,318억원이며, 각 관련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총산출액은 2조 1,105억원
 - － 유치원 이용 아동 1인당 산출액은 3,977,900원, 만3~5세 전체아동 1인당 평균 산출액은 1,493,116원
- 2008년 유치원 관련 교직원 수는 41,564명으로 취업유발인원을 구하기 위해 1.4를 곱하면 58,190명
 - － 유치원이용 아동 1인당 0.11명, 만3~5세 전체아동 1인당 0.04명
- 따라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고용효과를 합할 경우, 전 산업에 0.13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총 산업 내 산출액은 영유아 1인당 3,986,232원

〈표 3-30〉 아동 1인당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보육시설	산업 내	1,554,327원	.07
	전산업	2,493,116원	.09
유치원	산업 내	1,083,703원	.03
	전산업	1,493,116원	.04

□ 영유아 출판 및 문화서비스의 산출 및 고용효과

-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전체 발간된 어린이책 서적은 7,146종 23,267,029권이며 매출액은 약 4,269억원
 - － 출판 및 문화서비스의 생산유발계수는 2007년 기준 2.13444이므로 산출효과는 연간 9,111억원 규모이고 아동 1인당 331,561원
- 고용효과는 취업계수가 8.6057이므로 고용창출은 3,673명 수준
- 취업유발계수는 17.1로 총고용유발효과 7,280명, 아동 1인당 0.003명

□ 영유아 완구시장의 산출 및 고용효과

- 영유아 완구(장난감)시장은 약 6,000억원 정도의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 국내기업의 생산액은 약 4,000억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

— 이 중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완구류의 시장점유율은 13~15%를 점유하여 국내시장규모는 약 600억원 규모

- 완구류는 장난감 및 오락용품으로 구분되어 산업연관표의 중분류 상 기타제조업에 포함되어 2007년 기준 생산유발계수 2.049596을 적용하면, 1,230억의 산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기타제조업의 취업계수는 8.3055이므로 완구류의 최종소비를 고려할 때 약 500명의 고용이 완구산업 내에 창출되고, 취업유발계수가 16.4이므로 산업 전체로는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표 3-31〉 아동 1인당 서적 및 장난감 이용에 따른 산출효과 및 고용효과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영유아서적	산업 내	155,532	.001
	전산업	331,561	.003
영유아 장난감	산업 내	21,860	.0002
	전산업	44,815	.0004

□ 이상 출산에서 영유아기 아동 1인당 산출 및 고용창출 효과(평균개념)는 35,958,618원에 0.203으로 추정

〈표 3-32〉 출산아동 1인당 영유아기의 산출 및 고용창출 효과

항목	산출	고용	기간
산전진찰 및 분만	3,280,000원	.04	1회
소아과 진료 (6년 총액)	2,204,563원	.004	만0~5세
분유	2,546,099원	.014	18개월
이유식	1,273,050원	.007	18개월
의류	896,776원	.002	만0~2세
화장품	674,267원	.0005	만0~5세
기저귀	1,907,748원	.0021	1~30개월
보육시설	16,126,496원	.09	만0~5세
유치원	4,615,072원	.04	만3~5세
장난감	289,881원	.0004	만0~5세
서적	2,144,666원	.003	만0~9세
계	35,958,618원	.203	

주: 매년 물가상승률 3% 가정

다. 초등교육시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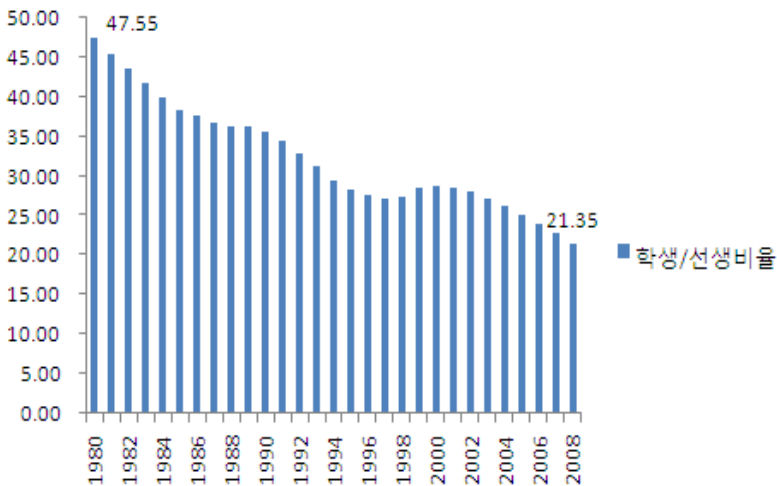
□ 초등학교 교육기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산업은 학교(초등학교)와 사교육 시장(보습, 피아노, 미술, 태권도, 전산 등)으로 구분

(1) 공교육(초등학교)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 200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5,813개교, 학생수는 360만명 수준, 교원 수는 17만2천명(행정직원 등 일반직원 약 2만5천명 포함시 약 19만 7천명), 교원 1명당 학생 비율은 21.35명

[그림 3-13] 초등학교 학생 대 교사 비율

(단위 :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초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공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출예산 혹은 결산으로 시장규모 파악 가능
 - 2008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예산은 약 4조원

〈표 3-33〉 2008년 초등학교 관련 고용 및 세출 예산 현황

구분	값
초등학교 세출(2008년도 세출예산, 원)	3,998,132,135,000
교원수(명)	172,000
직원수(명)	25,502
총고용(명)	197,502
총고용중 교원비중	0.87
학생수(명)	3,672,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2008.

-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취업계수, 고용유발/취업유발계수와 위의 예산 금액을 이용하여 고용효과, 취업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음.
-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수가 3백 6십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학생 1명당 고용효과로 전환을 할 수 있음.

〈표 3-34〉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명)
고용유발효과	249,036
취업유발효과	288,100

- 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가 0.060명이고 취업유발효과는 0.069
- 학생 약 14명이 있으면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지는 셈
- 22명이 교실당 정원이라고 하면, 교사 1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0.32개의 직접/간접 효과로 인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셈

〈표 3-35〉 초등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유발효과(명)
학생 1명당 고용유발효과	.060
학생 1명당 취업유발효과	.069

(2) 초등학교 사교육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 사교육 시장의 규모에 대한 추정은 매우 어려움

○ 사교육 시장의 형태가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특기적성 학원부터, 국·영·수 위주의 보습학원, 개별과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음. 그러나 각 학원별로 집계가 잘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과외의 경우 관공서에 신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음.

○ 이런 경우에는 공급측 자료보다는 지출하는 쪽인 가계, 즉 사용자측의 정보가 시장규모를 밝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사교육시장의 고용효과를 추정함.

○ 통계청의 “2008년 사교육시장 추정”의 경우, 통계청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교육비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¹⁶⁾

— 조사대상을 학교급·지역규모별 층화 후 학년별로 할당하여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 규모(추정)의 신뢰성 제고

• 전국 초·중·고 273개 학교의 학부모 약 34,000명

—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원, 개인 및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 강의 등의 수강료를 의미하며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취미·교양)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 “(도시)가계조사”의 경우¹⁷⁾ 사교육비 항목이 사교육비 조사만큼 자세하지는 않지만 좀 더 많은 인구/가구/소비/소득 특성이 고려되어 있어,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16) 통계청, 『2008년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2009.

17) 통계청, 『가계조사』, 2008.

- 여기서는 먼저 사교육비 조사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사교육비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투입-산출분석을 통해서 평균효과를 분석하고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해서는 한계효과를 추정하였음.
- 통계청 2008년도 추정에 의하면 전체 사교육비 시장의 규모는 20조 9천억원으로 21조에 육박
-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10조4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2천원,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27만6천원

〈표 3-36〉 사교육비 규모

	총 사교육비 (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학생 1인당 참여자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전 체	200,400	209,095	22.2	23.3	28.8	31.0
초등학교	102,098	104,307	22.7	24.2	25.6	27.6
중학교	56,120	58,135	23.4	24.1	31.4	33.2
고등학교	42,181	46,652	19.7	20.6	35.9	38.6
- 일반고	38,655	42,973	24.0	24.9	38.8	41.1
- 전문고	3,526	3,679	6.7	6.9	19.8	22.7

자료: 통계청, 『2008년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2009.

- 사교육 참여율은 87.9%로 2007년 88.8%에 비해 0.9%p 감소하였으며, 초등학교가 가장 높음.
- 주당 사교육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약 9시간 정도임.

〈표 3-37〉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사교육 참여율 (%)		1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 (시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전 체	77.0	75.1	7.8	7.6
초등학교	88.8	87.9	8.9	8.9
중학교	74.6	72.5	8.9	8.4
고등학교	55.0	53.4	4.5	4.4
- 일반고	62.0	60.5	5.2	5.1
- 전문고	33.7	30.3	2.5	2.2

자료: 통계청, 『2008년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2009.

□ 사교육 지출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교과에 월 17만 4천원, 특히 50% 이상이 영어에 지출되고 있고, 6만 8천원이 기타 예체능, 취미에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초등학생도 많은 부분을 예체능이 아니라 일반교과 공부에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

〈표 3-38〉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2007년	2008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문고
사교육비	22.2	23.3	24.2	24.1	20.6	24.9	6.9
- 일반교과	17.8	18.8	17.4	22.6	17.6	21.7	4.2
국 어	2.2	2.3	2.1	2.8	2.0	2.5	0.4
영 어	6.8	7.6	8.0	8.2	6.2	7.7	1.6
수 학	5.7	6.2	4.6	7.9	7.7	9.5	1.7
사회, 과학	1.6	1.5	1.1	2.8	1.0	1.2	0.1
- 예체능, 취미	4.3	4.4	6.8	1.5	2.8	3.0	2.0
참 여 율	77.0	75.1	87.9	72.5	53.4	60.5	30.3
- 일반교과	68.4	66.4	76.2	68.8	45.3	54.1	16.6
국 어	39.3	36.1	44.9	40.1	15.1	18.5	4.3
영 어	55.6	55.6	62.7	64.1	33.0	39.7	11.2
수 학	58.6	56.5	62.6	64.2	36.6	44.4	11.2
사회, 과학	25.6	22.8	23.0	35.3	9.1	11.4	1.6
- 예체능, 취미	37.0	35.3	60.4	13.5	10.6	10.2	11.8

자료: 통계청, 2008년 사교육비조사.

□ 위와 같은 사교육비 구조하에서 다시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서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할 수 있음.

○ 10조 규모의 초등학교 사교육비 시장이 창출하는 직접고용량은 18만 6천명임.

— 이를 유발효과까지 고려하게 되면, 고용유발효과가 20만 여명, 취업유발효과가 24만명임.

— 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는 0.057명, 학생 1인당 취업유발효과는 0.066명임.

- 고용유발효과가 0.059, 취업유발효과가 0.069로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다소 큼을 알 수 있음.
- 조정전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훨씬 작음.

〈표 3-39〉 초등학교 사교육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구분	값(원, 명)
초등학교 사교육비(원)	10,209,800,000,000
총고용량	186,839
고용유발효과	208,280
취업유발효과	240,951
학생수	3,672,000
학생 1인당 고용유발효과	0.057
학생 1인당 취업유발효과	0.066

라. 전체 학력의 산출 및 고용효과

- 초등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 학령기별로 공교육 부문, 사교육 부문, 소비지출 부문으로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고용효과, 취업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계산
 - 소비지출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조사(2008)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소비지출의 세부문은 가계조사 항목과 산업연관표의 분류를 매칭하는 방법으로 분류
- 교육부문의 효과는 자녀 1명이 창출하는 일자리수가 약 0.56개이고 생산효과는 연간 3천 2백만원으로 추정
 - 일자리 창출에는 공교육의 효과가 사교육의 효과보다 큼
 - 일자리 창출 및 생산효과가 가장 큰 시기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표 3-40〉 학령기 교육의 일자리 및 생산효과

		1인당 일자리	1인당 생산효과(원)
초등학교	공교육	.069	3,672,000
	사교육	.066	3,799,819
중학교	공교육	.094	5,447,368
	사교육	.067	3,896,447
고등학교	공교육	.122	7,083,070
	사교육	.058	3,343,243
대학이상	공교육	.086	4,993,287
계		.562	32,235,234

-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약 0.16개인 것으로 추정
- 초등학교가 약 0.03, 중학교가 약 0.02, 고등학교가 0.04, 대학생이 0.06으로 연령에 따라 U-자형 모형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여줌.

〈표 3-41〉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가계조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육류및육가공품	.00030	.00041	.00037	.00037	.00145
낙농품	.00020	.00015	.00008	.00004	.00047
수산물	.00023	.00007	.00027	.00063	.00120
곡물	.00005	.00009	.00005	.00008	.00027
빵과자및국수류	.00039	.00041	.00037	.00039	.00156
유지및조미료	-.00006	.00002	.00015	.00012	.00023
과실및채소가공품	.00055	.00039	.00062	.00122	.00278
차및음료	.00006	.00004	.00004	.00007	.00021
편직제의복신발	.00261	.00285	.00299	.00489	.01334
종이	.00004	.00003	.00002	.00001	.00010
의약품화장품	-.00003	-.00002	.00016	.00033	.00044
가정용전기기기	.00008	-.00003	-.00006	.00002	.00001
자동차	.00009	-.00015	.00036	.00048	.00078
외식	.01657	.01509	.02200	.02721	.08087
교통	.00794	.00318	.01296	.02451	.04859
교양오락서비스	.00111	-.00018	.00014	.00416	.00523
계	.03011	.02235	.04053	.06453	.15752

-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생산효과는 약 2천 27만원으로 추정
- 초등학교 시기에 약 4백만원, 중학교는 3백만원, 고등학교는 5백 2

십만원, 대학교는 약 8백 십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42〉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생산효과

(단위: 원)

가계조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성인	계
육류및육가공품	319,835	431,572	396,954	394,348	581,094	2,123,803
낙농품	208,965	157,778	87,994	43,981	263,156	761,874
수산물	47,427	15,384	56,197	131,457	343,300	593,766
곡물	59,707	115,116	66,072	103,516	321,186	665,596
빵과자및국수류	108,557	113,921	102,615	108,985	142,727	576,806
유지및조미료	-16,806	5,336	40,995	33,491	194,502	257,518
과실및채소가공품	152,147	108,683	172,040	339,396	673,804	1,446,070
차및음료	62,406	42,724	49,098	78,923	128,869	362,019
편직제의복신발	645,101	706,157	740,554	1,209,217	1,146,084	4,447,113
종이	17,304	13,354	11,894	6,317	4,753	53,621
의약및화장품	-22,415	-13,670	113,663	230,474	547,359	855,411
가정용전기기기	70,440	-25,583	-58,442	18,674	267,247	272,336
자동차	107,717	-177,442	419,684	551,679	665,116	1,566,753
외식	1,432,721	1,304,261	1,901,646	2,352,468	2,250,981	9,242,077
교통	636,398	254,987	1,038,597	1,964,212	2,067,821	5,962,015
교양오락서비스	144,999	-22,886	18,079	542,801	422,415	1,105,409
계	3,974,503	3,029,690	5,157,639	8,109,940	10,020,415	30,292,188

마. 노동시장참여기간

- 위에서 분류한 통상적인 소비지출과 추가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에 대해서 분석
- 학령기 이후 노동시장 참여기간의 소비지출을 통해서 성인 1명당 약 0.067명의 일자리와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음.

〈표 3-43〉 노동시장참여기간 소비지출의 일자리창출 및 생산효과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노동시장참여기 일반 소비	전산업	10,020,415	.067

- 결혼관련 산업의 경우 성인 1명당 약 0.02명의 일자리 창출과 1백 25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표 3-44〉 결혼산업의 일자리창출 및 생산효과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결혼서비스	산업내	606,500	.015
	전산업	1,252,113	.019

바. 은퇴기 이후

- 정부가 고령친화사업 진흥법을 제정하면서 고령친화제품으로 분류한 재화와 서비스를 은퇴기 이후 소비품목으로 설정하여 산출 및 고용효과를 분석
- 노인 1명당 약 0.13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1천 4백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표 3-45> 참조)

〈표 3-45〉 고령친화사업의 생산 및 고용

부문	노인 1인당 산출(원)	노인 1인당 취업인원	노인1인당 취업유발인원
의료서비스	7384146.759	.044275568	.068659919
요양산업	214364.237	.001285334	.001993220
기기산업	588870.629	.001249024	.003479140
정보산업	12754.267	3.50532E-05	7.99979E-05
여가산업	1321983.137	.014811631	.022962372
금융산업	1471041.956	.005160795	.009173542
주택산업	15867.343	6.94671E-06	2.54609E-05
한방산업	478711.020	.001351962	.002801337
농업	91645.517	.002135129	.002582179
의료비 제외	4195238.105	.026035876	.043097248
교통	350328.505	.002629665	.003316559
식품	461493.681	.000845264	.005240252
의약품	1272420.476	.002136611	.006237917
장묘산업	584180.583	.003502765	.005431879
의류	278664.987	.000728936	.001642525
교육산업	32587.403	.000465883	.000539310
기타 합	2979675.635	.010309123	.022408442
전체 합	14,559,060.000	.080000000	.130000000

사.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 소비지출이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생애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는 산업에 자동차, 금융서비스, 주택소비를 포함시킴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약 0.005개, 금융은 약 0.02개, 주택은 약 0.04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음
- 한편, 생산효과의 경우 자동차와 금융이 1백 3십만원, 주택건설이 약 1백 6십만원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

〈표 3-46〉 자동차, 금융, 주택 산업의 1인당 생산 및 고용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명)
자동차 산업	산업 내	483,892	.00118
	전산업	1,314,506	.00520
금융 및 보험	산업 내	715,488	.01200
	전산업	1,294,757	.02000
주택건설	산업 내	809,115	.00072
	전산업	1,657,599	.04000

아. 종합

- 이상에서 추정된 효과를 시기별, 산업특성별로 집계하여 총효과를 산출
- 일자리창출 효과의 경우 약 1.15개의 일자리가 자녀 1명의 출산을 통해 생애주기동안 창출
 - 효과의 크기 면에서 보면 단기와 중기의 효과가 성인 이후의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됨

〈표 3-47〉 전체 산업에 미친 고용효과

시기	의료	공교육	사교육	식품 소비	소비 일반	결혼 서비스	자동차	금융	주택	음의 효과	총계
출생~ 영유아기	.0455	.097		.019	.006						.1675
초등학교		.069	.066		.030						.1650
중학교		.094	.067		.022						.1830
고등학교		.122	.058		.040						.2200
대학교		.085			.064						.1490
노동시기					.067	.019				-.019	.0670
은퇴기	.0700				.060						.1300
시기무관							.0052	.02	.04		.0652
총계	.1155	.467	.191	.019	.289	.019	.0052	.02	.04		1.1467

□ 한편 산출효과와 경우 자녀 1명이 생애주기 동안 약 12억 2천만원의 효과를 가져옴

〈표 3-48〉 전체산업에 미친 산출효과

(단위 : 천원)

시기	의료	공교육	사교육	식품 소비	소비 일반	결혼 서비스	자동차	금융	주택	음의 효과	총계
출생~ 영유아기	9,840	25,523		3,580	5,305						44,248
초등학교		27,260	41,947		23,847						93,054
중학교		16,342	11,689		9,089						37,121
고등학교		21,249	10,030		15,473						46,752
대학교		19,973			32,440						52,413
노동시기					400,817	12,521				-20,176	393,161
은퇴기	110,762				106,124						216,886
부분합											883,635
시기무관							105,160	103,581	132,608		341,349
총계	120,602	110,348	63,666	3,580	593,094	12,521	105,160	103,581	132,608		1,224,984

자. 정책 방향

□ 한 개인이 출생으로부터 영유아기, 교육기, 노동시장 참여시기, 은퇴이후 등 약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자리는 1.15명, 전체 생산유발액

은 12억2천만원을 창출

- 영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거의 1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평균할 경우 출생 후 20년 동안에 걸쳐 매년 약 0.05명의 일자리를 창출
- 연구결과로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단기적으로도 이 미 일자리수가 줄어들고 생산이 위축되는 것을 확인
-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술과 산업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한 일자리 수와 생산증가의 효과가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나 적어도 2008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한 개인이 생애주기에 걸쳐 창출하는 일자리 수와 생산액은 출생이 발생한 시점부터 그리 길지 않은 기간내에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저출산 문제가 미래 경제활력만이 아니라 단기간 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
-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정책을 입안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됨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가.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접적인 증가

- 우리나라에서 향후 고령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지출소요가 증가하는 지출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
 - 기초노령연금 지출
 - 건강보험 지출, 장기요양제도 지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 지출
- 기초노령연금 등 기타 노인복지 지출
- 일반적으로 교육, 보육 및 가족지원 관련 지출 중 일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감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을 수 있음.
 - 취학연령의 감소에 따라 교육지출에서 감소 요인이 있지만, 취학연령 감소와 비례하여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최준욱 외, 2005b¹⁸⁾).
 - 보육 관련 제도는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대상자가 축소된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출 감소폭이 크지는 않을 것임.
-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및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민연금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현재 1% 미만에서 2050년에는 6%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기타 공적연금 지출도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타 공적연금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현재 1% 미만에서 2050년에는 2%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기초노령연금 지출도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초노령연금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현재 0.4% 수준에서 2050년에는 3%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건강보험 지출은 정확한 장기전망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건강보험지출도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고령자의 일인당 건강보험지출액이 다른 연령집단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18) 최준욱 외,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2005.

- 건강보험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현재 약 2.87%에서 2050년에는 4.6~5.5%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2050년에 4.6%가 되는 전망치는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이고, 기타 지출 증가요인도 보수적으로 설정한 경우이며, 이는 일종의 하한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음.
-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2009년에 GDP의 0.27% 수준에서 2050년에는 GDP의 0.8%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지출전망과 관련하여 대상자 및 일인당 지출의 증가율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있으며, 위 전망치는 보수적인 가정에 기초한 전망치임.
 - 관련제도의 일인당 지출 증가율 및 적용대상자의 확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확한 지출 전망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고령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의 비율이 고령층이 비고령층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임.
 - 미래의 노인빈곤율 전망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존 연구가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를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어려움.
 - 각 연령대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 확률이 향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대상자는 최근에 전 국민 중 3.3% 수준에서 2030년에는 전 국민의 4.7%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현재 0.25%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0.4%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의료급여 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지출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의료급여 지출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에서와 같이 고령화에 따라 대상자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 건강보험처럼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인당 평균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확한 전망은 어렵지만, 몇 가지 단순한 가정 하에서 지출을 전망하여 보면,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현재 0.28%에서 2050년에는 0.6%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나. 고령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 일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근로소득세 수입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은 정확하지 않거나 큰 의미가 없음.
 -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근로소득세 수입의 절대금액이 아니라, 세수의 GDP 대비 비중인데, 근로소득에 대한 평균유효세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GDP 대비 세수 비중의 하락은 GDP 대비 근로소득의 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국한됨.
 - 그러나 OECD의 National Accounts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면, 고령화가 GDP 중 피용자 보수의 비율을 변화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음.
 - 우리나라는 GDP 대비 피용자 보수의 비중이 아직 선진국보다 낮으며, 향후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에 근로소득세 수입의 GDP 대비 비중이 하락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 고령화로 인해 일부 분야의 재정수입은 감소하기도 하지만, 재정수입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분도 있음.
 - 재정수입 중에서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연금기금의 확대에 따른 자산소득세 수입의 상대적 감소, 의료지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의 감소 등임.

- 개별소비세, 재산세 수입도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효과를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현재가 연금과세체계를 EET 방식으로 전환한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향후 연금소득세 수입이 발생하면서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음.
- 향후 건강보험료, 공적연금 기여금, 퇴직연금 및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개인연금 기여금 등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과표가 감소할 수 있으나, 이는 동시에 미래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고령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고령화에 따라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요인과 증가하는 요인 중 감소요인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중이 대폭 하락하는 정도로 두 요인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 재정수지와 조세부담의 증가

- 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 소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입과 관련된 정책 변화 및 다른 분야의 지출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적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제외한 재정에서의 적자 요인은 2050년에는 현재보다 GDP의 약 5% 정도로 확대될 수 있음.
 - 이는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전망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고, 중앙정부 지출과 지방정부 지출은 구분하지 않은 것임.
 - 연금, 건강보험 지출, 장기요양 관련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전체 지출이 아닌 국고지원분만을 포함한 것인데, 이는 이러한 수치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부담 인상 폭 산정의 기준이 되

기 때문임.

□ 다른 분야의 지출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50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현재보다 약 5%p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향후 취학연령대 인구감소로 인해 교육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 재정수지 균형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 인상폭은 4% 정도까지 축소될 수도 있음.

○ 경제 분야 등 기타 분야의 지출이 더 감축될 수 있다면, 재정수지 균형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 인상폭은 그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음.

○ 반면 각종 복지지출 등이 증가한다면, 재정수지 균형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 인상폭은 그보다 더 커질 수도 있음.

○ 이는 장기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산출된 것이며, 2009년의 재정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달성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것임.

○ 2009년의 실제 재정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2050년까지는 조세부담률 상향조정 및 지출감축에 필요한 정도는 GDP의 10% 정도가 될 수도 있음.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제도 재정이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는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수입이 GDP의 현재보다 약 1.8% 이상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건강보험료 수입은 1.4% 정도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현재 건강보험료 수입이 GDP 대비 2.15%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건강보험료율은 현재보다 약 60% 정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됨.

○ 이는 건강보험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이며 기타 가정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추정된 것이며, 실제 인상폭은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공적연금 기여금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2050년에 일반 재정,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등이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이 현재보다 6~7%p 이상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임.

- 물론 이는 고령화로 인한 부담을 추정하기 위하여 2009년의 재정수지를 0이 되도록 설정하고, 이후 다른 분야의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수치이며,
- 기타 복지지출의 확대 정도, 다른 분야 지출의 감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함.
- 고령화로 인해 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재정수지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세부담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정도는 위에 제시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음.

- 현재의 공적연금도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적연금 기여금 요율을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국민부담률 증가폭은 위에 제시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음.
- 국민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전후부터는 당년도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고, 2040년대 중반부터는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구조로 변화되어,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전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 조세부담(국민부담)의 인상 정도

- 향후 지출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조세부담(국민부담) 상향 조정폭의 정확한 전망은 어렵지만
- 대략적으로 보면, 조세부담률은 2050년까지 현재보다 약 4~5%p, 혹은 20~25% 정도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부담률도 2050년까지는 현재보다 약 6~7%p, 혹은 22~26% 내외 정도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소득이 상승하고 물가가 인상될 뿐 아니라, 인구수 자체가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조세부담(국민부담)을 일인당 금액으로 산출하여 증가 정도를 추정하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인구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일인

당 조세부담을 2008년의 소득수준 및 실제 조세부담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일인당 조세부담은 2050년에는 현재보다 85~106만원, 일인당 국민부담은 2050년에는 현재보다 130~150만 원 정도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라.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지출 증가

- 현재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는데, 그 이유도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고령화의 진전도가 선진국보다 덜하기 때문임.
 - 고령화의 진전도가 낮다는 것은 복지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지출이나 의료지출이 작다는 것을 의미함.
 - 뿐만 아니라 고령화의 진전도는 복지제도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복지제도가 충분히 정착된 상태는 아님.
-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복지제도를 변화시켜 지출소요를 증가시킴.
 -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 관련 복지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정치적 환경을 변화시키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
 -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변화와 결합되어, 노인복지에 있어 국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될 것임.
 -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확대되지만, 동시에 여성노동력 활용의 필요성도 커지므로,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족 내에서 흡수하기 힘든 구조로 변화되어, 장기요양 등 노인부양 관련 부분에서 공적인 복지제도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음.
 - 저출산 대응, 여성노동력 활용 등을 위해 보육에 대한 지출은 이미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보육 외의 가족복지 지출도 증가할 수 있음.

- 고령화로 인한 변화요인은 기타 경제구조의 변화요인과 결합되어, 향후 노동시장이나 소득보전과 관련된 복지지출 소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근로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인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짐.
 - 불완전 근로상태에 있는 인력에 대한 소득지원 및 재교육 등도 중요하며, 이에 따라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고령자의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예 :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실업급여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제한된 근로인구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ALMP 지출의 확대 필요성이 커짐.
-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만을 반영하면, 향후 복지지출 소요를 과소추정하게 될 수 있음.

마. 정책대응과 재정부담

- 경제성장률의 제고는 고령화로 인한 부담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성장률이 높아지면 연금지출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경제성장률의 상승이 국민연금지출의 GDP 대비 비중을 낮추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 기존 추이를 보면 의료비의 소득탄력성은 1이 넘는데, 이는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 공적의료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성장률 제고를 통해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함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복지제도가 단순한 최저수준 보장이 아닌 상대적 재분배도 고려하기 때문임.

- 그리고 경제성장률 제고는 고령화에 따른 대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경제정책 방향이지만, 실제로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큼.
- 기존의 연구 등을 참조할 때, 해외투자의 확대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현저하게 줄여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외국인력 유입을 허용하는 것에 따른 득이 있지만, 그것이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움.
 - 최준욱 외(2005a)¹⁹⁾는 고령화 자체를 상당히 완화시키고자 한다면, 국내로 유입되어야 하는 외국인의 수가 비현실적으로 크다는 것, 즉 상당한 정도의 외국 인력을 유입이 있더라도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외국인력 유입이 있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건강보험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추가인력 유입은 연금재정 문제를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외국인력 유입은 노인에 대한 지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아니므로, 재정부담 증가 억제에 있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효과성이 낮을 수 있음.
-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는 고령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으나, 실현 가능한 정도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음.
 - 현재 노인으로 간주되는 연령대 인구의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근로시장 참여율이 높게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 불확실성이 큼.
 - 향후 변화되는 경제구조 및 사회제도에서 고령인구가 생산 등 경제

19) 최준욱 외, 『재정 금융 분야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2005.

활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

- 출산율이 높아지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더 커지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아짐.
 - 출산율이 높아지면, 일정기간 동안은 영유아 의료비 및 보육비용 등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오히려 더 커짐.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년부양비가 낮게 유지되면서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작아짐.
 - 현행 제도 기준으로 보면, 출산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복지지출이 커지는 정도는 크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이 작아지는 정도는 상당한 정도에 달함.
- 재정지출의 확대를 수반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타당성은 여러 가지 요인 및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산율 상승이 재정지출 확대를 수반하는 저출산 정책대응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면, 출산율 상승으로 인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재정지출이 더 커지는 정도는 위에서보다 클 것이며,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이 더 작아지는 상황이 실현되는 시점도 위에서보다 다소 늦어짐.
 -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성, 즉 정책대응이 과연 출산율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정책 효과성이 높을수록 타당성을 가짐.
 - 출산율 제고 정책이 대폭적인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재정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출산율 제고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실현되기에는 시차가 있으므로, 후세대 및 장기적인 문제에 더 큰 가치를 둘수록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라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은 상당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바. 정책방향

- 고령화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임.
 - 단기적으로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등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지출의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지만,
 -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재정지출 소요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출확대를 위해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위험함.
 - 특히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그로 인한 이자부담 등으로 인해 재정이 더욱 악화될 위험성이 있음.
-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복지제도를 어떻게 설계 또는 개혁하는가 하는 것임.
 - 먼 미래에 고령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세대들에게조차 정부가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려 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
 - 노후소득 보장 외의 각 분야의 복지지출 확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 기타 분야의 복지지출에 적절한 자원이 투입되는 균형 있는 복지지출 구조를 가질 수 있어야 함.
 - 복지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므로, 복지지출 외의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환경변화 및 조세부담의 증가를 감안하면, 조세제도의 효율성은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조세부담(사회보장을 포함한 국민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 그에 따라 조세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왜곡 효과도 더 커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자체가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제도가 초래하는 왜곡을 최소화하고 성장친화적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더욱 중요함.
- 물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중요하지만,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지출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사회보장지출이 작은 상황에서, 재분배를 위해서는 조세의 누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음.
 -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은 조세제도가 가지는 누진성이 약하기보다는, 조세부담의 수준이 낮고, 이와 더불어 재분배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목의 재정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임.
 - 향후 사회보장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은 조세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이 될 수 있음.
 - 재정지출을 통해 재분배 기능을 상당 부분 달성하고, 조세정책의 목표는 그러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제3절 저출산의 사회적 파급효과

1.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가.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 기본가정

- 통계청(2006)의 출산율 중위가정을 기초로 함.

□ 인구추이

- 전체인구는 2008년 48,607천명에서 다소 증가하여 2020년 49,326천명에 이르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 31,466천명으로 감소(<표 3-49>)
 -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5,016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16,156천명이 되나, 1980년대 이후의 저출산세대가 이 연령대에 도달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2070년 13,264천명으로 감소
 - 18~64세의 근로연령인구는 2008년 33,100천명에서 다소 증가하여 2015년 34,340천명에 이르나, 1980년대 이후의 저출산세대가 이 연령대에 도달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2070년에는 14,687천명으로 감소
- 이에 따라, 노인인구부양비²⁰⁾(65세이상 인구/18-64세 인구)는 2008년 15.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5년에 90.4%로 최고수준에 이르고 이후에는 다소 감소한 상태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임.
-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고출산세대가 은퇴연령에 도

20) 통상 사회통계에서 노인부양비는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로 정의되나, 여기서는 국민연금제도내의 인구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최소가입연령인 18세부터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로 분석함. 따라서 통상 사회통계의 노인부양비보다 높게 산출됨.

달하고 1980년대 이후 저출산세대가 근로연령대에 이르게 되는
2020년대부터는 급격한 노인인구부양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

〈표 3-49〉 인구구조(기본가정)

(단위 : 천명, %)

	인구수				노인부양비 (나/가)
	총인구	18세미만	18-64세(가)	65세 이상(나)	
2008	48,607	10,491	33,100	5,016	15.2
2010	48,875	9,976	33,542	5,357	16.0
2015	49,277	8,556	34,340	6,381	18.6
2020	49,326	7,482	34,142	7,701	22.6
2025	49,108	7,043	32,297	9,768	30.2
2030	48,635	6,700	30,124	11,811	39.2
2035	47,734	6,327	27,858	13,549	48.6
2040	46,343	5,848	25,454	15,041	59.1
2045	44,521	5,255	23,468	15,798	67.3
2050	42,343	4,672	21,515	16,156	75.1
2055	39,767	4,254	19,915	15,598	78.3
2060	37,000	3,979	17,880	15,141	84.7
2065	34,200	3,748	15,993	14,459	90.4
2070	31,446	3,495	14,687	13,264	90.3
2075	28,821	3,200	13,643	11,979	87.8
2078	27,321	3,013	13,045	11,263	86.3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2008. 11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추이

- 가입자는 2008년 18,373천명에서 2014년 18,897천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70년에는 8,441천명이 됨(<표 3-50>).
- 노령연금수급자수는 2008년 1,888천명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9년에 최고 11,121천명이 된 후 감소
 - － 2060년 이후 수급자수의 감소는 제도가 성숙한 상태에서 1980년 이후 저출산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함으로서 발생하는 현상임.
-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수)는 2008년에 10.3%이

나, 제도가 성숙하고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5년 119.7%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다소 감소

－ 가입자 100명당 수급자는 120명인 상황

○ 장애연금의 수급자는 2008년 84천명에서 2040년 287천명으로 증가하고 이후에는 감소하여 2070년에는 193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장애연금수급자수는 노령연금수급자수 대비 2~3% 수준을 유지

○ 한편, 유족연금수급자수는 2008년 367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4년에는 2,846천명으로 증가하고 이후에는 감소하여 2070년에는 2,396천명이 될 것으로 추계됨.

－ 장기적으로 노령연금수급자수 대비 유족연금수급자수의 비율은 25~30%수준을 유지

〈표 3-50〉 가입자 및 수급자 추이 (기본가정)

(단위 : 천명, %)

	가입자수(가)	수급자수			제도부양비 (나/가)
		노령연금(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2008	18,373	1,888	84	367	10.3
2010	18,629	2,060	103	472	11.1
2015	18,896	2,533	153	768	13.4
2020	18,574	3,394	199	1,101	18.3
2025	17,749	4,556	236	1,458	25.7
2030	16,605	5,720	265	1,817	34.4
2035	15,193	6,955	283	2,143	45.8
2040	14,041	8,653	287	2,421	61.6
2045	12,870	9,898	283	2,652	76.9
2050	12,029	10,833	273	2,806	90.1
2055	10,928	11,049	258	2,841	101.1
2060	9,846	11,120	235	2,736	112.9
2065	9,077	10,863	212	2,579	119.7
2070	8,441	10,072	193	2,396	119.3
2075	7,847	9,177	178	2,223	116.9
2078	7,496	8,653	169	2,134	115.4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편향』, 2008. 11

□ 재정수지 전망

- 국민연금은 초기에 부과방식보험료율을 상회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해
옴으로써 지금까지 상당한 적립기금이 축적되어 왔음.
- － 부과방식보험료율보다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왔으나, 부담에
비하여 급여가 많은 불균형 구조여서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정 요
소를 내포
- 앞으로 20~30년간은 제도가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접
어드는 과정에 있게 되므로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

〈표 3-51〉 재정수지전망(기본가정)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연말)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¹⁾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05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0	325,294	50,851	27,629	23,222	10,328	9,852	40,523	27.6	9.00	282,798
2015	575,098	75,710	39,147	36,562	17,623	17,283	58,087	29.3	9.00	437,613
2020	923,985	109,949	53,421	56,528	31,818	31,364	78,131	26.6	9.00	624,472
2025	1,304,447	135,363	69,007	66,356	55,202	54,614	80,161	22.2	9.00	798,498
2030	1,738,946	176,064	87,150	88,913	86,287	85,525	89,777	19.1	9.00	964,123
2035	2,131,048	204,311	105,365	98,946	129,556	128,588	74,755	15.9	9.00	1,070,136
2040	2,413,567	240,844	127,764	113,080	198,670	197,440	42,174	11.9	9.00	1,097,752
2043	2,464,507	252,055	140,901	111,154	244,861	243,454	7,194	10.0	9.00	1,056,269
2044	2,459,151	257,173	145,974	111,198	262,529	261,057	-5,356	9.4	9.00	1,033,307
2045	2,440,482	262,100	151,441	110,659	280,770	279,230	-18,669	8.8	9.00	1,005,355
2050	2,110,154	278,988	181,417	97,571	377,879	375,952	-98,891	5.8	9.00	787,331
2055	1,286,378	265,034	205,048	59,986	475,969	473,567	-210,935	3.1	9.00	434,721
2060	-214,225	231,684	231,684	0	596,793	593,799	-365,108	0.3	9.00	-65,571
2065	-	266,860	266,860	0	725,918	722,188	-459,058	-	9.00	-
2070	-	308,703	308,703	0	843,119	838,471	-534,416	-	9.00	-
2075	-	356,299	356,299	0	963,934	958,141	-607,635	-	9.00	-
2078	-	387,432	387,432	0	1,044,438	1,037,827	-657,006	-	9.00	-

주: 1) 적립배율은 연간 총지출 대비 연초적립기금비율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
 선방향』, 2008. 11

-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31년부터는 당년도 지출이
보험료수입을 상회하게 되고,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

+기금투자수입)을 상회하게 되어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표 3-51>)

- 이에 따라 적립기금은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직전연도인 2043년에 최고 2,465조원(1,056조, 2005년 불변가)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60년에 소진됨.
- 2007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재정구조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
-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의 보험료수입은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나 대규모의 국고보조가 필요한 상황

나. 지출비용

- 지출재원 충당을 위한 부담률은 재정방식에 따라 수준을 달리함.
 - 부과방식과 적립방식하에서 각각 필요보험료율을 파악해 볼 수 있음.
- 부과방식비용률
 - 부과방식비용률은 부과방식으로 재정운영을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필요보험료율로서 장래 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부과방식비용률은 기금소진시점인 2060년에 21.9%이고 2070년에는 23.2%로 추계됨 (<표 3-52>)

〈표 3-52〉 부과방식이용률 추이

(단위 : %)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78
부과방식비용률	3.0	4.9	8.2	13.1	17.7	21.9	23.2	22.9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편향』, 2008. 11

□ 적립방식을 유지할 경우의 필요보험료율

- 향후 70년간(2078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그 이후로도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적립기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12.5%~17.5% 수준 (<표 3-53>)
- 2078년말의 적립기금 보유목표에 따라 필요보험료율 수준이 다름
 - － 적립배율 2배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2.5%
 - － 적립배율 5배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3.2%
 - － 2078년까지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필요보험료율은 14.3%
 - － 적립배율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필요보험료율은 17.5%

〈표 3-53〉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단위 : %)

	2078년의 적립기금에 대한 목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유지
필요보험료율	12.5%	13.2%	14.3%	17.5%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편향』, 2008. 11

다. 출산을 변화시 재정수지 및 필요보험료율의 변화

□ 합계출산율 대안가정

-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시 출산율에 대한 기본가정(통계청 중위가정)과 함께 대안가정을 설정
- 출산율 대안가정은 1.6명으로서 통계청 중위가정 1.28명보다 높음.
 - － 출산율 1.6명은 OECD 평균 수준이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2006~2010』(정부합동, 2006)의 정부목표치임.

〈표 3-54〉 합계출산율 가정

(단위 : 명)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년 이후
기본가정 ¹⁾	1.08	1.15	1.17	1.20	1.25	1.28
대안가정	1.08	1.40	1.60			

주: 1) 통계청 중위가정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2008. 11

□ 인구 및 국민연금가입자, 수급자 추이

- 노인인구부양비(65세이상 인구/18-64세 인구)는 2008년 15.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5년에 71.9%에 이르고 이후 불규칙 변동

〈표 3-55〉 인구 및 국민연금 가입자수, 수급자수 (대안가정)

(단위 : 천명, %)

	인 구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인구수				노인 부양비 (나/가)	가입자 (다)	수급자			제도 부양비 (라/다)
	총인구	18세 미만	18-64세 (가)	65세 이상 (나)			노령연금 (라)	장애 연금	유족 연금	
2008	48,649	10,533	33,100	5,016	15.2	18,373	1,888	84	367	10.3
2009	48,848	10,349	33,306	5,193	15.6	18,508	1,966	94	418	10.6
2010	49,062	10,163	33,542	5,357	16.0	18,629	2,060	103	472	11.1
2015	50,165	9,444	34,340	6,381	18.6	18,896	2,533	153	768	13.4
2020	50,874	9,031	34,142	7,701	22.6	18,574	3,394	199	1,101	18.3
2025	51,183	9,110	32,306	9,768	30.2	17,750	4,556	236	1,458	25.7
2030	51,227	8,886	30,531	11,811	38.7	16,677	5,720	265	1,817	34.3
2035	50,727	8,184	28,994	13,549	46.7	15,563	6,955	284	2,143	44.7
2040	49,668	7,484	27,143	15,041	55.4	14,896	8,657	288	2,421	58.1
2045	48,435	6,958	25,679	15,798	61.5	14,159	9,908	284	2,651	70.0
2050	46,985	6,619	24,211	16,156	66.7	13,684	10,849	276	2,806	79.3
2055	45,066	6,520	22,948	15,598	68.0	12,883	11,066	263	2,843	85.9
2060	42,930	6,469	21,320	15,141	71.0	12,057	11,136	245	2,746	92.4
2065	40,697	6,142	20,097	14,459	71.9	11,596	10,876	228	2,598	93.8
2070	38,393	5,656	19,472	13,264	68.1	11,309	10,105	218	2,426	89.4
2075	36,246	5,227	18,877	12,142	64.3	10,792	9,414	209	2,265	87.2
2078	35,088	5,026	18,300	11,762	64.3	10,430	9,181	202	2,187	88.0

-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고출산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고 1980년대 이후 저출산세대가 근로연령대에 이르게 되는 1920년대부터의 급격한 노인인구부양비 상승은 기본가정과 유사하지

만, 최고점에서의 고령인구의 부양비가 72%수준으로, 기본가정의 90%수준과 비교하여 18%p 감소

- 제도부양비(=노령연금수급자수/가입자수)는 2008년에는 10.3%이나, 제도가 성숙하고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3년 94.0%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다소 감소
 - － 기본가정과 비교하여 최고점에서의 제도부양비가 약 26%p 감소함.

□ 재정수지 전망

- 기본가정과 비교하여 재정수지가 양호하게 전개되어, 최초로 당년도 수지적자 시점은 2047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추계됨.
 - － 기본가정에서의 수지적자 발생시점인 2044년, 기금소진연도인 2060년 보다 각각 3년, 4년이 늦추어짐.

〈표 3-56〉 재정수지전망 : 대안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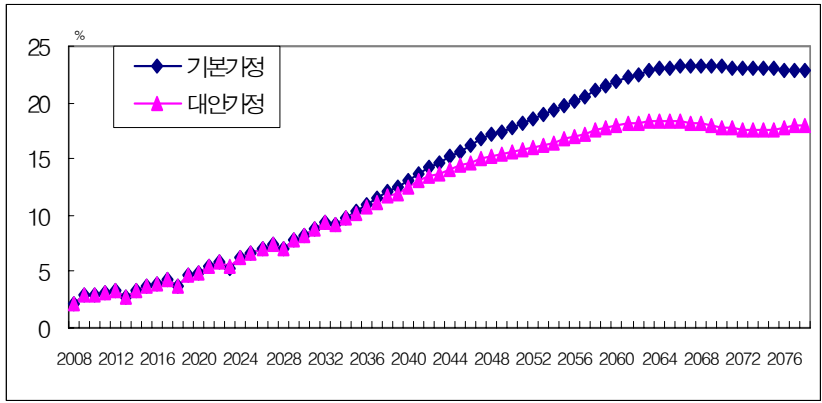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05년 불변가액)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08	248,133	41,374	23,808	17,566	6,792	6,373	34,582	31.4	9.00	228,854
2010	325,294	50,851	27,629	23,222	10,328	9,852	40,523	27.6	9.00	282,798
2015	575,098	75,710	39,147	36,562	17,623	17,283	58,087	29.3	9.00	437,613
2020	923,985	109,949	53,421	56,528	31,818	31,364	78,131	26.6	9.00	624,472
2025	1,310,035	136,621	68,681	67,939	55,186	54,600	81,435	22.3	9.00	801,918
2030	1,753,004	177,978	86,603	91,375	86,080	85,325	91,898	19.3	9.00	971,917
2035	2,174,102	211,179	105,909	105,269	128,799	127,845	82,379	16.2	9.00	1,091,756
2040	2,519,325	255,136	132,235	122,902	196,368	195,162	58,768	12.5	9.00	1,145,853
2045	2,669,443	288,284	162,393	125,891	276,055	274,552	12,229	9.6	9.00	1,099,675
2046	2,670,265	295,506	169,303	126,203	294,684	293,113	822	9.1	9.00	1,078,445
2047	2,658,519	302,462	176,514	125,948	314,208	312,567	-11,746	8.5	9.00	1,052,648
2050	2,552,871	323,077	201,271	121,806	370,466	368,593	-47,389	7.0	9.00	952,515
2055	2,074,552	335,676	236,742	98,933	466,087	463,753	-130,411	4.7	9.00	701,078
2060	1,076,842	333,729	278,089	55,640	584,788	581,879	-251,059	2.3	9.00	329,605
2064	-219,842	318,587	318,587	0	687,143	683,687	-368,556	0.2	9.00	-62,166
2065	-	330,558	330,558	0	712,625	709,017	-382,067	-	9.00	-
2070	-	395,344	395,344	0	829,769	825,294	-434,424	-	9.00	-
2075	-	466,528	466,528	0	968,101	962,551	-501,573	-	9.00	-
2078	-	513,319	513,319	0	1,087,765	1,081,450	-574,446	-	9.00	-

□ 지출비용

- 부과방식비용률 추이를 보면,
 - － 대안가정의 경우, 부과방식비용률이 장기적으로 23%수준으로 나타남.
 - － 기본가정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노인부양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집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이 5%pt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옴.

[그림 3-14] 출산을 가정별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표 3-57〉 출산을 가정별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단위 : %)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78
기본가정	3.0	4.9	8.2	13.1	17.7	21.9	23.2	22.9
대안가정	3.0	4.9	8.3	12.5	15.6	17.9	17.8	18.0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편향』, 2008. 11

□ 적립방식을 유지할 경우의 필요보험료율

- 향후 70년간(2078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그 이후로도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적립기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11.1%~ 14.5% 수준
 - － 적립배율 2배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1.1%

- 적립배율 5배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1.6%
 - 2078년까지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필요보험료율은 12.2%
 - 적립배율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필요보험료율은 14.5%
- 기본가정과 비교할 때, 2078년의 목표 적립기금의 규모에 따라 1.4%~3.0% pt 낮아짐.

〈표 3-58〉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단위 : %)

	2078년의 적립기금 목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기본가정	12.5	13.2	14.3	17.5
대안가정	11.1	11.6	12.2	14.5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편향』, 2008. 11

□ 급여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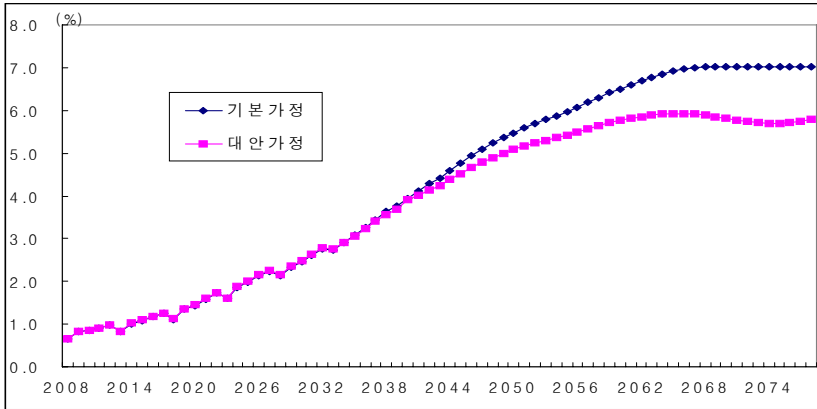
-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2008년 0.6%에서 점차 증가하여 기본가정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7.0% 수준에 접근하고, 대안가정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5.8%수준에 접근
- 대안가정이 기본가정보다 1.2%pt 낮음.

〈표 3-59〉 가정별 GDP 대비 급여지출비율 추이

(단위 :%)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78
기본가정	0.9	1.4	2.5	3.9	5.5	6.5	7.0	7.0
대안가정	0.9	1.5	2.5	3.9	5.1	5.8	5.8	5.8

[그림 3-15] 가정별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 추이



라. 정책 방향

- 인구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구조악화는 불가피함.
 - 사망률 감소로 인한 기대수명연장,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원을 부담할 근로세대는 감소
 - 국민연금의 경우,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기간이 제도의 성숙과 맞물려 지출증가 속도가 매우 급격하게 일어남.
 - 적립기금이 최고점에 이르고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한 이후 16년만에 적립기금 소진
- 출산율 증가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구조의 개선을 가져올 것임. 대안가정(합계출산율 1.6명)의 경우, 기본가정(합계출산율 1.28)과 비교하여
 - 장기적으로 GDP 대비 급여지출비율이 1.2pt% 낮아짐.
 - 장기적으로 부과방식비용률은 5%pt 낮아짐.
 - 적립기금 목표에 따라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4%~3.0%pt 낮아짐.
-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부담과 급여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한편, 국가적으로 고령화 인구구조를 완화시키는 노력 필요

2.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가.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급여비 지출규모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료인상 등을 통한 재정수입은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소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거시재정 측면에서의 재정총량에 대한 분석과 효과적 관리방안 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인구구조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한 건강보험재정 지출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추계된 값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보건 지표로 변환하여 건강보험의 향후 재정 위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미래 재정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고에서는 우선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위험의 측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함.
 - 또한, 정확도가 높고 체계적인 중장기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향후 재정위험 정도를 검토함.
- 건강보험의 재정위험과 관련하여 박형수 외(2007)²¹⁾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지출 규모가 재정의 위험요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에서 전체적인 부담률을 재정위험요인이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건강보험은 중·장기 재정전망이 재정위험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음.

21) 박형수 외,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또는 중기적으로 제도 관련 요율(보험료를 및 수가)의 조정을 통하여 단기적 재정안정을 추구하고 있음.
- 즉, 건강보험 내부제도로써 건강보험 적용 범위(보장성 수준) 및 지원수준의 변동과 외부요인으로서 인구구조의 변화 및 개인의 의료수요 변동 등에 따라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지출 규모가 재정의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건강보험은 장기간에 분포하는 약속된 급여가 없고 단기간의 재정수지 적자는 보험료율의 변경을 통해 조정되므로 미래의 지출 규모 자체가 재정위험으로 파악됨.
- 따라서, 미래의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우리 경제가 감당 또는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위험임.
- 이를 구체적인 지표로서 나타낸다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의 증가분(국민의 부담) 또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될 것임.

나. 건강보험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화 문제²²⁾

- 직장가입자를 근로자, 공·교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를 추계하였으며, 적용된 가입자에 월수입을 적용하여 전체보험료 수입을 추계함.
- 지출은 수입에 비해 추계방법에 따른 변이가 심하고, 급여비추이가 근로자, 공·교, 지역가입자, 그리고 입원, 외래형태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RMA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모형을 이용하여 요양급여비를 추계하고 기타 지출을 추정함.

22) 김진수 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 수입의 경우는 보험료 수입만을 고려 할 경우, 2010년에는 약 25조 9천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입이 2020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 1.53배 증가한 약 39조 6천억원 규모로 증가. 2030년에는 약 61조 5천억원 규모로 증가하여 2010년에 비해 약 2.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60> 참조).

〈표 3-60〉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전망 (2010~2030년)

(단위: 억원)

연도	전체 보험료	국고	기타 수입	전체 수입	보험 급여비	관리 운영비	기타 지출	지출 합계	당기 수지	누적 수지
2011	258,560	51,712	3,982	314,254	351,492	11,769	778	364,039	-49,785	-49,785
2012	270,985	54,197	4,102	329,284	378,241	12,416	817	391,474	-62,190	-111,975
2013	284,037	56,807	4,225	345,069	405,446	13,099	858	419,403	-74,334	-186,309
2014	297,739	59,548	4,351	361,638	433,126	13,819	901	447,846	-86,208	-272,517
2015	312,120	62,424	4,482	379,026	461,305	14,579	947	476,831	-97,805	-370,322
2016	327,221	65,444	4,616	397,281	490,017	15,381	994	506,392	-109,111	-479,433
2017	343,098	68,620	4,755	416,472	519,300	16,226	1,043	536,569	-120,097	-599,530
2018	359,793	71,959	4,897	436,649	549,199	16,094	1,096	566,389	-129,740	-729,270
2019	377,337	75,467	5,044	457,849	579,719	16,979	1,150	597,848	-139,999	-869,269
2020	395,903	79,181	5,196	480,279	611,123	17,914	1,207	630,244	-149,965	-1,019,234
2021	413,752	82,750	5,352	501,853	643,325	18,898	1,268	663,491	-161,637	-1,180,871
2022	432,446	86,489	5,512	524,447	676,473	19,938	1,332	697,743	-173,296	-1,354,167
2023	452,013	90,403	5,677	548,093	710,598	21,034	1,399	733,031	-184,938	-1,539,105
2024	472,492	94,498	5,848	572,838	745,850	22,192	1,468	769,510	-196,672	-1,735,777
2025	493,928	98,786	6,023	598,736	782,307	23,411	1,541	807,259	-208,522	-1,944,299
2026	516,350	103,270	6,204	625,824	820,087	24,699	1,618	846,404	-220,580	-2,164,879
2027	539,801	107,960	6,390	654,152	859,348	26,057	1,700	887,105	-232,954	-2,397,833
2028	564,323	112,865	6,582	683,770	900,284	27,491	1,784	929,559	-245,790	-2,643,623
2029	589,954	117,991	6,779	714,724	943,044	29,003	1,874	973,921	-259,197	-2,902,820
2030	615,490	123,098	6,983	745,570	987,975	30,598	1,967	1,020,540	-274,970	-3,177,790

주: 1)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 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추계된 결과임.

2) 누적수지는 2010년도 누적수지가 0이라는 가정하에서 산정함.

□ 정부지원과 기타 수입규모를 고려한 전체 수입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약 4%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인 2020년 전까지는 수입증가율이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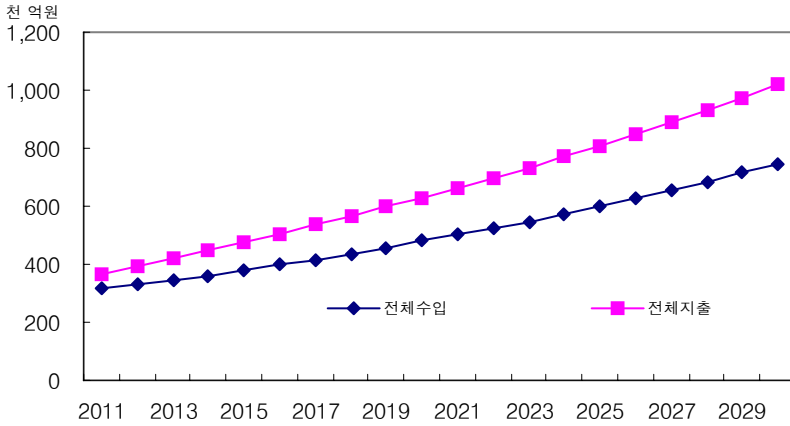
- 전체 수입규모를 보면 2011년 31조 4천억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48조원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2011년 대비 약 2.37배 증가한 약 74조 6천억원 규모로 추정됨.
- 그러나 정부지원의 경우 현행 정부지원법 규정에 의거 보험료 수입의 20%를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수입규모는 추계결과보다 다소 축소될 수 있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표 3-61〉 수입 및 지출 증가율 전망 (2011~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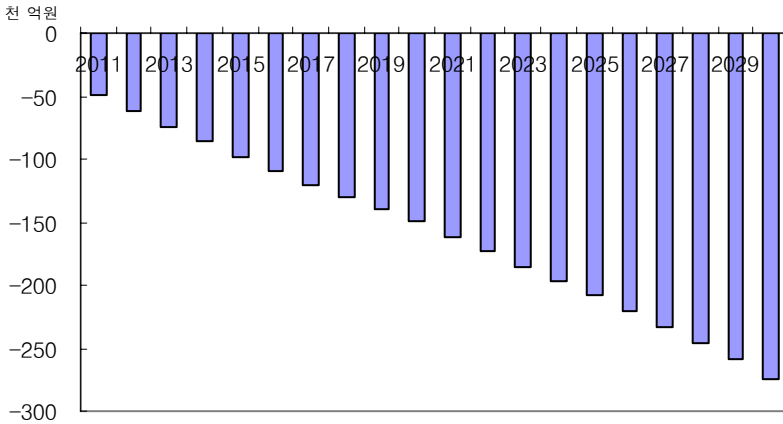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전체수입	증가율	전체지출	증가율	당기수지
2011	314,254	-	364,039	-	-49,785
2012	329,284	4.78%	391,474	7.54%	-62,190
2013	345,069	4.79%	419,403	7.13%	-74,334
2014	361,638	4.80%	447,846	6.78%	-86,208
2015	379,026	4.81%	476,831	6.47%	-97,805
2016	397,281	4.82%	506,392	6.20%	-109,111
2017	416,472	4.83%	536,569	5.96%	-120,097
2018	436,649	4.84%	566,389	5.56%	-129,740
2019	457,849	4.86%	597,848	5.55%	-139,999
2020	480,279	4.90%	630,244	5.42%	-149,965
2021	501,853	4.49%	663,491	5.28%	-161,637
2022	524,447	4.50%	697,743	5.16%	-173,296
2023	548,093	4.51%	733,031	5.06%	-184,938
2024	572,838	4.51%	769,510	4.98%	-196,672
2025	598,736	4.52%	807,259	4.91%	-208,522
2026	625,824	4.52%	846,404	4.85%	-220,580
2027	654,152	4.53%	887,105	4.81%	-232,954
2028	683,770	4.53%	929,559	4.79%	-245,790
2029	714,724	4.53%	973,921	4.77%	-259,197
2030	745,570	4.32%	1,020,540	4.79%	-274,970

[그림 3-16]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변화 전망 (2011~2030년)



[그림 3-17] 건강보험 당기수지 변화 전망 (2011~2030년)



□ 지출 규모는 전체적으로 수입 규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출 증가
 을 역시 수입증가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60> 및 <표
 3-61> 참조).

○ 현물과 현금급여비만을 고려할 경우 2011년에는 약 35조 1천억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약 61조 1천억원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 2.81배 증가한 98조 8천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체 지출규모에 있어서도 2011년에는 약 36조 4천억원이던 급여비 지출규모가 2020년에는 약 63조원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약 100조원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 김진수 외(2007)²³⁾의 연구에서 추계된 수입과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수가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당기수지 균형 예상연도를 simulation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험료 6% 인상과 수가 1%, 2%, 3%를 가정할 경우 당기수지 균형은 보험료 6%, 수가인상 1%를 전제로 하더라도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표 3-62> 참조).

- 보험료 7% 인상과 수가 1%, 2%, 3% 인상을 전제로 할 경우 보험료 7% 수가 1%를 가정하면 당기수지 균형은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보험료 8% 인상과 수가 1%, 2%, 3%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를 8% 인상시키고 수가를 1%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당기수지 균형은 2011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표 3-62〉 당기수지 균형 예상 연도

당기수지 균형		보험료 인상		
		6%	7%	8%
수가 인상	1%	2015년	2013년	2011년
	2%	2018년	2016년	2014년
	3%	2022년	2019년	2017년

23) 전계서

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건강보험 적용인구수와 가입자수 추계 결과 비교

- 건강보험 적용 인구수의 전망을 살펴보면, 2011년 48.3백만명에서 2018년까지 48.6백만명을 정점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이 후 연도인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47.7백만명으로 예상됨 (<표 3-63> 참조).

〈표 3-63〉 건강보험 적용인구 전망 (2011~2030년)

(단위: 명)

구분	의료 보장인구	의료급여 적용인구	건강보험 적용인구	근로자 적용인구	공·교 적용인구	직장 적용인구	지역 적용인구
2011	50,236,482	1,975,226	48,261,256	24,557,951	5,008,960	29,566,911	18,694,345
2012	50,373,558	2,002,913	48,370,645	24,816,916	5,036,120	29,853,036	18,517,608
2013	50,492,318	2,030,687	48,461,631	25,079,546	5,061,006	30,140,551	18,321,080
2014	50,591,972	2,058,413	48,533,559	25,343,807	5,083,646	30,427,453	18,106,107
2015	50,671,776	2,086,091	48,585,685	25,609,293	5,104,455	30,713,748	17,871,937
2016	50,732,695	2,113,791	48,618,904	25,880,069	5,120,391	31,000,459	17,618,444
2017	50,776,616	2,141,553	48,635,063	26,151,446	5,136,711	31,288,157	17,346,906
2018	50,805,342	2,169,375	48,635,967	26,424,628	5,152,177	31,576,805	17,059,162
2019	50,821,620	2,197,299	48,624,321	26,716,511	5,150,506	31,867,017	16,757,304
2020	50,827,932	2,225,319	48,602,613	26,979,253	5,179,409	32,158,662	16,443,951
2021	50,825,899	2,253,400	48,572,499	27,259,993	5,191,235	32,451,228	16,121,271
2022	50,814,460	2,281,424	48,533,036	27,539,839	5,203,174	32,743,014	15,790,022
2023	50,791,443	2,309,339	48,482,104	27,817,679	5,215,595	33,033,274	15,448,831
2024	50,755,593	2,337,182	48,418,411	28,095,038	5,227,526	33,322,564	15,095,846
2025	50,705,672	2,364,952	48,340,720	28,369,938	5,240,932	33,610,869	14,729,851
2026	50,639,861	2,392,619	48,247,242	28,643,088	5,254,677	33,897,765	14,349,478
2027	50,556,838	2,420,201	48,136,637	28,915,389	5,268,152	34,183,541	13,953,096
2028	50,455,419	2,447,703	48,007,716	29,187,164	5,281,087	34,468,251	13,539,465
2029	50,333,584	2,475,079	47,858,505	29,458,170	5,293,106	34,751,276	13,107,228
2030	50,190,359	2,502,377	47,687,982	29,715,395	5,317,885	35,033,279	12,654,703

주: 1) 의료보장인구 = 의료급여 적용인구 + 건강보험 적용인구

2) 건강보험 적용인구 = 직장 적용인구 + 지역 적용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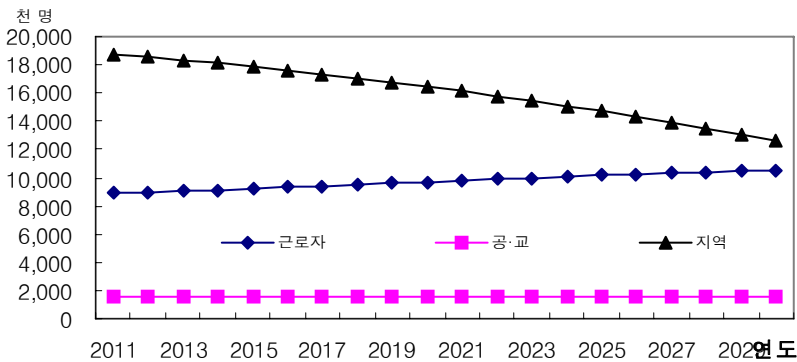
3) 직장 적용인구 = 근로자 적용인구 + 공·교 적용인구

〈표 3-64〉 건강보험 적용인구 증가율 (2011~2030년)

구분	의료 보장인구	의료급여 적용인구	건강보험 적용인구	근로자 적용인구	공·교 적용인구	직장 적용인구	지역 적용인구
2011	-	-	-	-	-	-	-
2012	0.27%	1.40%	0.23%	1.05%	0.54%	0.97%	-0.95%
2013	0.24%	1.39%	0.19%	1.06%	0.49%	0.96%	-1.06%
2014	0.20%	1.37%	0.15%	1.05%	0.45%	0.95%	-1.17%
2015	0.16%	1.34%	0.11%	1.05%	0.41%	0.94%	-1.29%
2016	0.12%	1.33%	0.07%	1.06%	0.31%	0.93%	-1.42%
2017	0.09%	1.31%	0.03%	1.05%	0.32%	0.93%	-1.54%
2018	0.06%	1.30%	0.00%	1.04%	0.30%	0.92%	-1.66%
2019	0.03%	1.29%	-0.02%	1.10%	-0.03%	0.92%	-1.77%
2020	0.01%	1.28%	-0.04%	0.98%	0.56%	0.92%	-1.87%
2021	0.00%	1.26%	-0.06%	1.04%	0.23%	0.91%	-1.96%
2022	-0.02%	1.24%	-0.08%	1.03%	0.23%	0.90%	-2.05%
2023	-0.05%	1.22%	-0.10%	1.01%	0.24%	0.89%	-2.16%
2024	-0.07%	1.21%	-0.13%	1.00%	0.23%	0.88%	-2.28%
2025	-0.10%	1.19%	-0.16%	0.98%	0.26%	0.87%	-2.42%
2026	-0.13%	1.17%	-0.19%	0.96%	0.26%	0.85%	-2.58%
2027	-0.16%	1.15%	-0.23%	0.95%	0.26%	0.84%	-2.76%
2028	-0.20%	1.14%	-0.27%	0.94%	0.25%	0.83%	-2.96%
2029	-0.24%	1.12%	-0.31%	0.93%	0.23%	0.82%	-3.19%
2030	-0.28%	1.10%	-0.36%	0.87%	0.47%	0.81%	-3.45%

○ 반면, 실제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수의 전망을 살펴보면, 2011년 29.1백만명에서 2030년에 24.8백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표 3-65>, [그림 3-18]).

[그림 3-18] 가입자수 추이 전망 (2011~2030년)



〈표 3-65〉 건강보험 가입자수 전망 (2011~2030년)

구분	근로자		공·교		직장		지역	
	가입자수	증가율	가입자수	증가율	가입자수	증가율	가입자수	증가율
2011	8,881,004	1.00%	1,542,367	0.52%	10,423,371	0.92%	18,694,345	-0.86%
2012	8,967,430	0.97%	1,549,377	0.45%	10,516,807	0.90%	18,517,608	-0.95%
2013	9,055,021	0.98%	1,555,672	0.41%	10,610,693	0.89%	18,321,080	-1.06%
2014	9,143,041	0.97%	1,561,263	0.36%	10,704,304	0.88%	18,106,107	-1.17%
2015	9,231,343	0.97%	1,566,279	0.32%	10,797,622	0.87%	17,871,937	-1.29%
2016	9,321,390	0.98%	1,569,789	0.22%	10,891,179	0.87%	17,618,444	-1.42%
2017	9,411,483	0.97%	1,573,406	0.23%	10,984,889	0.86%	17,346,906	-1.54%
2018	9,502,059	0.96%	1,576,752	0.21%	11,078,811	0.86%	17,059,162	-1.66%
2019	9,599,184	1.02%	1,574,848	-0.12%	11,174,032	0.86%	16,757,304	-1.77%
2020	9,686,527	0.91%	1,582,436	0.48%	11,268,963	0.85%	16,443,951	-1.87%
2021	9,779,308	0.96%	1,584,642	0.14%	11,363,950	0.84%	16,121,271	-1.96%
2022	9,871,596	0.94%	1,586,875	0.14%	11,458,471	0.83%	15,790,022	-2.05%
2023	9,962,993	0.93%	1,589,247	0.15%	11,552,240	0.82%	15,448,831	-2.16%
2024	10,054,045	0.91%	1,591,462	0.14%	11,645,507	0.81%	15,095,846	-2.28%
2025	10,144,048	0.90%	1,594,118	0.17%	11,738,166	0.80%	14,729,851	-2.42%
2026	10,233,256	0.88%	1,596,869	0.17%	11,830,125	0.78%	14,349,478	-2.58%
2027	10,321,991	0.87%	1,599,529	0.17%	11,921,520	0.77%	13,953,096	-2.76%
2028	10,410,370	0.86%	1,602,017	0.16%	12,012,387	0.76%	13,539,465	-2.96%
2029	10,498,312	0.84%	1,604,220	0.14%	12,102,532	0.75%	13,107,228	-3.19%
2030	10,556,466	0.55%	1,606,208	0.12%	12,162,674	0.50%	12,654,703	-3.51%

주: 공·교 가입자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추정치를 준용함.

〈표 3-66〉 근로자, 공·교, 지역 노인인구 구성비 전망 (2011~2030년)

(단위: %)							
연도	근로자	공·교	지역	연도	근로자	공·교	지역
2011	9.198	14.675	8.075	2021	11.460	18.271	9.887
2012	9.425	15.035	8.256	2022	11.687	18.631	10.068
2013	9.651	15.394	8.437	2023	11.913	18.990	10.249
2014	9.877	15.754	8.618	2024	12.139	19.350	10.430
2015	10.103	16.113	8.799	2025	12.365	19.709	10.611
2016	10.329	16.473	8.981	2026	12.591	20.069	10.793
2017	10.556	16.833	9.162	2027	12.818	20.429	10.974
2018	10.782	17.192	9.343	2028	13.044	20.788	11.155
2019	11.008	17.552	9.524	2029	13.270	21.148	11.336
2020	11.234	17.911	9.705	2030	13.496	21.507	11.517

주: 1990~2005년 연도별 자료 이용.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 따라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수와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는 적용인구수의 차이가 매년 벌어져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표 3-67> 참조).
-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가입자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대비 2030년에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가입자의 증가율이 각각 -1.19%와 -14.77%로 건강보험 가입자수가 적용인구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건강보험 적용인구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와 비례하여 변화 추이를 보이는 반면, 가입자수는 생산가능 연령대의 인구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3-67〉 건강보험 적용인구와 가입자수 증가율 (2011~2030)

(단위: %)					
연도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2011~2030
건강보험 적용인구	0.67	-0.03	-0.48	-1.16	-1.19
건강보험 가입자수	-1.54	-2.79	-3.7	-5.2	-1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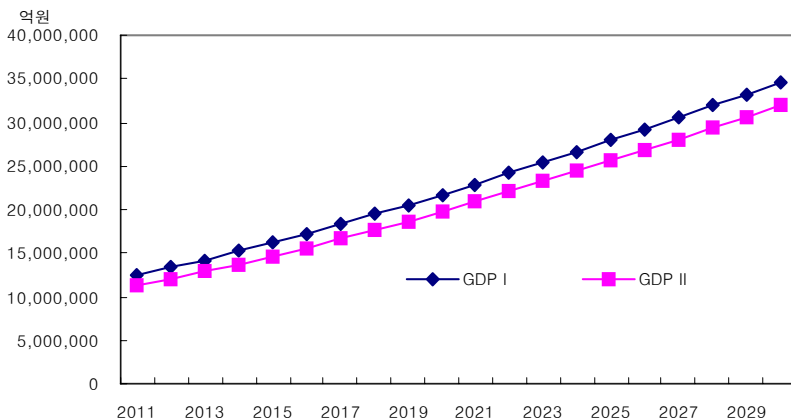
□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의 급증에 따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향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함.
- 이를 위해 우선 향후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추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는 박형수 외(2006)²⁴⁾의 추계결과를 이용함.
-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에 1,079조 원에서 2019년에는 2천조 원에 도달하고, 2027년에는 3천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4) 전계서

- 반면에, 박형수 외(2006)²⁵⁾의 추계결과는 2007년도와 2008년도 현재의 실적치를 추계함에 따라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있음.
- － 따라서 2007년도 실적치와 2008년과 2009년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최근 예상치를 고려하여 보정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4.3%와 3.4%로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2008)²⁶⁾의 결과를 참조함.
- － 이에 대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향후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에는 972조원에서 2021년에는 2천조 원에 도달하고, 2029년에 3천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정 전의 박형수 외(2006)²⁷⁾의 추계결과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68> 및 [그림 3-19] 참조).

[그림 3-19] 국내총생산(GDP) 추계 (2011~2030년)



자료: GDP I은 박형수 외,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에서 추출하였고, GDP II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보정한 금액임.

25) 전게서

26) 한국금융연구원, 『2008년 금융동향과 2009년 전망』 세미나 발표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2008.

27) 전게서

〈표 3-68〉 국내총생산(GDP) 추계 (2011~2030년)

(단위: 억원, %)

연도	GDP I		GDP II	
	명목 GDP	명목 경제성장률	명목 GDP	명목 경제성장률
2011	12,414,630	7.28	11,187,325	7.28
2012	13,298,320	7.12	11,987,360	7.15
2013	14,221,660	6.94	12,841,828	7.13
2014	15,183,840	6.77	13,727,954	6.90
2015	16,184,800	6.59	14,658,010	6.77
2016	17,224,840	6.43	15,617,711	6.55
2017	18,302,860	6.26	16,604,712	6.32
2018	19,414,710	6.07	17,616,324	6.09
2019	20,558,230	5.89	18,667,517	5.97
2020	21,731,460	5.71	19,758,079	5.84
2021	22,931,510	5.52	20,907,820	5.82
2022	24,155,770	5.34	22,076,969	5.59
2023	25,402,310	5.16	23,261,362	5.36
2024	26,668,200	4.98	24,456,494	5.14
2025	27,951,140	4.81	25,657,536	4.91
2026	29,251,050	4.65	26,885,542	4.79
2027	30,569,180	4.51	28,111,358	4.56
2028	31,906,810	4.38	29,358,016	4.43
2029	33,266,320	4.26	30,623,369	4.31
2030	34,651,380	4.16	31,905,107	4.19

자료: GDP I은 박형수 외,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에서 추출하였고, GDP II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보정한 금액임.

□ 추정된 국내총생산(GDP)과 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69> 참조).

○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11년 22.8백만원에서 65.6백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율은 2011년 이후 7% 정도에서 2030년에는 3% 중반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건강보험의 수지균형을 위해 필요한 가입자 1인당 보험료 수입액을 산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에 1백만원에서 2022년에는 2백만원을 초과하고, 2030년에는 3.3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표 3-69> 참조).

- 한편, 건강보험 전체 수입 중 정부지원을 현행 정부지원법 규정에 의거 보험료 수입의 20%를 가정하여 추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 수지균형에 필요한 보험료 수입규모는 추계결과보다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또한, 건강보험 지출추계는 수가인상이 없다고 가정한 결과로서, 수가인상이 고려되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수지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 수입액이 더욱 증가할 것임.

〈표 3-69〉 1인당 GDP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추계 (2011~2030년)

(단위: 원, %)

연도	1인당 GDP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	1인당 GDP 대비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비율
2011	22,836,480	1,000,186	4.38
2012	24,422,539	1,078,648	4.42
2013	26,121,018	1,159,702	4.44
2014	27,886,786	1,243,567	4.46
2015	29,746,093	1,330,557	4.47
2016	31,671,351	1,420,971	4.49
2017	33,658,842	1,515,101	4.50
2018	35,703,687	1,610,319	4.51
2019	37,835,989	1,712,336	4.53
2020	40,056,367	1,819,351	4.54
2021	42,409,377	1,931,193	4.55
2022	44,814,467	2,048,533	4.57
2023	47,260,824	2,171,858	4.60
2024	49,740,943	2,302,082	4.63
2025	52,247,216	2,439,953	4.67
2026	54,825,141	2,586,453	4.72
2027	57,418,628	2,742,781	4.78
2028	60,078,927	2,910,346	4.84
2029	62,806,525	3,090,616	4.92
2030	65,601,703	3,289,759	5.01

주: 1)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매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산정하였으며, 국고 보조를 제외한 금액임.

2) 건강보험 지출은 수가인상이 없다는 가정으로 산정됨.

□ 마지막으로, 국민 1인당 GDP 중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부담수준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남(<표 3-69> 참조).

- 국민 1인당 GDP 중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에 4.38%에서 매년 증가하여 2030년에는 5.0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행의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예측됨.

마. 국민의료비의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제도의 위기²⁸⁾

□ 국민의료비 추계

-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 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국민의료비의 추계가 가능함.
 - 2001년에서 2006년까지의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37~39% 정도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3-70> 참조).

<표 3-70> 국민의료비 대비 요양급여비 비율 (2001~2006년)

(단위: 억원, %)

연도	국민의료비 (A)	요양급여비 (B)	(B/A)×100
2001	325,290	129,406	39.8
2002	349,704	134,245	38.4
2003	392,683	147,552	37.6
2004	427,832	161,305	37.7
2005	484,641	179,886	37.1
2006	544,760	209,316	38.4

자료: 1) 국민의료비는 OECD, 『Health Data 2008』, Paris: OECD, 2008.

2) 요양급여비는 2008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에 따라, 과거의 국민의료비 대비 요양급여비 비율에 대한 추이를 고려하였을 경우, 2006년 이후의 국민의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28) 배성일 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도의 38.4%로서 계속 고정될 것이라고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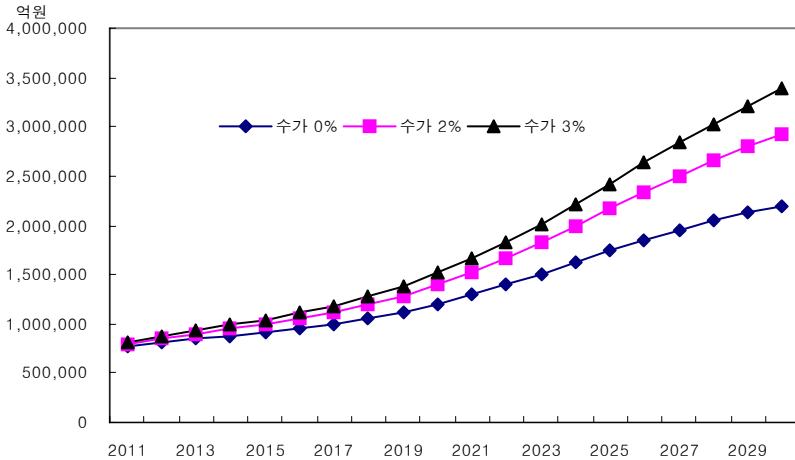
- － 이와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민의료비를 추계하였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수가를 매년 2%씩 증가하였을 경우, 2010년에 76조원, 2020년에 140조원, 2030년에는 293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1> 및 [그림 3-20] 참조).
- － 또한, 수가 3%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2010년에 77조원, 2020년에 125조원, 2030년에 339조원으로 증가하여 수가 2%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1> 및 [그림 3-20] 참조).

〈표 3-71〉 수가 변동에 따른 국민의료비 추계 (2011~2030년)

(단위: 억원, %)

연도	국민의료비		
	수가 0%	수가 2%	수가 3%
2011	770,008	800,736	816,453
2012	807,740	850,948	873,298
2013	846,471	903,376	933,142
2014	880,856	952,299	990,089
2015	912,100	998,870	1,045,279
2016	947,612	1,051,210	1,107,238
2017	991,554	1,114,224	1,181,302
2018	1,046,557	1,191,325	1,271,364
2019	1,115,889	1,286,842	1,382,401
2020	1,199,583	1,401,522	1,515,650
2021	1,292,411	1,529,883	1,665,566
2022	1,393,269	1,671,086	1,831,566
2023	1,503,178	1,826,845	2,015,864
2024	1,619,518	1,994,435	2,215,786
2025	1,736,689	2,167,222	2,424,203
2026	1,849,164	2,338,302	2,633,468
2027	1,950,610	2,499,315	2,834,058
2028	2,044,930	2,654,923	3,031,138
2029	2,126,203	2,796,912	3,215,104
2030	2,197,568	2,928,883	3,389,853

[그림 3-20] 수가 변동에 따른 국민의료비 추계 (2011~2030년)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계 및 평가

- 이전 절에서 추정된 국민의료비를 향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정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증가 수준을 살펴봄.
 - 이를 위해서 이전 절의 국내총생산(GDP) 전망 추계결과를 이용
- 다음으로, 이와 같이 추정된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의료비를 이용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을 산정함.
 - 경제성장률의 저하는 향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을 현저하게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줌.
- 한편, 추정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함.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수가를 매년 3%씩 인상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2011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 1981년에서 2006년까지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다른 국가들이 경험한 것 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3-72〉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의 증가율 (1981~2006)

(단위: %)								
호주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	OECD 평균
1.43	1.38	.16	.83	.90	.85	1.45	2.18	1.26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Paris: OECD, 2008.

- 더하여, 추정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함.
 - 정형선 외(2007)²⁹⁾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국민의료비 비율을 2020년에 6.7%, 2030년에 7.9%로서 제시하고 있음.
 - 이를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값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현재의 보건의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가를 매년 3%씩 인상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최대치로서 2011년에 7.3%, 2020년에 7.7%, 2030년에는 10.6%까지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됨 (<표 3-73> 및 <표 3-74> 참조).
 - 이러한 추정 결과는 적정 국민의료비 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그 격차는 해마다 크게 벌어질 것이라 예상되며, 건강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은 재정위험도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 예상됨 (<표 3-75> 참조).
 - 특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보장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전체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 수준 또한 높아져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29) 정형선 외, 『중장기 국민의료비 규모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연세대학교의료복지연구소, 2007.

지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함.

- 결과적으로 향후 건강보험제도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로서 우선 보장성을 강화하여 현재의 본인부담 수준을 낮춰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의료비 지출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위험도를 낮춰야 하는 서로 정반대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표 3-73〉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추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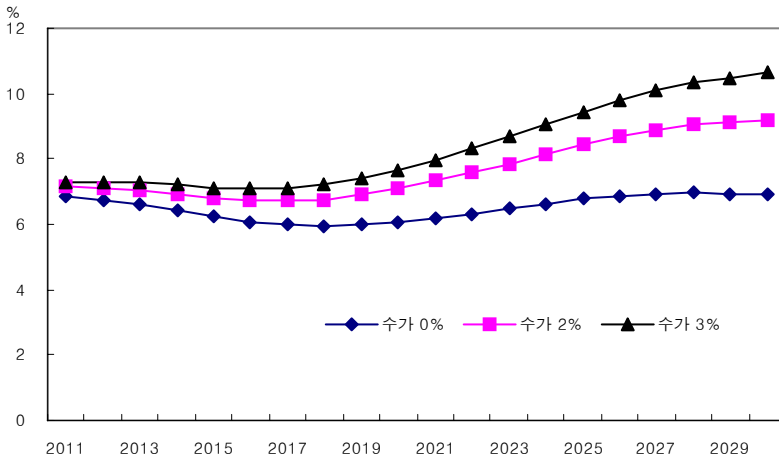
연도	GDP		
	수가 0%	수가 2%	수가 3%
2020	6.1	7.1	7.7
2030	6.9	9.2	10.6

〈표 3-74〉 수가 변동에 따른 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계 (2011~2030년)

(단위: %)

연도	GDP 대비 국민의료비		
	수가 0%	수가 2%	수가 3%
2011	6.9	7.2	7.3
2012	6.7	7.1	7.3
2013	6.6	7.0	7.3
2014	6.4	6.9	7.2
2015	6.2	6.8	7.1
2016	6.1	6.7	7.1
2017	6.0	6.7	7.1
2018	5.9	6.8	7.2
2019	6.0	6.9	7.4
2020	6.1	7.1	7.7
2021	6.2	7.3	8.0
2022	6.3	7.6	8.3
2023	6.5	7.9	8.7
2024	6.6	8.2	9.1
2025	6.8	8.4	9.4
2026	6.9	8.7	9.8
2027	6.9	8.9	10.1
2028	7.0	9.0	10.3
2029	6.9	9.1	10.5
2030	6.9	9.2	10.6

[그림 3-21] 수가 변동에 따른 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계 (2011~2030년)



〈표 3-75〉 적정 국민의료비 비율과 추계값과의 차이

(단위: %)

연도	GDP		
	수가 0%	수가 2%	수가 3%
2020	-0.6	.4	1.0
2030	-1.0	1.3	2.7

자료: 적정국민의료비는 청형선 외, 『중장기 국민의료비 규모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연세대학교의료복지연구소, 2007.에서 발췌.

바. 시사점

□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해짐에 따라 질병형태의 변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증대하여 재정위험도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동시에, 국가전체 보건지출인 국민의료비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향후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전체적으로 수입 규모보다 높게 나타나

고 있고 지출증가율 역시 수입증가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추계된 수입과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수가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당기수지 균형 예상연도를 추정한 결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보험료 6% 인상과 수가 1%, 2%, 3%를 가정할 경우 당기수지 균형은 보험료 6%, 수가인상 1%를 전제로 하더라도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수와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는 적용인구수의 차이가 매년 벌어져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중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부담수준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영향은 부분적인 한계성이 있으며, 향후에는 국민의료비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의료비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전체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 수준 또한 높아져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지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적정 국민의료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건강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은 건강보험의 재정위험도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 예상됨.

3. 교육에 미치는 영향

가. 저출산이 초래하는 교육적 변화

- 교육개념 자체의 변화는 물론 교육시스템과 인프라의 전면적 재구조화가

요구됨.

- 저출산이 초래하는 가장 큰 변화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서 학령 인구
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교 수가 결정됨.
- 학령기 인구의 감소는 교육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침.
 - － 각급 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학교 수의 축소, 학급당 학생 수 감
소 등 교육 여건
 - － 교원 정원과 배치 등 교원 수급 계획의 향후 운용

□ 학령인구의 감소

-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현상을 보임.
2010년에는 2005년에 비해 19%, 2020년에는 35% 감소 결과적으
로 2005년 400만명에서 2030년 220만명으로 감소전망
- 중등학교 학령인구의 경우에는 201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2015년에는 2005년에 비해 14%, 2020년에는 30% 감소 전망

〈표 3-76〉 학령기 인구 변화 예측

(단위: 천명)

학교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초등학교	4,073	4,016	3,297	2,656	2,510	2,316	2,209
중학교	1,869	2,058	1,962	1,573	1,291	1,231	1,131
고등학교	2,166	1,864	2,069	1,823	1,364	1,265	1,175
대학교	3,275	2,637	2,574	2,676	2,269	1,731	1,648

자료 : 통계청, KOSIS.

□ 교육여건의 변화

- 학교 수의 축소
 - －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의한 학교 수의 축소
 - － 특히, 신생아 출산율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 1990년대 초반만해도 통폐합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으나 2004
년 전국 읍면 지역에서 100명이 채 안되는 학교는 1,246개교

- 농어촌 교육의 악화, 지역 중심 교육의 중요성 무시, 통폐합의 빠른 속도
- 학교 통폐합으로 인하여 교육 여건의 악화로 탈농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

○ 학급당 학생수 감소

- 저출산 현상은 초·중등 학생 인구의 자연 감소로 학급당 학생수의 자동 감소를 예고
- 농어촌 인구의 도시 유입과 맞물려 농어촌 지역은 학교나 교실이 불필요하게 되는 반면, 학생이 모이는 지역은 새로운 학교나 교실을 지어야 됨.
 - 저출산과 인구 이동으로 농어촌 지역은 버려지는 학교와 교실은 급속도로 늘어 가는데, 인구가 유입되는 곳은 학교와 교실을 새로 지어야 되는 딜레마 상황
- 농어촌 지역의 버려지는 학교와 교실 활용에 대한 대책 필요

□ 교원 수급 계획

○ 교원 수급 조정 필요

- 교원 수요는 출산율, 취학률, 인구이동, 학교수와 학교급수, 교원 퇴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교원은 학생인구의 변화나 정책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급되기 어려움.
 - 교원은 오랜 기간에 거쳐 반드시 지정된 과정을 거쳐야만 양성되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 신속히 충원에 한계가 있고, 남아돌 경우 신분 보장으로 인해 쉽게 해고 할 수 없기 때문.
- 저출산에 의한 학령 인구의 감소는 교원 수요 감소 유발
-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의 정책은 교원 수요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교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 교육정책적 변화 요인을 고려한 교

원 수급 필요

□ 대학의 슬림화

- 저출산 시대에는 고교졸업자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미충원율의 증가
- 대학의 슬림화는 재정의 감소를 가져와서 내실 있는 고등 교육에 지장을 초래
- 대학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될 것임.

□ 초·중등교육의 변화

-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진행됨에 따라 초·중등교육은 상급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learning how to learn)을 보다 강조
- 중장년기에 평생학습 및 자기 계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에서 기초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 제기

나. 교육적 대처방안

□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

-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과 인구이동으로 늘어드는 폐교를 방치해 두지 않고 지역사회 센터로 전환
-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하여 초등교육과 통합하는 학제 개편 방안

□ 교원 수급 조정

-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염두에 두고 수요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원수급 예측 시스템 개발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원 운용방안 마련

□ 영유아 보육 강화

-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계속 증가
- 단순 보호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질적 수준 고려 필요

□ 초·중등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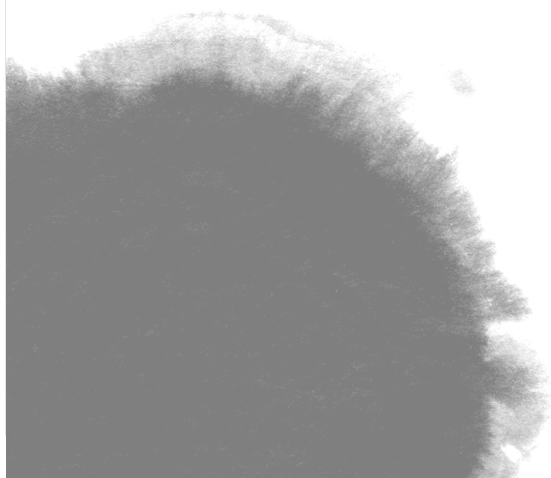
- 저출산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과정
- 결혼의 의미, 자녀 및 가족의 가치와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 전환 과정을 유도하는 교육 강화
 - － 가족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육아를 남녀 공동으로 분담 등을 이끌 수 있음

□ 고령 및 여성 인력 활용 정책 활용

- 여성과 고령 인력 채용을 위한 직업 훈련과 재교육
- 다문화 교육정책으로의 전환과 제도적 보완
- 중·고령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4장

향후 정책 과제



제4장 향후 정책 과제

제1절 단기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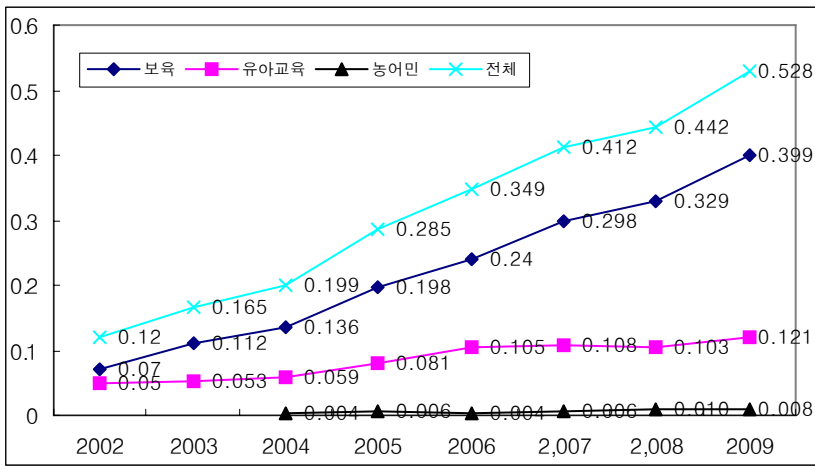
1. 보육료 내실화 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립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비용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예산규모도 확대
 - 0~4세의 경우 하위 50%까지는 정부지원 기준단가를 전액 지원하고,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령별 기준보육료의 일정비율을 차등보육료로 지원
 - 만5세아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전액 지원
 -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로서 두 명의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둘째 이상 자녀에게 연령별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50%까지를 추가 지원
 - 장애아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0세아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전액을 지원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2006년부터 영아기본보조금 지원
 - 2009년 기준으로 0세 350천원, 1세 169천원, 2세 112천원 등

- 보육시설 미이용 0~1세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에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 지원
- 농지소유 5ha미만 농어업가정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 기준단가의 70%를 그리고 미이용시 50%를 지원

[그림 4-1] GDP대비 보육·유아교육·농업인 양육비 예산 비율(2002~2009)



- 보육비용 지원 확대 정책으로 관련예산 규모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소득 계층 기준의 선별적 접근에 머물고 있어서,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부모의 부담이 높은 편이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은 미비
- GDP대비 영유아 관련 총예산 비율은 2009년 현재 0.53% 수준으로 2%가 넘는 프랑스, 스웨덴 등에 비하여 1/4 수준에도 미달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가정에서 출산중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용은 영아 62.9만원, 유아 74.8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³⁰⁾)

30)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동의 경우 2009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모간·아동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 － 시설 미이용율은 0세 84.7%, 1세 72.1%, 2세 50.5%(0~2세 평균 69%) 등
 - － 차상위계층 0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71.2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친인척 등에 의한 가정양육 비율이 큼.
 - －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양육이 70.9%, 가사대리인 9.4%

〈표 4-1〉 취업모 영유아 연령별 양육 자원서비스 이용률(1월 1일 연령 기준/조사 3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12.7	52.2	78.8	66.7	47.2	37.5	50.2
유치원	-	-	0.6	24.5	43.7	56.7	23.4
선교원	-	-	-	0.5	1.5	1.4	0.6
반일바 이상 학원	-	0.6	0.6	4.7	7.1	3.4	3.0
특기 및 보습 학원	-	0.6	0.6	4.7	11.7	28.4	8.6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	-	-	-	-	-	-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	-	-	-	-	-	-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	-	1.1	-	-	2.9	0.7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3.5	8.7	5.0	2.1	4.6	3.8	4.5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15.5	19.9	17.9	16.1	12.7	12.0	15.5
비동거 조부모	41.5	32.3	25.1	24.0	23.9	21.2	27.2
동거 친인척	1.4	0.6	1.1	0.5	2.0	1.0	1.1
비동거 친인척	4.9	4.3	3.9	2.6	3.0	3.4	3.6
동거 비혈연	2.1	0.6	-	1.0	0.5	-	0.6
육아전문과견인력	3.5	0.6	1.1	1.0	0.5	0.5	1.1
기타 비혈연	5.6	5.6	2.8	1.6	3.6	5.3	4.0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1.4	3.7	3.4	4.7	3.0	3.4	3.3
예체능 방문	-	-	-	0.5	1.5	1.0	0.6
과외	-	-	-	-	0.5	0.5	0.2
학습지(방문포함)	-	5.6	14.5	30.2	47.2	48.6	26.6
기타(인터넷 포함)	-	-	1.1	0.5	-	-	0.3
(수)	(142)	(161)	(179)	(192)	(197)	(208)	(1079)

자료: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년 보육실태조사, 2009.

- 만5세아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기관이용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보편성이 미흡하여 국민체감도 저조
 -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취학 전 무상교육의 목적은 학교 준비도 증진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
- 보육료 지원 시 맞벌이가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관계로 경제활동 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정책체감도 저조
 - － 동일한 조건에서 아동 1인당 소요되는 보육비용은 맞벌이가구가 홑벌이가구보다 월 5만원 정도 높음(여성부, 2004³¹⁾).
- 표준보육비용 및 지원단가가 불합리하여 민간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부담이 큼.
 - － 유아보육료의 경우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간의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차액 부담
 - － 보육료 차액에 대한 추가수납 금지로 보육시설 운영 지장 초래
- 보육비용 적용시간이 12시간 종일제로 획일화되어 있어 아동의 실제 이용시간과 부조화를 이루며,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 교사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실제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나, 보육료는 종일제로 단일화되어 있어 짧은 시간을 이용하고도 부모와 정부는 종일제 기준으로 부담
 - 오후 3시까지 하원하는 아동의 비율은 영아 23.0%, 유아 22.9%이며, 오후 6시 이후에 보육시설에 남는 비율은 영아 17.9%, 유아 22.7%
 - 취업모 아동의 평일이용시간은 0세아 9시간 28분, 1세아 8시간 54분, 2세아 8시간 18분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길게 나타남.

31) 서문희 외,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그러나 미취업모 자녀의 평일이용시간은 0세아 5시간 54분으로 1세아 6시간 53분와 2세아 6시간 23분에 비하여 오히려 짧음. 유아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

- 보육료는 0세아와 만1세아는 차이를 둔다는 비율이 35.1%와 38.1%인데 비하여 그 이상은 41%이고, 차등을 두는 경우 금액은 민간시설 평균 40,000원 정도임.

〈표 4-2〉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영아전체	만3세	만4세	만5세이상	유아전체
취업								
평균	9시간 28분	8시간 54분	8시간 18분	8시간 38분	9시간 1분	9시간 1분	8시간 29분	8시간 53분
표준편차	2시간 11분	2시간 6분	2시간 15분	2시간 13분	1시간 54분	1시간 44분	1시간 49분	1시간 51분
(수)	(22)	(76)	(112)	(210)	(138)	(69)	(67)	(274)
미취업								
평균	5시간 54분	6시간 53분	6시간 23분	6시간 44분	7시간 25분	7시간 16분	7시간 7분	7시간 19분
표준편차	1시간 33분	1시간 51분	1시간 38분	1시간 43분	1시간 38분	1시간 36분	1시간 43분	1시간 39분
(수)	(17)	(103)	(199)	(319)	(364)	(200)	(89)	(75)

주: 모부제 아동 3명(1명은 24시간 보육)이 포함됨.
 자료: 서문희·최혜진,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
 서문희 외, 『민간보육시설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평가』, 여성가족부, 2007, 원자료..

-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단축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보다는 제도 운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중 24.1%가 보육료 지원이 종일제 기준이기 때문으로 응답하였고, 13.9%가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 운영이 종일제로 명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
-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기는 보육시설을 12시간 운영하는 것과 아동이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교사의 8시간 근무원칙과 어긋남.
- 교사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7분으로 산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³²⁾)

32) 서문희 외,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표 4-3〉 12시간 종일제 이용 이동수 추정

(단위: 명, %)

구분	20인 이하 시설			일반 시설				
	0세아	1세아	2세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보육시설 이용이동수 ¹⁾	47,374	53,476	50,455	21,534	69,187	171,803	223,044	381,715
12시간종일제 이용비율	18.0 ²⁾						23.0 ³⁾	
12시간종일제 이용이동수	8,527	9,626	9,082	3,876	12,454	30,925	54,721	88,979

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보육통계』, 2009.

2) 서문희 외,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 원자료..

3) 서문희 외, 『민간보육시설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평가』, 여성가족부, 2007, 원자료..

나. 정책방안

(1)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비용 전액지원 등 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국가책임제를 확립하고, 두 번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소득기준 등 조건 없이 보육비용 전액 지원³³⁾

○ 영유아 차등 보육비용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 첫째아의 경우 0~4세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하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별도의 조건 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 확대

— 첫째아 만5세의 경우 2012년까지 전체 아동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고,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소득계층 제한 철폐

33) OECD 일부 국가들의 경우 유아 공교육체계 및 영유아 공보육교육체계가 확립되어, 부모는 비용의 20% 미만만 부담하되 출생순위별 차등 부담. 프랑스의 경우 공립유치원에서 주당 12.5시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영아를 대상으로 아동수별 차등비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부모 부담은 10% 수준 유지. 스웨덴의 경우 보육료 상한제를 적용하되 출생순위별로 차등 적용(첫째아 평균소득의 3%, 둘째아 2%, 셋째아 1%, 넷째 이상 무상). 일본과 호주의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비율을 출생순위별로 차등 적용(일본 일부 지역에서 셋째 이상아는 무상).

〈표 4-4〉 보육료 지원방안에 따른 예산규모 추정

내역	출생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
만5세아 전액 지원	첫째아	평균소득 100% 이하			5세아 전체	5세아 전체
	둘째아 이상	평균소득 100% 이하	5세아 전체	5세아 전체	5세아 전체	5세아 전체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	첫째아	0-4세 하위 50%	0-4세 하위 60%	0-4세 하위 70%	0-4세 하위 80%	0-4세 하위 80%
	둘째아 이상		0-4세 전체	0-4세 전체	0-4세 전체	0-4세 전체
소요예산(억원)		12,821	25,710	29,041	29,863	32,874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확대

-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2세미만 영아에서 3세미만 소득하위 80%이하 영유아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수준 조절
 - － 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은 기관 이용기회 제한으로 아동발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
 - － 양육수당 수준이 클 경우 여성취업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³⁴⁾
- 2010년부터 둘째아 이상 0~1세 아동에 소득수준의 조건없이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34)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가정에서의 영아보육을 권장한다는 보육철학에 의거하며, 공공보육시설 미이용자에 공공보육시설 이용 기회비용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영아 시설이용률은 인근 국가에 비하여 저조

〈표 4-5〉 양육수당 지급방안에 따른 예산규모 추정

내역	출생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확대	첫째아	차상위 0-1세 11만명	하위 60% 0-1세 30만명	하위 70% 0-1세 34만명	전체 80% 0-2세 49만명	전체 80% 0-2세 44만명
	둘째아 이상		0-1세 전체	0-2세 전체	0-2세 전체	0-2세 전체
	소요예산(억원)	324	2,016	4,247	5,308	4,674

(2)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 중산층이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수요계층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므로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³⁵⁾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 맞벌이가구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원 확대(계층 이동 대상자는 약 3만명으로 추정)

－ 맞벌이가구의 소득 중 일부를 차감하는 방안 검토

※ 예시 : 현재) 재산+소득{(A배우자소득 + A배우자소득) × 100%}
변경) 재산+소득{(높은 소득) × (낮은 소득) × 50%}

○ 소요예산은 2010년 242억원 규모로 추정

〈표 4-6〉 맞벌이가구 지원 보육료 추정

연도	2010	2011	2012	2013
소요 예산(억원)	242	392	491	491

(3) 보육시간별 비용 및 지원기준 이원화 : 종일제 추가 지원

□ 보육료 및 지원단가 적용 시간을 다양화하여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의

35) 세계 각국의 보육료 지원정책은 여성의 취업여부가 지원 대상,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스웨덴에서는 취업모의 경우 주당 15시간, 미취업모의 경우 40시간으로 보육비용 지원시간 제한. 호주에서는 기본이 주당 24시간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는 경우 등에 50시간까지 지원. 일본에서는 인가시설 입소자를 모취업, 장애가족 수발 등으로 가정에서 적절하게 돌보지 못하는 아동으로 제한.

합리성을 높이고, 교사 근로여건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보육환경 개선

- 유치원이 종일반 운영시 종일제 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도 유치원과 유사하게 기본형(오후 2~3시까지)과 종일제(오후 7시 전후까지) 이용 시스템 구축 필요³⁶⁾

□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용시간에 따라 기본형과 12시간 종일제형으로 이원화하고, 종일제의 경우 모의 취업 등 조건에 따라 적용 대상 제한

- 기본형의 이용시간은 5~6시간 보육으로 오후 2~3시에 귀가하며, 종일제는 7시 30분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
- 종일제 이용은 모의 취업이나 직업교육, 또는 가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존재하여 아동의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

〈표 4-7〉 보육시설 이용시간별 유형

이용시간	시간	지원대상	지원정도
기본형	5~6시간	전체	일반
종일제	8~12시간	취업모 등 가정사정을 반영하여 지원 허용	기본형 이외 지원 비율 추가

- 교사의 배치는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7시 전후에 귀가하는 아동 보육을 위해서는 유치원처럼 인력의 추가 배치를 원칙으로 함.
- 기본형의 경우 현 보육비용 지원체계를 일부 보완하고, 종일제의 경우 추가 배치교사 인건비 지원 등 국가부담을 높임.
 - － 기본형의 비용은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여 차등보육료의 차등체계

36) 외국 여러 나라가 보육비용 지원은 시간단위로 실시하여 합리성과 예산 사용의 효율성 증진. 스웨덴과 호주에서는 보육비용을 시간단위로 지원. 영국의 경우 4~5세 유아 무상 교육 시간은 주당 12.5시간으로 2020년에 15시간 확대가 목표. 일본에서 취업모 자녀 보육은 종일제가 원칙인데, 정해진 종일 보육시간 전후로 시간연장형 보육은 매우 엄격하게 시간단위로 비용이 추가.

를 새로이 구축하도록 함.

- 종일제의 경우 취업모 등 가정에서 아동을 적절하게 돌보기 어려운 부모에 한하므로 추가되는 비용은 국가가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도록 조정 필요

□ 소요예산

- 취업모 자녀에 한하여 종일제 교사 지원시 연 약 4,000억원 추가 소요
 - 보육아동 중 영아 18%, 유아 23%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

〈표 4-8〉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별 교사 지원액 추정

구분	전체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이상아
단시간 교사 (억원)	1953.1	378.3	400.5	517.9	247.4	408.9
종일제 교사 (억원)	3905.4	756.7	800.8	1035.3	494.7	817.9

주: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유형 전체의 연간 교사 인건비를 추계함.

2. 일-가정 양립제고 방안

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

□ 가임기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및 참가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출산과 경제활동의 양립을 저해하는 현행 제도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침.

- 임신 및 출산 후 1년 사이 경력 유지의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가 및 경력 유지를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추가 자녀 출산을 기피하게 됨.
-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경력단절되는 현상이 만연해 있으며 2자녀 이상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기간이 장기화되어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움.
- 출산기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할 계획이 없는 여성에게도 육아휴직급

여가 지급되는 현행 구조는 재정 비효율적임.

- 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현행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기업의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급여를 기업이 부담해야 함.
 - 고용보험기금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최대 135만원까지 지원함. 중소기업의 경우 135만원을 상회하는 부분은 기업이 부담해야 함. 대기업은 60일을 전액 부담해야 함.
 - 산전후휴가에 따른 기업 측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기업 내 우호적인 문화 형성이 지체되고 있음. 정규직의 경우에도 출산 전 직장을 나 오는 사례가 많이 있음.
- 육아휴직급여제도는 고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음.
 - 2001년 월 20만원 정액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 월 50만원 수준임. 현행 제도는 12개월 동안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9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이 6개월 이하 사용자에 비해 크게 낮음. 육아휴직 후 미복귀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육아휴직 이용률은 2008년 40%대로서 선진국의 80-90%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육아휴직 기간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기업은 기업부담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퇴직금 역시 부담해야 함. 연금의 경우 납부유예를 할 경우 여성근로자의 노후 불안의 문제가 남아 있음.

나. 외국사례

- 산전후휴가급여를 대부분 사회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 산전후휴가급여를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임. 대부

분의 나라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사회적으로 부담함.

- 산전후휴가급여의 재원은 대부분 사회보험으로 조달하며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모보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음.
- 육아휴직제도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단일한 최선의 육아휴직제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육아휴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부터 장기간 높은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나라까지 다양하게 존재함. 육아휴직급여의 재원 역시 조세, 사회보험 등 다양함.
 - 육아휴직급여를 출산전 임금과 연동하는 정률제의 경우 출산 전에 직장 내 안정적 지위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여성 고용률의 제고에 기여함.
- 선진국 중 여성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일이 최근 고용친화적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였음.
 - 한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일본은 이미 정률제 육아휴직급여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 여성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독일 역시 최근 정률제로의 개혁을 실시하였음.
 - 독일의 경우 오랜기간 정액의 육아수당을 장기간(3년)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양육을 양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제도를 대폭 개혁했음. 핵심적인 개혁 내용은 육아휴직기간을 단축하고 정액이 아닌 출산전 임금수준에 연동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임.
-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자녀수를 연계함으로써 출산을 제고를 도모하는 사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다자녀 여성의 경우에 완화하는 방식을 취함.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첫째 자녀는 6개월, 둘째 자녀는 3년을 부여함.
 - 스웨덴의 경우 연속으로 출산할 경우 육아부담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함.

○ 이에 비해 출산자녀수와 육아휴직급여액을 연계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표 4-9〉 OECD 주요국의 산전후휴가제도 비교

구분	휴가기간	유급휴가 기간	정률급여의 출산전 임금 대비 비율	정률급여 상한액의 APW 대비 비율	비고
미국	12주	0주	0%	-	가족휴가
호주	-	-	0%	-	법적 권리 없음
그리스	17주	17주	100%	122%	
아일랜드	34주	22주	70%	71%	
포르투갈	17주	17주	100%	상한 제한 없음	
스페인	16주	16주	100%	188%	
영국	52주	26주	90%	상한 제한 없음	초기 6주는 90%, 나머지 20주는 정액급여
네덜란드	16주	16주	100%	189%	
이탈리아	20주	20주	80%	상한 제한 없음	
일본	14주	14주	60%	상한 제한 없음	
캐나다	17주	15주	55%	53%	
핀란드	17.5주	17.5주	66%	상한 제한 없음	
헝가리	24주	24주	70%	상한 제한 없음	
아이슬랜드	13주	13주	80%	227%	
스웨덴	-	-	80%	118%	450일의 육아휴직과 통합되 어 있음.
덴마크	18주	18주	100%	50%	고용주가 첫 2주 휴가급여 부담, 이후 지방정부 부담.
에스토니아	20주	20주	100%	상한 제한 없음	
슬로베니아	15주	15주	100%	상한 제한 없음	
노르웨이	9주	9주	100%	112%	
체코	28주	28주	69%	102%	
독일	14주	14주	100%	상한 제한 없음	고용주 부담 원칙, 사회보험 일부 부담
한국	12주	12주	100%	상한 제한 없음	고용주 부담 원칙, 사회보험 일부 부담. 초기 8주는 정률, 이후 4주는 정액급여.
벨기에	15주	15주	82%	상한 제한 없음	첫달은 82%, 이후는 75%
프랑스	16주	16주	100%	126%	

자료: Moss and O'Brien,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06』,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No. 57, 2006. ; Susan Kell Associates, 『Parental Leave and Carers Leave :International Provision and Research』, Department of Labour, UK, 2006. ; OECD, 『Women and Men in OECD Countries』, Paris, 2007.

〈표 4-10〉 OECD 주요국가의 육아휴직제도 비교

구분	급여 지급 방식	급여지급 기간	전체 휴직기간	정률급여의 출산전 임금 대비 비율	정률급여 상한액의 생산직 평균임금 대비 비율	정액급여의 생산직 평균임금 대비 비율	비고
미국	없음	0개월	0개월	0%	-		가족휴가 12주가 무급으로 있음.
호주	무급	0개월	12개월	0%	-		
그리스	무급	0개월	3.5개월	0%	-		
아일랜드	무급	0개월	3.2개월	0%	-		
포르투갈	무급	0개월	3개월	0%	-		
스페인	무급	0개월	32개월	0%	-		
영국	무급	0개월	3개월	0%	-		
네덜란드	무급	3개월	3개월	0%	-		
이탈리아	정률	6개월	6개월	30%	-		
일본	정률	10개월	10개월	40%	-		10%p는 직장복귀 6개월후 지급
캐나다	정률	8개월	8.5개월	55%	42%		
핀란드	정률	6개월	6개월	66%	-		
헝가리	정률	18.4개월	18.4개월	70%	83%		
아이슬란드	정률	3개월	3개월	70%	227%		
스웨덴	정률	12.8개월	15.8개월	80%	118%		마지막 3개월은 정액
덴마크	정률	7.3개월	7.3개월	54% ³⁷⁾	50%		
에스토니아	정률	31개월	31개월	100%	109%		
슬로베니아	정률	8.5개월	8.5개월	100%	-		
노르웨이	정률	8개월	24개월(54주+1년)	100%	-		10.3개월 받을 때는 80%, 아버지쿼터 6주
체코	정액 또는 정률	29개월	29개월	10%	-	18%	
독일*	정률	24개월	24개월	67%	-	-	
한국**	정액	12개월	12개월		-	18%	2007년 50만원 기준
벨기에	정액	3개월	3개월		-	25%	
프랑스	정액	32개월	32개월		-	27%	

주 : * 독일은 2006년까지 정액급여였음.

** 한국의 경우 2008년부터 12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됨.

자료: Moss and O'Brien,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06』,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No. 57, 2006. ; Susan Kell Associates, 『Parental Leave and Carers Leave :International Provision and Research』, Department of Labour, UK, 2006. ; OECD, 『Women and Men in OECD Countries』, Paris, 2007. ; Ray, 『A Detailed Look at Parental Leave Policies in 21 OECD Countries』, CEPR, 2008. ; 민희철 외,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혜원 외, 『산전후휴가급여 사회화 확대 검토』, 노동연구원, 2008. ; EU, MISSOC, 2007.

37) 생산직의 경우임. 비생산직의 경우 30%. Ray(2008) p. 10 참조

〈표 4-11〉 OECD 주요국가의 육아휴직급여의 재원 비교

구분	급여 지급 방식	사업주 지급 의무 여부	국가 부담 여부	재원	급여 수급자격요건	휴직 수급자격 요건	비고
미국	없음	-	-	-	-		
호주	무급	-	-	-	-		
그리스	무급	-	-	-	-		
아일랜드	무급	-	-	-	-		
포르투갈	무급	-	-	-	-		
스페인	무급	-	-	-	-		
영국	무급	-	-	-	-		
네덜란드	무급	-	-	-	-		
이탈리아	정률			사회보험	근속기간 제약 없음	근속기간 제약 없음	
일본	정률	없음	있음	고용보험	육아개시전 2년 동안 12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제 일용직 제외 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개시전 1년 이상 근속에 계속 근무 예상자	일용직 적용제외
캐나다	정률	없음	있음	고용보험	연방기준 6개월 이상 근속 ³⁸⁾		
핀란드	정률	없음	있음	건강보험	출산예정일 전 최소 30주 보험 가입		
헝가리	정률	없음	있음				
아이슬랜드	정률	없음	있음	모성육아휴직 기금(기여금+조세)	출산전 6개월간 취업		조세는 비취업 여성을 위한 정책급여에 사용됨
스웨덴	정률	없음	있음	사회보험의 하나로써 육아보험	출산예정일 이전 240일 동안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가 통합되어 있음
덴마크	정률	없음	있음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조성되는 노동시장기금		휴직 직전 13주 사이 120시간 이상 고용 13주 사이 자영업 활동 여유금 또는 훈련 중	
에스토니아	정률	없음	있음				
슬로베니아	정률	없음	있음				
노르웨이	정률	없음	있음	사회보험	휴직신청전 10개월 중 6개월 취업		3세 생일까지 추가로 무급의 1년 휴직 가능
체코	정액 또는 정률	없음	있음				
독일	정률	없음	있음	일반조세	없음	없음	3세 생일까지
한국	정액	없음	있음	고용보험	육아휴직 개시전 18개월 중 6개월 고용보험 가입	출산전 1년 동안 근속	2007년 50만원 기준

〈표 4-11〉 계속

구분	급여 지급 방식	사업주 지급 의무 여부	국가 부담 여부	재원	급여 수급자격요건	휴직 수급자격 요건	비고
벨기에	정액	없음	있음	사회보험	육아휴직개시전 15개월 중 12개월 근속		
프랑스	정액	없음	있음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가족급여기금	첫째 자녀의 경우 출산전 2년 동안 연속하여 근속. 셋째 자녀의 경우 5년 중 2년 근무.	출산전 1년 동안 근속	휴직은 만3세가 될 때까지 보장 급여는 첫째 자라는 6개월 지급 둘째 이후부터는 3년 지급

자료: Moss and O'Brien,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06』,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No. 57, 2006. ; Susan Kell Associates, 『Parental Leave and Carers Leave :International Provision and Research』, Department of Labour, UK, 2006. ; OECD, 『Women and Men in OECD Countries』, Paris, 2007. ; Ray, 『A Detailed Look at Parental Leave Policies in 21 OECD Countries』, CEPR, 2008. ; 민희철 외,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혜원 외, 『산전후휴가급여 사회화 확대 검토』, 노동연구원, 2008. ; EU, MISSOC, 2007.

다. 제도설계

-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 수준을 제고하여 사업주의 가임기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완화하여 경력유지 희망 여성의 출산 욕구를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현행 대기업에 대한 1개월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3개월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 현행 135만원의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장기적으로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강화. 이를 위해 2010년에는 155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고용 친화적 개편을 통해 경제활동과 출산의 조화 추구
 - 육아휴직제도의 취지가 직장복귀를 돕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늦은 복귀 또는 미복귀를 선택하는 이들에 비해 빠른 복귀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속적으로 기존 직장을 유지하는 이

38) 많은 지방에서 12개월 정도의 근속 요건 부과

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있음.

- 빠른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육아휴직 초기 6개월의 지급액을 후기 6개월의 지급액에 비해 높여서 차등화하는 개혁이 필요함.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처럼 조기 복귀자에 대해 복귀로 인해 절약된 육아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귀 6개월 후에 보너스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원직장 복귀 후 계속 취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신설. 예를 들어 복귀 후 6개월까지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경우 150만원의 복귀 축하금 지급
 - ※ 일본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액 중 1/4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직장 복귀 후 6개월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 변경할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정률제 개편

- 현행 정액급여 수준(50만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것은 재정효율적이지 않음. 출산전 임금과 연동되는 정률급여제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임. 앞서 제안한 것처럼 고용친화적 개편을 위해 초기 6개월의 지급액을 높이되 정률제 방식으로 높이는 것을 제안함.
- 육아휴직 초기 6개월 동안은 현재 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액을 정률급여의 하한액으로 하고 출산전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며 이후 6개월은 50만원의 정액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함.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설정되어야 하며 그 수준은 캐나다 수준인 100만 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육아휴직급여를 100만원 상한의 정률급으로 변화시킬 경우 중간수준 임금을 받는 여성들의 육아휴직 활용 요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행 육아휴직 사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저임금 여성은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 유인이 낮게 유지될 것임. 그렇다고 현금급여를 높이는 것보다는 저임금 여성을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지원책임.

- 육아휴직기간 중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액의 사회적 부담 확대
 - 육아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의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에 비례한 감면 추진
 -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연금보험료(근로자 개인 및 사업주 부담금)를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원하는 방안 추진
 - 육아휴직자를 위한 퇴직금 적립액의 정부 지원 검토
- 육아휴직급여제도와 출산자녀수의 연계 검토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둘째 자녀 이후의 경우 연장. 첫째 자녀의 경우 정률제를 6개월 적용하고 둘째 자녀 이후부터는 12개월 적용하는 것으로 고안함으로써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이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 다자녀 출산자의 경우 육아휴직후 원직장 복귀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3.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1) 주거지원제도 현황

- 주거복지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거요소(housing needs)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이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³⁹⁾.
 - 주거복지의 구성은 물리적 측면, 주거환경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물리적 측면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의 달성 및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기반 제공, 기존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지원, 주거환경적 측면에서는 주택내부 환경(새집증후군 방지 주택 공급), 무장애 주택 공급 및 개보수 지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주거비 지불능력 향상, 자활 촉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촉진 등을 들 수 있음.

□ 주거복지달성을 위한 주거지원제도의 범주

- 주택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제도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
 - － 첫째, 일차적 수혜자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공급자 지원제도와 소비자 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 둘째, 지원방법 기준으로는 직접적 지원(택지공급, 주택공급, 보조금 지원, 융자 등)과 간접적 지원(세금감면, 할인, 규제-임대료 통제, 분양가 규제 등)의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음.
 - － 셋째, 수혜자의 주택소유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자가소유자 지원과 세입자 지원으로 대별됨. 후자는 다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와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로 구분됨.
 - － 넷째, 지원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자본비용(capital) 보조와 운용비용(revenue) 보조로 대별됨.

39) 김영태, 『주거복지의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 17. 한국주거학회, 2006.

〈표 4-12〉 주거지원제도의 종류와 범주

구분	자가소유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급자 지원	민간개발업자 등 지원: 토지공급, 금융지원 분양가 규제	공공임대주택공급자 지원: 토지공급, 금융, 재정지원	임대사업자지원: 건설, 매입, 세제지원 등
수요자 지원	자가주택구입자 지원: 구입자금융자, 이자감면, 세금감면, 수리비보조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지원: 임대료 보조(할인)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지원: 임대료 보조 전세자금 융자
중간형태		임대료 통제	임대료 통제

자료: 김영태, 『주거복지의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 17. 한국주거학회, 2006.

□ 우리나라의 현행 주거지원정책은 지속적인 신규주택 및 물량확보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에비중을 두어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주택점유유형변화와 가구의 주거비부담정도변화를 살펴보면, 월세가구⁴⁰⁾는 1995년 14.5%, 2000년 14.8%, 2005년 19.0%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5년도 현재 임차 및 무상거주가구의 비율은 여전히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소득대비 주택가격(PIR)⁴¹⁾도 상승추세로 1997년 4.6%, 2000년 5.0%, 2007년 6.6%로 선진국 PIR 국제 평균치 5.2%보다 높으며, 임대가구의 임대료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RIR(Rent/Income Ratio, 월소득대비 주거임대료)도 1995년 20.9%, 2001년 18.3%, 2002년 21.3%로 선진국의 RIR 평균 16% 보다 높아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이 적은 현실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현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을 제정하여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수도권 100만, 지방 50만)로 향후 10년간(2009~2018) 연평균 수도권 30만호(60%), 지방 20만호(40%)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공에서 건설·공급할 예정으로 중소

4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1995, 2000, 2005)

41) 2007년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형 분양주택 70만호, 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80만호, 영구임대 공급 재개로 10만호 등을 포함하여 전세형·지분형 등 임대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주소요기간도 현행 5~6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할 예정에 있음.

- 이렇듯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이 추진되더라도, 공공주택공급의 택지확보 등 단기간의 물량확보가 어려워 한정되어 있고 용자지원도 자격요건과 지원수준이 비현실적이며 일관적이지 못한 주거지원제도체계 등으로 발생하는 형평성, 효율성 측면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음.

(2) 출산장려 주거지원제도 현황

-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09년 상반기까지 58,142호) 중 신혼부부에게 908호가 지원되었으며 '09년에 5,000호, 12년까지 총 20,000가구를 지원할 계획
 - 본 사업은 '08년 하반기 시범사업 후 올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올 상반기(3,5월) 입주자를 모집한데 이어 8월 중 추가 모집할 예정
 - 본 사업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 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
- 또한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다자녀가구에 일반·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일반주택자금에 비해 대출규모·이자율 등을 우대하고 있음.
 -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 물량의 3%이내 특별공급
 - － 공급실적 : ('06) 935호 → ('07) 3,611 → ('08) 2,012
 - －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자녀 및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주택청약시 우대하여 당첨확률 제고
 - 부양가족수는 타 항목(무주택기간 32점, 통장가입기간 17점)에 비해 가점비중(35점)이 높고, 등급간 격차도 큼(1자녀당 5점 가점)

-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의 3%를 다자녀가구에 우선공급
 - 공급실적 : ('06) 497호 → ('07) 1,391 → ('08) 1,295
 - 우선공급 외 물량에 대해서도 가점부여(3자녀이상 3점, 2자녀 이상 2점), 소득기준 완화적용 등 우대

〈표 4-13〉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08년)

가구원수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3인 이하	2,726,296원	5인	3,069,143원
4인	2,993,649원	6인 이상	3,631,672원

자료: 통계청, KOSIS.

- 구입자금은 일반대출한도(1억원)보다 50% 상향적용(1.5억원)하고, 전세자금도 8천만원까지 대출(일반 6천만원)
 - 지원실적(건수) : ('06) 1,034억(2,333) → ('07) 1,192(2,438) → ('08) 1,100(2,000)
 - 구입자금 이자율도 0.5%p 우대적용(일반 5.2%, 다자녀 4.7%)
- 더욱이 본 사업은 향후 다자녀가구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공급물량을 더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음(현재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확대, 우선공급 물량도 5% 추가배정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우선공급물량은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 시 자격요건을 만족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임.
 - 다자녀국민임대주택 신청/배정현황 : ('07) 1,427/1,391 → ('08) 1,509/1,295

(3) 출산장려 주거지원제도 문제점

- 현행 공공임대주택지원제도는 입주대상기준으로 소득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원수준도 주택크기에 따라서만 차별화되어 있어 가구원수나 자녀연령 및 자녀수, 그리고 주거비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의 단순한 물량확대는 다자녀가구의 주거지원방안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 또한 임대주택 간에 자격기준이 달라서 소형의 영구임대나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입주한 가구가 자녀수나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여 주거요구수준이 증대될 경우 임대주택간의 이동도 어려운 상황임.
- 임대료 수준도 입주가구의 소득대비 자녀수를 고려한 주거비 지불능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입주간에 비형평적인 문제가 발생함.
-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지역의 슬럼화,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로 교육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는 입주를 기피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공급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비경감지원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일정수준의 주택물량 채고를 감안하여 두 방식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자금지원의 경우도 대상주택의 크기에 제한을 두어 일정 주택크기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저리의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물량 확보로 융자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 더욱이 직접적인 주거비를 경감해주는 주택수당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며 현행 주거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이하가구로 한정되어 있고 주거용도로도 지급하고 있지 않아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한정된 공공임대주택공급과 제한적인 융자지원은 극히 일부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당수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와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하며, 다자녀가구의 주거욕구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확대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나. 필요성 및 목적

- 자녀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의 주거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지원수단을 고려하여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본 고

에서는 주거지원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주거욕구를 고려한 면적과 방수, 그리고 주거비 지출 등의 주거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1) 다자녀가구의 주거욕구실태

□ 최저주거기준

- 국토해양부가 2004년 6월 15일 공고한 주거수준에 대한 기준으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하며, 크게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면적기준, 최소방의 수에 대한 침실기준, 주택의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시설기준, 주택의 상태와 주거환경에 관한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구성됨.
- 현재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기준의 내용과 수준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표 4-14〉 최저주거기준

①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 주거면적(m ²)
1	1인가구	1 K	12 (3.6평)
2	부부	1 DK	20 (6.1평)
3	부부+자녀1	2 DK	29 (8.8평)
4	부부+자녀2	3 DK	37 (11.2평)
5	부부+자녀3	3 DK	41 (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 (14.8평)

- K: 부엌, DK: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 침실분리기준: 부부침실확보,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침실분리,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는 상호분리,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②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확보			

③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영구건물로서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확보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구비			
-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			

주: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기준. 6인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자료: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173호.

□ 최저주거기준 미달정도

- 자녀수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여 해당 가구들의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방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95.93%가 방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대부분이 방수에 있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상태임을 알 수 있음.
- 면적 기준에 있어서도 자녀수가 많은 다자녀가구에서 미달가구의 발생비율이 높음.
- 따라서 자녀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방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방식과 수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4-15〉 방 기준 미달가구

(단위: %)

구분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평균
방수	충족	94.14	88.67	67.01	4.07	83.82
	미달	5.86	11.33	32.99	95.93	16.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자녀는 동거하고 있는 18세 이하 자녀를 뜻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8)

〈표 4-16〉 면적 기준 미달가구

(단위: %)

구분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평균
면적	충족	99.71	99.22	98.35	94.31	99.13
	미달	0.29	0.78	1.65	5.69	0.87

주: 자녀는 동거하고 있는 18세 이하 자녀를 뜻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8)

□ 주거비부담정도⁴²⁾와 주거점유형태

- 가구의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비율은 감소하고

42) 가구의 주거비 부담정도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임대료가 20~30%를 넘지 않는 수준을 주거비 부담의 적정선으로 봄.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18세이하 자녀가 많을 수록 자녀의 양육부담으로 소득원수가 줄고, 동일한 소득수준일 경우 자녀수의 가구균등화지수를 감안하면 자녀수가 많을 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은 상태이고,

- 자녀수가 증가함에따라 주거요구수준은 높아져야하나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실제지불하고 있는 주거비를 줄이는 상황임.

〈표 4-17〉 임차가구의 실제지불임대료 기준 주거비부담(RIR)

(단위: %, 월, 천원)

구분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평균
RIR	22.01	14.77	13.97	11.85	18.30
평균소득	2,295	3,500	3,811	3,208	2,920
평균 임대료	323	442	465	340	380

주: 1) 자녀는 동거하고 있는 18세 이하 자녀를 뜻함.
2) 임차가구(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3) RIR(rent income ratio)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로서 소득은 경상소득기준이며, 임대료는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전세 및 월세의 보증금을 연이율 10%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한 값에 월세를 더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8)

- 실제임대료와는 달리 공공부조성격의 정책지원인 최소한의 주거비용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주거비를 적용하여 주거비 부담 정도를 살펴볼 경우에도 자녀수가 많아지면 최저주거비수준정도의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4-18〉 임차가구의 최저주거비 기준 주거비부담(RIR)

(단위: %, 월, 천원)

구분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평균
RIR	7.30	8.28	9.46	9.17
최저 주거비	171,901(3인)	231,012(4인)	248,329(5인) 284,413(6인)	

주: 1) 자녀는 동거하고 있는 18세 이하 자녀를 뜻함.
2) 임차가구(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3) RIR(rent income ratio)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로서 소득은 경상소득기준이며, 임대료는 전세 및 월세의 보증금을 연이율 10%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한 값에 월세를 더한 값임.
4) 최저주거비는 실태조사기준인 2007년도 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의 1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8)

- 따라서 상당수가 기준미달가구인 다자녀 가구는 적절한 주택지원이
나 직접적인 주거비경감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음. 동시에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주거비지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더욱이 주거불안정정도의 측면에서 다자녀가구의 임차형태를 보면, 3
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월세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의 경우는 임대료 채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높음.

〈표 4-19〉 임차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평균
전세	56.83	59.82	42.92	51.24
월세	43.17	40.17	57.08	48.76

주: 1) 자녀는 동거하고 있는 18세 이하 자녀를 뜻함.
2) 임차가구 중 보증부 월세는 월세에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8)

(2) 국민임대주택 거주 다자녀가구의 주거수준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도 입주일반가구에 비해 넓
은전용면적에 거주하여 임대료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2008년말 입주가 이루어진 10만 9,904호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
는 가구중 3.6% 인 3,953가구가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임(3자녀
는 3,660가구이고 4자녀 이상은 293가구)
- 다자녀 가구의 주택 규모별 입주현황을 보면, 93%가 41㎡를 초과하
는 임대주택에 거주
 - － 다자녀 가구의 경우 41~49㎡ 46.9%, 51~59㎡ 46.2% 거주하는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넓은 주택에 거주

〈표 4-20〉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규모별 입주비율

전용면적(㎡)	주택공급호수	다자녀 가구수(가구비율)		
		합계	3자녀	4자녀 이상
23~29	1,016	11(1.1%)	11(1.08%)	-
33~39	32,844	264(0.8%)	253(0.77%)	11(0.03%)
41~49	40,474	1,853(4.6%)	1,719(4.25%)	134(0.33%)
50~59	35,570	1,825(5.1%)	1,677(4.71%)	148(0.42%)
Total	109,904	3,953(3.6%)	3,660(3.33%)	293(0.27%)

자료: 대한주택공사 내부자료(2008년)

〈표 4-21〉 국민임대주택 다자녀 가구가 부담하는 임대료와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평균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의 임대료 환산+월임대료
3자녀 이상인 가구의 평균 임대료	20,625,111원	148,573원	320.449원
국민임대주택 단지 평균 임대료	19,674,720원	142,682원	305,376원

자료: 대한주택공사 내부자료(2008년)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 41㎡ 이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거비 부담이 클 수 있음.
- 이는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가구의 주거비지불능력을 고려한 임대료지원이 전혀 없이 거주면적만을 중심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문제에서 야기된 것임.

다. 외국사례⁴³⁾

□ 프랑스의 주거비지원

- 사회정책의 무게중심을 가족정책에 두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주택수당이 가족급여 중 1개의 급여로 지급되며, 가족주택수당(ALF;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과 사회주택수당(ALS;

43)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스웨덴의 자녀수를 고려한 주거비지원제도와 외국의 주거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으로 구성됨.

- 가족주택수당은 도입 당시 2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 현재 지원대상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 ①결혼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중, 현재 자녀가 없고 결혼당시 양측 모두 40세 미만이었던 경우, ②1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③적어도 65세 이상의 부모 1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 ④장애율이 적어도 80%에 이르는 직계 및 방계 존·비속과 동거중인 가구

□ 스웨덴의 주거비지원

- 스웨덴의 주거비지원은 일정수준의 소득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Housing Allowance, 사회부조를 받는 수급가구에 지급하는 Housing Assistance, 그 외 연금수급자를 위한 BTP, SBTP, KKB 등이 있음.
- 그 중 Housing Allowance는 자녀수(가구원수), 결혼여부, 주거비용, 주택규모,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최대 급여 수준이 결정됨. 현재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중 50% 이상은 주택수당을 받고 있음.
 - Housing Allowance의 일부는 가족수당으로서 여겨지며, 만약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살고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자녀에 따라서는 최대 1명 SEK 2,600, 2명 SEK 3,200, 3명 이상 SEK 4,000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동거만 하고 있어도 자녀1명 SEK 950, 2명 SEK 1,325, 3명 이상 SEK 1,750를 받을 수 있음 (<http://www.rfv.se>).
- 1996년 이후 29세 이상의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Housing Allowance의 수급자가 상당히 감소하였음.

※ 자녀지원 정책으로서 주거비지원 실시 국가

- 스웨덴(1930년대), 프랑스(1948년), 핀란드(1962년), 스위스(1963

년), 덴마크(1964년)는 대가족(특히 자녀 지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함.

- 자녀수가 많을수록 생활고가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가족(자녀)수당제도로써 주거비 지원정책을 도입함.

□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 일본, 영국, 프랑스 및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4-22〉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일 본	영 국	프랑스	한국
현행제도 도입시기	제3차 주택건설 5개년계획(1976)	주택법(1985)	건축·주택법 (1984)	주택법 (2004)
기준규정 형태	구체적 · 면적기준 · 시설기준 · 환경기준	추상적 · 인간정주에 적합 · 개인의 편안함 · 기본적 쾌적성	구체적 · 면적기준 · 시설기준 · 환경기준	구체적 · 면적기준 · 시설기준 · 환경기준
최소주거 면적	4인 기준 50㎡	○ 방수에 따른 주택 수용허용인원 · 3인 기준-방2 · 5인 기준-방3 ○ 방 면적에 따른 주택수용허용인원 · 1인: 6.5㎡ · 2인: 10.22㎡	4인 기준 56㎡ (추가1인당 10㎡)	4인 기준 37㎡
1인당 주거면적	10.9평('03년)	11.5평('02평)	11.2평('02평)	6.9평('05년)
침실분리 기준	부모자녀분리: 6세 이성분리: 12세	이성분리: 10세	이성분리: 7세 동성분리: 19세	부모자녀분리: 6세 이성분리: 8세
필수 구비시설, 환경기준 등	부엌, 욕실, 화장실 등 ○ 환경기준 · 재해관련 안전성 · 소음, 진동, 대기 오염, 악취 등	부엌, 욕실, 화장실, 상하수도 등 * 별도 환경기준 없음	부엌, 욕실, 화장실 등 ○ 환경기준 · 대중교통 소음으로부터 격리 · 침수로부터 보호	부엌, 욕실, 화장실 등 ○ 환경기준 · 재해관련 안전성 · 소음, 진동, 대기, 오염, 악취 등

자료 : 국토해양부, 『2007년도 임대주택 업무편람-매뉴얼』, 2007.

라. 다자녀가구 주거지원방안

□ 다자녀 주거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주거지원제도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구특성을 고려한 가구 중심의 주거지원체계로 전환
- 주거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비 경감지원 방안 도입

(1) 현행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제도개선

□ 공공임대주택지원제도

- 자녀수와 자녀연령을 고려하여 적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 － 현행 임대주택수준에 따라 일정소득이하만을 고려하고 있어 과밀한 주거생활의 가능성이 높음.
 - － 동시에 주택크기에 따른 임대료 수준을 가구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함.
- 현행 다가구 매입이나 전세임대 중 일부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공동생활거주 물량 일부도 최저소득층의 다자녀가구에 배정
 - － 현행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는 다자녀가구특성은 배제되어있음.
- 임대주택 간에 탄력적으로 이동가능하도록 현실화
 - － 예컨대 신혼전세임대주택 입주당시와 달리 자녀수 등의 증가로 인한 경우 주거요구가 높아지나 일정기간 지속적인 주거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출산장려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가구별 계단식 주거자립지원방안이 필요
 -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신혼전세임대, 다가구매입 임대 등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자격기준을 일원화 즉, 일정 소득수준 이하로 입주자격을 단순화하고 가구소득, 가구순자산,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자녀수, 가구원수, 노인 및 장애인가구 여부, 사회취약계층 등을 고려하고 임대주택간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입주자 편익을 증대시키도록 함.

□ 용자지원제도

- 현행 제도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은 유지하되 대출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므로 주택면적의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함.
- 현재 85㎡이상 거주 다자녀가구는 저리의 용자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전세(매매)대출규모에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주면적의 제한은 부적절함.

(2) 신규: 주거비경감을 위한 다자녀 가족주택수당지원⁴⁴⁾

□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가구
-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기준은 임대일 경우 평균소득의 50~70%임.

□ 지원수준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수준을 반영한 시세와 최저주거비의 차액인 130,000원
- 국민임대주택거주 3자녀이상 가구의 월평균 임대료 320,449원(시세의 80%)의 시세 약 400,561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최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인가구 최저주거비(주거급여 상한선) 271,120원 정도는 자부담의 원칙을 적용
-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 증가할 때마다 월 40,000원(월 평균임대료 시세의 0.1%)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44) 참고로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주택정책의 다자녀가구 공공주택지원과 주거비지원(주거급여나 주택수당)과는 별도로 가족복지정책의 하나로 사회복지기금재원으로 자녀수를 고려한 가족주택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표 4-23〉 2009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및 최저주거비

(단위: 월,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주거비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주: 1) 2009년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 적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8)

※ 참고

임대료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1인 증가 시 0.1%의 임대료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주택바우처를 위한 가구의 소득산정 시 방수 1개 당 소득을 약 0.1% 씩 조정하고 있음.

〈표 4-24〉 주거비 가구균등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이태진(2008)	0.690	0.783	0.891	1.000	1.060	1.190
김진옥(2003)	0.697	0.818	0.926	1.000	1.051	1.155

주: 1) 이태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주거급여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 김진옥, 「계층별 동등화 소비단위」, 『공공경제』, 제 8권, 2003.

〈표 4-25〉 소득별 침실조정수(Number of Bedrooms Adjustment to Income) 사례

침실(Bedroom)	조정계수(Adjustment)
0	0.70
1	0.75
2	0.90
3	1.04
4	1.16
5	1.28
6	1.40
7+	1.40+0.12(bedrooms-6)

자료: Housing Affordability DATA System, 2007

□ 대상가구 및 예산 추계

- 통계청의 2009년 추계가구 자료에 의해 대상자 및 예산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선정기준을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1안), 120%(2안), 130%(3안)으로 추정

※ 참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675천원, 4인가구 월평균소득 4,026천원(2007년도 기준)

〈1안〉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675,400원) 100% 이하

- 대상자 -

	전체가구	임차가구	100% 이하 가구	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녀 3명 가구	자녀 4명 가구
표본 (복지패널 3차)	(A) 100%	(B) A의 34.7%	(C) B의 75.2%	(D) C의 4.1%	D의 96.7%	D의 3.3%
모수추정 (09년 기준)	16,916,966	5,865,112	4,408,218	180,737	174,845	5,892

- 예산 -

		3자녀 가구	4자녀 가구	월 지원 합계
대상가구		174,845	5,892	
지원액	가구당 (원)	130,000	170,000	
	월 지원(원)	22,729,850,000	1,001,640,000	
총계(년, 원)		284,777,880,000		

〈2안〉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675,400원) 120% 이하

- 대상자 -

	전체가구	임차가구	100% 이하 가구	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녀 3명 가구	자녀 4명 가구
표본 (복지패널 3차)	(A) 100%	(B) A의 34.7%	(C) B의 82.4%	(D) C의 4.6%	D의 97.4%	D의 2.7%
모수추정 (09년 기준)	16,916,966	5,865,112	4,831,679	222,740	216,838	5,903

- 예산 -

		3자녀 가구	4자녀 가구	월 지원 합계
대상가구		216,838	5,903	
지원액	가구당 (원)	130,000	170,000	
	월 지원(원)	28,188,940,000	1,003,510,000	
총계(년, 원)		350,309,400,000		

〈3안〉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675,400원) 130% 이하

- 대상자 -

	전체가구	임차가구	100% 이하 가구	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녀 3명 가구	자녀 4명 가구
표본 (복지패널 3차)	(A) 100%	(B) A의 34.7%	(C) B의 85.8%	(D) C의 4.8%	D의 97.6%	D의 2.4%
모수추정 (09년 기준)	16,916,966	5,865,112	5,032,266	243,058	237,152	5,906

- 예산 -

		3자녀 가구	4자녀 가구	월 지원 합계
대상가구		237,152	5,906	31,833,780,000
지원액	가구당 (원)	130,000	170,000	
	월 지원(원)	30,829,760,000	1,004,020,000	
총계(년, 원)		382,005,360,000		

마. 기대효과

- 가구의 주거비 지불능력(housing affordability) 신장수단으로 직접적인 주거비를 경감을 통한 자녀양육부담에 대한 완화
- 주거불안정성의 해소로 자녀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수준 향상
- 동시에 주거빈곤문제의 해결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사회적 투자
- 다자녀 가구소득의 약 5%p인 직접적인 주거비 경감을 통하여 출산율 0.11명이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만약 일부의 가구가 주거비부담 등으로 향후 빈곤층으로 전락되어 지속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탈빈곤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사전에 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투자 지원정책이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제2절 중장기 정책 과제

1. 아동수당 도입 방안

가. 사업 목적

□ 아동복지권 실현

- 아동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아동이 적절한 성장 및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음.

□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통한 미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

- 아동에 대한 생애 주기적 사전 예방적 투자를 통하여 인적자본 확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본을 마련
- 아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권리증진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해 미래 핵심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소득지원과 형평성 제고

- 자녀양육 가정과 무자녀 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과 작은 가정의 소비격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차이를 완화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소득재분배를 통한 형평성 제고

□ 아동빈곤을 제고 효과

-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10~15%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동수당의 도입은 아동빈곤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녀양육비용의 부담 경감

- 자녀양육비의 국가 부담을 통한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 양육비용부담 경감으로 인한 출산율제고 효과

나. 외국 사례

□ 아동수당의 대상, 지급액, 출산증진관련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음.

- 일본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월 5,000엔(약 63,000원), 셋째 자녀에 월 10,000엔(약 127,000원)을 초등학교 수료 전까지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으로 지급함.
- 독일은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까지 월 154유로(약 270,000원), 그 이후의 자녀에 자녀 당 월 179유로(약 314,000원)를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아동수당(Child benefit)으로 지급함.
- 프랑스는 둘째 자녀에 월 119.13유로(약 225,000원), 셋째 자녀에 월 271.75유로(약 476,000원), 넷째 자녀에 월 424.37유로(약 744,000원)을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게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으로 지급하며, 그 이후의 자녀에 자녀 당 152.63(약 267,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함. 또한 출산장려금으로 임신 7개월이 되면 일시불로 855.25유로(약 1,500,000원)을 지급함.
- 스웨덴은 월 1,050크로나(약 180,000원)을 만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지급하며, 둘째 자녀에는 월 100크로나(약 17,000원), 셋째 자녀에는 월 354크로나(약 60,000원), 넷째 자녀에는 월 860크로나(약 148,000원), 다섯째 자녀에는 월 1,050크로나(약 180,000원)를 추가로 지급함. 또한 자녀 한 명당 월 1,273크로나(약 219,000원)를 부모와 동거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양육지원금(Maintenance support)으로 지급함.

〈표 4-26〉 외국의 아동수당 사례

국가	종류	기준	급여
일본 Japan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아동수당 :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그 소득이 4인가족의 경우 작년 소득이 7,800,000엔 미만 특례급여: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서 소득 제한에 의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고용인(후생연금 등 피용자 연금가입자 등)이 특례로서 특례급여의 한도액 미만인 경우 (4인가족의 경우, 7,800,000은 넘지만 8,600,000엔 미만)에 지급	아동수당, 특례급여 모두 첫째, 둘째 자녀의 경우 한 달에 5,000엔, 셋째 자녀의 경우 한 달에 10,000엔 지급. 수당은 2월 6월 10월에 지급
독일 Germany	아동혜택 (Child benefit)	18세 미만 아동(직업이 없을 경우 만 21세 미만, 학생이거나, 전업학생, 자원 봉사직에 있는 경우는 만 27세 미만까지,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아동의 연간소득이 7,680유로 이상일 경우, 지급이 정지됨.	- 첫째, 둘째, 셋째까지: 154유로/월 - 이후의 자녀 : 179유로/월/인당
	아동수당 : 소득조사 (Child allowance : means-tested)	25세 미만의 아동을 1명 이상 둔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모에게 지급. 특정 소득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사이에 있어야 하며, 아동급여 지급 대상자 이어야 함.	최장 36개월까지 일인당 최대 140유로까지 지급됨. 지급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결합된 총 수당이 지급됨. 아동 본인의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감액됨.
	아동양육수당 : 소득조사 (Child-rearing allowance : means-tested)	2007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 부모는 무직상태·직업교육 중·주당 30시간 미만 근무 상태로 소득이 특정 연간 소득 상한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함. [첫 6개월간 연간소득 상한치] - 자녀가 1명인 부부 : 30,000유로(1년 급여로 대신하고자 한다면, 22,086유로) - 자녀가 1명인 한부모 : 23,000유로(1년 급여로 대신하고자 한다면, 19,086유로) [첫 6개월이 지난 뒤의 연간소득 상한치] - 자녀가 1명인 부부 : 16,500유로(1년 급여로 대신하고자 한다면, 22,086유로) - 자녀가 1명인 한부모 : 13,500유로(1년 급여로 대신하고자 한다면, 19,086유로) (자녀가 1명 늘어날 때마다, 3,140유로씩 소득상한치가 증가함.)	2살까지의 아동 1인당 300유로/월 지급 선택적으로, 1살까지의 아동 1인당 450유로/연간 지급.

〈표 4-26〉 계속

국가	종류	기준	급여
독일 Germany	양육혜택 (Parental benefit)	14개월 미만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 부모는 무직상태이거나 주간 3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상태이어야 함. 자녀의 출생 뒤에 한 부모는 최대 12개월까지 양육수당을 지급 받음. 부부의 경우, 가장 14개월까지 공유할 수 있으며, 최소한 2개월 이상은 다른 한쪽 부부에게 지급됨.	최대 월1,800유로(무직 상태일 경우 300유로)/월 까지, 지급신청한 부모 총 소득의 최소 67%까지 지급.
프랑스 France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2명이고, 자녀가 일하는 경우 소득이 법정최저임금의 55% 미만일 때.	- 두 자녀 : 119.13유로/월 - 세 자녀 : 271.75유로/월 - 네 자녀 : 424.37유로/월 - 추가되는 경우 한 자녀당 152.63유로 추가지급 - 12세 이상의 자녀에게 33.51유로, 17세 이상의 자녀에게 59.57유로 추가지급 (단, 두 자녀 가장 중 첫 번째 자녀는 제외). - 74.06유로/월의 고정금액이 가장 1년 동안 20세의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수당의 대상에 해당하는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지급. 일을 하고 있는 자녀의 수입은 746.39유로 이하이어야 함.
	영아급여 (Young child benefit)	2003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자녀, 부양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2004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다른 급여가 지급됨.) [출산·입양 장려금(Birth or adoption grant):자산조사] 임신 7개월(또는 입양)부터 지급. [기본수당(Base allowance) : 자산조사] 출생 후 1개월부터 3세까지 지급됨. 생동이 외에는 한 아동 이상 중복 지급되지 않음. 기본수당을 받는 가정은 가족보조급여에 해당되지 않음.	다음 급여는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짐 [출산장려금 : 자산조사] 임신 7개월에 한 자녀당 855.25유로를 일시불로 지급.(입양의 경우 한 아동당 1,710.49유로) [기본수당(Base allowance) : 자산조사] 자녀를 출산한 달부터 3번째 생일이 있는 달까지 171.06유로/월 지급.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가장 3년까지 되나 20번째 생일을 지난 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근로감축추가급여] 수급자가 표준근로시간(비임금근로자는 77시간 미만/월 근로해야 함.)의 절반 미만을 일하는 경우 232.67유로/월, 50~80% 일하는 자에 대해 134.13유로/월 을 지급. 추가급여는 359.67유로/월 로, 만약 수급자가 기본수당의 수급자가 아닌 경우, 530.72유로/월 까지 증액됨.

〈표 4-26〉 계속

국가	종류	기준	급여
프랑스 France	영아급여 (Young child benefit)	<p>[(Supplement for reduced work)]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을 보류하거나 줄이는 부모에게 지급됨. 자녀가 한 명인 경우는 2년 동안(두 자녀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4분기 이상을 자녀 양육에 기여하여야 함. - (Optional supplement for reduced work) 2006년 6월 30일 이후로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 있는 부모는 optional supplement을 선택할 수 있음.</p> <p>[(Supplement for child care)]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일을 하면서 공인보육기관에 보육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지급.</p>	<p>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달, 또는 출산, 양육, 입양 휴직기간(한 자녀의 경우 6개월, 그 이상일 경우 3번째 생일까지)이 끝나는 달부터 지급됨. 18개월에서 29개월 사이의 아이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추가급여는 2달간 계속하여 지급됨. 양부모가 모두 비상근직이며 추가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두 부모에게 지급되는 추가급여의 결합된 최대금액을 월최고액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급. 근로감축에 대한 추가급여 수급자는 상황에 따라 아동양육에 대한 추가급여도 결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Optional supplement for reduced work]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첫 해에 최장 12개월까지 587.90유로/월을 지급받을 수 있음. 수급자가 기본수급의 수급대상인 경우, 추가급여는 758.95유로까지 증액됨. [Supplement for child care] 소득관련 현금급여는 자녀의 수와 가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양육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에 주기 위해 지급됨. 급여는 자녀가 공인보육기관이나 재가보육원등에 의해 보육을 받고 있는 자녀에게 지급됨. 아동양육 비용에 쓰이는 부모의 기여도는 15% 이상이어야 함. 가족수당 기금은 공인보육원이나 가사보조원의 사회장기여의 50%까지에 대한 전체 사회보장기여금을 변제함. 사회보장기여금은 보육제공자의 급여를 통해 지급됨. 두 가지 형태의 아동보육추가급여의 수급자는 공인보육기관이나 가사보조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이 됨. 아동보육추가급여의 수급자는 근로감축추가급여 등과 결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p>

〈표 4-26〉 계속

국가	종류	기준	급여
프랑스 France	자녀질병에 대한 양육수당 (Parental allowance for a sick child)	아프거나, 상해를 입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이 수당의 수급자는 근로감축추가급여나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양육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9.58유로/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47.02유로/일)는 한 달에 최대 22일까지 휴직일수에 대해 지급됨. 급여는 12개월까지 지급. 감소된 급여는 자녀를 돌보는데 두 부모의 활동이 모두 줄어든 경우, 두 부모에게 모두 지급됨. 부모는 아픈 자녀를 돌보는데 3년 동안 최장 310일까지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01.22유로가 자산 조사된 의료비용으로 지급됨.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양육수당 (Special parental allowance for a disabled child)	50%이상 장애가 있는 20세까지의 아동에게 지급.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음. 이 수당의 수급자는 sick child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한부모 수당 (Single-parent allowance ; means-tested)	자녀가 1명 이상이거나 임신 중인 한 부모 세대의 최소가계소득을 보장.	수급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임신부에게는 561.18유로, 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는 748.24유로,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187.06유로의 추가 급여가 지급됨. 소득이 있는 한부모의 경우, 소득의 총액과 자녀수에 따른 flat-rate housing amount에 따라 수당은 감소함. 급여는 아동이 3살이 될 때까지 지급되며, 3살 이상의 아동의 경우 12개월동안 지급됨.
	가족후원수당 (Family backing allowance)	고아, 미승인(nonrecognized) 및 유기 (abandoned)아동에 대해 지급.	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83.76유로가, 양부모로부터 양육받지 못하는 아동에게는 111.68유로가 지급됨.
	새학년수당 : 소득조사 (New school year allowance : means-tested)	6~18세의 학생 등에 대해 지급. 직업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746.39유로/월 을 초과하지 않음. (자산조사 - 한 자녀 : 17,011유로/연간 - 두 자녀 : 20,937유로/연간 - 세 자녀 : 24,863유로/연간 - 추가 : 3,926유로/연간/인 가계연간소득이 위의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하며, 근소하게 넘는 경우는 일부 감액하여 지급.)	272.57유로가 한 아이당 지급됨.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8월에 지급됨. 16세~18세 아동의 경우 재학 또는 도제 중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지급됨.

〈표 4-26〉 계속

국가	종류	기준	급여
프랑스 France	가족보충금 : 소득조사 (Family supplement : means-tested)	3세~21세까지의 자녀가 3명 이상 있 는 가정에 지급.	155.05유로의 정액이 매월 가정에 지급됨.
	주거수당 : 소득조사 (Housing allowance : means-tested)	한 가지 이상의 가족수당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자격 부여.	임대 수준,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이시수당 (Home moving allowance)	새로운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으로 인 해 가구 수의 증가로 이사를 해야 하 는 자녀 3명 이상의 가구에 지급. Housing allowance의 수급 자격을 갖고 있는 가정에 한함.	부양 자녀 수의 최대한까지 지급되 는 이사에 필요한 비용.
스웨덴 Sweden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만 16세 이하 아동.(학생은 20세 미 만까지, 학습부진아들을 위한 교육기관 에 다니는 경우 만 23세까지)	- 자녀 한 명당 1,050크로나/월 지급 - 2명이상 자녀가 있을 경우 둘째 에 대해 100 크로나, 셋째는 354 크로나, 넷째는 860크로나, 다섯째 자녀에 대해서는 1,050크로나를 추 가 지급
	양육지원 (Maintenan ce support)	양육보조의 상응하는 보조를 자녀에게 제 공하지 못하는 한쪽 부모와 영구적으로 동거하는 18세 미만의 아동(해당 년도 6 월까지 학생인 경우 20세 미만까지), 자녀가 거주지를 바꾸는 경우, 자녀의 법적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	- 자녀 한 명당 1,273크로나/월 지급. - 자녀의 소득이 100,000크로나의 소득한도액을 넘는 경우, 양육보조 비용은 절반으로 감액됨.

다. 제도 개요

- 아동수당이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아동수당은 보편적 아
동수당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시스템 전반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는 일본과 같은 선별적 아동수당의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
- 일본의 경우도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되던 1972년에는 5세미만 아동, 셋
째자녀부터 지급하였으며, 이후 10세미만, 2세 미만 둘째자녀 등으로 확
대되었다가 1991년에 1세미만 첫째아로 확대되었고, 2007년에 들어서

야 첫째아 초등학생으로 대상이 확대 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소득층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상을 넓혀갈 필요성이 있음.
- 최저생계비이하 저소득층 7세미만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초등학생 (만 12세미만) 아동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함.

〈표 4-27〉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기존연구의 도입시나리오

	이선주 외(2006)	보사연(2000)	새로마지 플랜(2006)
지급액	5만원	순위별 차등지급 2순위 : 10만원 3순위 : 15만원	월 10만원
지급연령	만15세	-	단계적 확대 '07년 0세 '08년 1세 '09년 2세 '10년 3세
소득기준	상위 80% 미만 → 90%미만 확대(중산층포함)	-	아동이 있는 전체가구
출산장려형	① 1.둘째 아이부터 5만원 지급 ② 2.자녀수에 따른 차등지급 (첫째 5만원, 둘째 7만원, 셋째 10.....)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	전체가구 아동 중 둘째아 이부터 지원
노동공급	-	-	-
빈곤율	-	-	-
재원	1.보편적 : 5,986,775백만원 2.선별적 : 2,391,038~2,925,281백만원 3.출산장려형 : ① 2조 9967억원 ② 7조 4988억원	-	단계적 확대 '07년 2,820억원 '08년 5,640억원 '09년 8,460억원 '10년 11,280억원

자료: 1) 이선주 외,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2) 조애지 외,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06.

라. 소요 예산

□ 소득기준, 자녀연령기준, 수당규모에 따른 시나리오별 소요예산은 다음의 표와 같음. (10만원 지급시)

- 시나리오 1: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7세미만 둘째아부터 수당지급시
소요예산 약 2,813억원
- 시나리오 2: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13세미만 둘째아부터 수당지급시
소요예산 약 7,122억원
- 시나리오 3: 소득 70% 가구까지 7세미만 둘째아부터 수당지급시 소
요예산 약 2조1,988억원
- 시나리오 4: 소득 70% 가구까지 13세미만 둘째아부터 수당지급시
소요예산 약 4조1,230억원

〈표 4-28〉 아동수당 도입시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소득기준	자녀연령기준	수당규모	소요예산(억원)
최저생계비	7세미만	10만원	2,813
		5만원	1,406
	13세미만	10만원	7,122
		5만원	3,561
소득70%	7세미만	10만원	21,988
		5만원	10,994
	13세미만	10만원	41,230
		5만원	20,615

□ 아동수당 제도 도입시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양가족 관련 소득공제제도의 부분적 정비등 세제혜택의 감소를 수반하였음.

-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제도 재원의 일부 마련을 위해 2000년대 연소자 부양공제의 부분적 폐지와 배우자 특별공제를 폐지하였음.
- 프랑스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재도입하는 과정에서 피부양자 소득세 급여제도를 개혁, 고소득층 부양아동 1명 가족과 독신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함.

- 핀란드의 경우 1994년 아동수당제도의 현금급여액 증가시, 가족관련 소득감면제도를 완전히 폐지함.
-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출산시 소득공제,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등이 중복적인 개념의 세제혜택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재원마련 가능
- 아동수당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출산장려금등 관련 지자체 재원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마. 기대 효과

- 아동수당을 비롯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지원은 출산율 제고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음.
- 그러나 각 연구들이 이용한 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음. 최근에 수행된 주요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4-29〉 아동수당 및 가족정책의 출산율 증진 효과에 관한 해외문헌

연구자	주요내용	효과
Gauthier and Hatzius(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급여는 출산율에 그 크기는 작지만 유효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 -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여성 1인당 출산율 약 0.2명 정도 상승시킴 - 특히 이러한 효과는 첫째 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일 경우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셋째 자녀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현금 지원은 출산율 회복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현금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 이유는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 지원이 다양한 현물 지원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 지원의 효과가 과대 추정된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들(사회적·인구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는 변수가 적어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 	▲
Lundberg, Pollak, and Wales(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관련 조세 및 지원금 혜택의 수혜자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표 4-29〉 계속

연구자	주요내용	효과
Bjorkund(2002)	- 1960~1980년대 동안 노르웨이의 출산율이 0.5명, 핀란드 0.4명 감소한 반면 가족정책을 확대한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음	△
Laroque and Salanie(2003)	- 다른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분석을 하였는데 금전적 유인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Sleeboos(2003),	- 정부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혼합된(mixed) 결론을 가짐.	△▽
Grant et al(2004)	- 정부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혼합된(mixed) 결론을 가짐.	△▽
Laroque and Salanie(2004)	- 금전적 유인이 출산율에 강한 영향을 미치나 두 자녀 이상의 가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Laroque and Salanie(2005)	-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비근로소득이 5% 증가하면 출산율이 1.5% 상승할 것으로 추정함.	▲
Kohler, Billari and Ortega(2006)	- 조세 및 지원금정책, 보육지원정책, 휴가정책이 모두 출산율을 높인다는 대체적인 결론을 보여줌. 그러나 효과의 크기가 약하거나 경우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증가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출산이 단지 당겨지는 효과에 그칠 수도 있음. -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출산순서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음. - 출산장려정책이 장시간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정책의 집행이 일관되고 신뢰성이 높은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넓히는 필요조건	△
Gauthier(2007)	- 정부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동 연구에서는 현금 지원, 조세 감면, 육아 휴직 급여 등 재정적인 지원 정책을 “가족정책지표”로 구성하여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 프랑스 가족 지원 정책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출산율을 약 0.17명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함.	▲
Lundberg and Pollak(2007)	-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결혼 및 자녀양육을 장려하는 정책적 시도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결론	-
Laroque and Salanié (2008)	-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이 과거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것에 비해 출산율에 더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에서의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이 첫째 자녀 뿐만 아니라 셋째 자녀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보편적인 아동 수당 정책을 위해 GDP의 0.3%를 지출할 경우 함께 출산율은 0.3명 상승할 것으로 추정함.(그러나 이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 공급은 약 0.5%p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

2. 부모보험제도 도입 방안

가.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 한국의 저출산 요인은 “사회직장요인>자녀요인>소득요인>가치관요인”

순서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없이 기대 가능한 출산율 수준은 초저출산 국가의 합계 출산율 수준보다도 낮은 1.26명으로 나타났다(삼성경제연구소, 2005, 2006⁴⁵⁾).

※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08년 현재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음. 이는 일 가정 양립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용이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수준 제고와 더불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함. 이를 위해서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통하여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4-30〉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2006년)

(단위: 명, %)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한국
합계출산율	1.85	1.84	1.72	1.98	1.84	1.13
여성경제활동참여율	81.5	81.7	75.1	73.4	74.9	60.0

자료 : OECD database.

- 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육아 휴직 급여 수준의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극히 제한적인 여성 취업자만이 육아 휴직 급여를 제공 받고 있음.
- ※ 2007년 현재 여성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32.7%, 여성 임금 근로자 중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47.5% (고용보

45) 최숙희·김정우,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5.
최숙희·김정우,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6.

협통계, 2007)

- 여성 취업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및 직장 내 여성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률도 극히 저조한 실정임.

※ 2007년 현재 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여성 근로자 60,964명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은 20,875명으로 34.2%에 불과 (고용보험통계, 2007)

- 현재와 같이 고용 보험 체계 안에서 육아 휴직 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30~40대 기혼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52.1%, 비정규직 근로자는 47.9% (여성가족패널조사, 2007)

- 여성 근로자의 많은 부분이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고용 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전체 여성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 현재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365일 중 매월 50만원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노동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여성 육아 휴직 활용도를 낮추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여성의 경우 낮은 휴직 급여로 인해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부부 중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부인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국내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육아 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적 성격의 “부모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용 보험 가입자 이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현재 저출산 정책은 주로 자녀 양육 비용 경감 및 보육 환경 개선에 대부분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바, 부모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2009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분야 예산 (47,618.9 억원) 중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사업은 총 40,412.8억원 (84.9%)인 반면에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 사회 문화 환경 조성” 사업은 총 4,112.8억원 (8.64%)임.

나. 해외 사례: 스웨덴의 부모 보험제도 운영 현황⁴⁶⁾

(1) 부모 보험의 혜택

- 부모 급부금 (Parental cash benefit for the birth of a child)
 - 자녀 출생 시점부터 8세 될 때 까지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당 480일 동안 지급
 - － 처음 390일간은 평상시 급여의 80% 지급 (질병급부금과 동일한 수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일당 874 SEK), 나머지 90일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인 일당 180 SEK⁴⁷⁾
 - － 노동시간은 전체, 3/4, 1/2, 1/4, 1/8로 조절 가능하며 급여 수준은 노동시간에 맞게 조정됨.
 - 480일을 부부가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최소 6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Speed premium: 첫째 아이를 낳은 후 24개월 이내에 다시 출산할 경우 첫째 아이를 낳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계속 지급함으로써 2명 이상의 아이를 가지는 인센티브 제공

46) 스웨덴 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in Figures, 2008』, 2008.

47) 874 SEK는 150,171원, 180 SEK는 30,928원 (2009년 8월 현재 환율 1 SEK=171.8 원 적용)

□ 임신급여 (Pregnancy cash benefit)

-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임신부의 경우, 고용주가 임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를 주지 못할때 임신급여를 받을 수 있음 (출산 2개월 전 최대 50일간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근로환경법에 의하여 임신 중에 할 수 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임신부의 경우 작업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임신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평상시 급여의 80% 지급 (질병급부금과 동일한 수준)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일당 655 SEK⁴⁸⁾

□ 일시적인 부모급부금 (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를 규칙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아플 경우, 혹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 부모가 병원을 가야만 하는 경우 “일시적인 부모 급부금”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6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추가적으로 60을 더 사용할 수 있음.
- 평상시 급여의 80%가 지급되며 노동시간을 전체, 3/4, 1/2, 1/4, 1/8로 조절 가능하며 급여는 이러한 노동시간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어 지급됨.
- 자녀의 질병 상태에 따라 연령은 12세 이상까지 확대 가능함.
- 자녀 방문 휴가 (contact days):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부모 교육훈련, 유치원 및 방과후 학교를 방문하기 위하여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48) 655 SEK는 112,542원 (2009년 8월 현재 환율 1 SEK=171.8원 적용)

〈표 4-31〉 스웨덴 부모보험제도의 도입연혁 및 변천사

년도	1인당 GDP(USD)	부모급여	일시부모급여	출산율
1974년	5,333	o 부모급여 도입 - 180일간 소득의 90% 지급	o 일시부모급여 도입 - 가구당 연간 10일, 소득의 90% 지급	1.87
1978년	8,538	o 270일로 연장 - 240일간 소득의 90% 지급 -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1.6
1980년	10,604	o 360일로 연장 - 270일간 소득의 90% 지급 -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o 자녀 당 연간 60일로 확대, 소득의 90% 지급 o 아버지출산휴가 도입 - 10일간, 소득의 90% 지급	1.68
1986년	15,667		o 자녀방문휴가 도입 - 8~12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2일간, 소득의 90% 지급	1.8
1989년	18,567	o 450일로 연장 - 360일간 소득의 90% 지급 -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2.01
1990년	19,334		o 자녀당 연간 120일로 확대, 소득의 90% 지급	2.13
1995년	21,919	o 어머니/아버지 달 도입 -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30일간 할당, 소득의 90% 지급 - 300일간 소득의 80% 지급, 90일 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o 일시부모급여 대상 확대 - 부모→집에 머물면서 아이 를 돌보는 모든 사람 o 자녀방문휴가 폐지	1.73
1996년	22,677	o 어머니/아버지 달(각각 30일간) 소 득의 85% 지급 o 300일간 소득의 75% 지급, 90일 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o 소득의 75% 지급	1.6
1997년	23,430	o 어머니/아버지 달(각각 30일간) 소 득의 75% 지급		1.52
1998년	24,267	o 소득의 80% 지급	o 소득의 80% 지급	1.5
2002년	29,004	o 480일로 연장(30일간 병가휴가) o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60일간 할당		1.65
2006년	34,870			1.77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OECD factbook』, 2008.

(2) 재원 부담

□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다음의 4가지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지원 (부모보험, 아동수당 등), ② 질병과 장애의 경우를 위한 지원, ③ 노인을 위한 지원 (노인 연금 등), ④ 근로자 안전을 위한 지원 (직업재해보험, 실업수당 등)

□ 스웨덴 사회보험제도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고용자 및 자영업자의 부담금, 피보험자의 기여금(실업 보험의 경우)으로 충당하고 있음.

○ 부모보험의 경우 고용주 기여금이 전체 재원의 85%를 충당하고 있으며 정부가 나머지 재정 소요의 15%를 부담함.

- － 고용주 기여금의 경우, 고용주 수입의 2.2%, 자영업주의 경우 본인 수입의 2.2%를 부담함.
- － 2006년 부모보험에 소요된 비용은 26,094백만 SEK로 GDP의 0.9%, 정부지출의 3.42%를 차지함(<표 4-32>참조).

〈표 4-32〉 스웨덴 부모보험지출액의 변동추이 (1995~2006년)

연도	부모보험지출액		GDP 대비비중(%)	정부지출대비비중(%)
	스웨덴(백만SEK)	원화기준		
1995	18,004	2조4769억원	.99	3.74
1996	14,201	1조1995억원	.77	2.81
1997	13,282	1조8273억원	.69	2.58
1998	14,129	1조9438억원	.70	2.6
1999	15,595	2조2145억원	.73	2.73
2000	16,844	2조3173억원	.75	2.88
2001	18,372	2조5276억원	.79	2.99
2002	20,042	2조7573억원	.83	3.05
2003	21,970	3조3022억원	.87	3.18
2004	23,469	3조2288억원	.89	3.34
2005	24,127	3조3193억원	.88	3.34
2006	26,094	3조5900억원	.90	3.42

주: 1SEK=137.58원(2007년 평균환율기준)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전제희 의원실 입법조사회답자료 “스웨덴부모보험제도의 운영현황”, (2008.6.30)

다. 출산율 제고 관련 효과성

□ 부모보험은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개인

적으로 출산에 따른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여성이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회적으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취업률을 제고시키며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를 가능하게 함.
- 스웨덴은 1970년대 이전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부모보험”을 비롯한 적극적인 모성보호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2007년 현재 1.85명의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됨.
 - 스웨덴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현재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81.5%로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스웨덴이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출산율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요인은 “부모보험제도”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분석이 많음 (김주숙, 2000)⁴⁹⁾

라. 부모 보험 제도설계 방안

(1) 부모 보험의 세 가지 시나리오

- 대상자: 여성 고용 보험 가입자 (여성 인구의 15.7%), 여성 임금 근로자 (여성 인구의 33.3%), 여성 취업자 (여성 인구의 52.1%)의 세가지 시나리오 제시
- 이용율은 산전후 휴가 사용자 대비 육아 휴직 사용자 비율 (34.2%)을 최소 이용율로 가정하고, 50%, 75%, 100% 로 확대 가정
- 급여 액수는 임금의 50%와 80%의 정율제로 지급하는 두 가지 방안 제시

49) 김주숙,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복지학』, 40, 2000.

- 급여 일수는 만 0~만 5세 취학 전 자녀 1명당 365일
- 혜택 범위: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부모 급부금”만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표 4-33〉 부모 보험 도입 방안 시나리오

시나리오	대상자	이용율	급여 액수
1안	여성 고용 보험 가입자 (여성 인구의 15.7%)	34.2%, 50%, 75%, 100%	임금의 50%, 80%
2안	여성 임금 근로자 (여성 인구의 33.3%)	34.2%, 50%, 75%, 100%	임금의 50%, 80%
3안	여성 취업자 (여성 인구의 52.1%)	34.2%, 50%, 75%, 100%	임금의 50%, 80%

(2) 향후 제도 설계 시 논의 사항

- 급여 액수를 임금수준에 따른 정율제, 정액제, 정율제와 정액제의 혼합 방식 중 어떠한 방안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최대 급여 수준과 최소 급여 수준 설정 필요
- 부부의 육아 휴직 공동 사용 의무화 적용 (예: 부부 중 일방이 최소 특정 일수의 휴직 사용 의무화)
- 휴직 기간 및 근무 시간의 탄력적 사용
 - 휴가 기간은 자녀 연령 만0~만5세 기간 중 탄력적으로 총 365일 사용
 - 근무시간의 전체, 1/2, 1/3, 1/4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 수준 조정
- “임신급여”, 이혼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일시적인 부모 급부금”, 자녀의 유치원 및 학교를 방문하기 위한 “자녀 방문 휴가” 등 혜택 범위 확대

마. 소요 예산

- 1안: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표 4-34>참조)

- 현재 수준의 육아 휴직 이용율(34.2%)을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2천 1백억원~2천 3백억원의 예산 소요
 -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로 확대 시 연간 3천 4백억~3천 7백억원 예산 소요

〈표 4-34〉 시나리오 1안: 여성 고용보험가입자 대상 (여성 인구의 15.7%)

(단위: 명, 억원)

연도	출생아수	대상자수	이용율	이용자수	비용(억원)	
					급여수준 50%	급여수준 80%
2009	446,293	70,199	34.2%	24,008	2,303	3,685
			50%	35,100	3,367	5,388
			75%	52,649	5,051	8,082
			100%	70,199	6,735	10,776
2010	440,138	69,231	34.2%	23,677	2,272	3,635
			50%	34,616	3,321	5,314
			75%	51,923	4,982	7,970
			100%	69,231	6,642	10,627
2011	432,334	68,004	34.2%	23,257	2,231	3,570
			50%	34,002	3,262	5,219
			75%	51,003	4,893	7,829
			100%	68,004	6,524	10,439
2012	422,823	66,508	34.2%	22,746	2,182	3,492
			50%	33,254	3,190	5,105
			75%	49,881	4,786	7,657
			100%	66,508	6,381	10,209
2013	412,055	64,814	34.2%	22,166	2,127	3,403
			50%	32,407	3,109	4,975
			75%	48,610	4,664	7,462
			100%	64,814	6,218	9,949

주: 여성고용보험 가입자 비율(2007년) = 여성 고용보험피보험자수/15세 이상 여성 인구수 (15.7%), 여성 평균 임금은 월 1,599천원으로 가정 (49세 이하 여성의 평균 임금)
 자료: 연도별 출생아 수: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증기 출산율 예측』, 2008. ; 여성 고용보험피보험자수: 『고용보험통계』, 2007. ; 15세이상 여성 인구수: 『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 여성 평균 임금 수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7.

- 육아 휴직 이용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한다면 연간 약 3천 1백억~3천 3백억원 예산 소요
 -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 확대 시 연간 약 5천억~5천 4백억원

예산 소요

-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 전체가 육아 휴직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6천 2백억~6천 7백억원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 확대 시 연간 약 1조~1조 1천억원 예산소요

□ 2안: 여성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표 4-35> 참조)

- 현재 수준의 육아 휴직 이용율(34.2%)을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4천 5백억~4천 9백억원의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로 확대 시 연간 7천 2백억~7천 8백억 예산 소요

- 육아 휴직 이용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한다면 연간 약 6천 6백억~7천 1백억원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 확대 시 연간 약 1조 1천 억원 예산소요

- 여성 임금 근로자 전체가 육아 휴직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1조 3천억~1조 4천억원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 확대 시 연간 약 2조 1천억~2조 3천억원 예산 소요

〈표 4-35〉 시나리오 2안: 여성 임금 근로자 대상 (여성 인구의 33.3%)

(단위: 명, 억원)

연도	출생아수	대상지수	이용율	이용자수	비용(억원)	
					급여수준 50%	급여수준 80%
2009	446,293	148,435	34.2%	50,765	4,870	7,793
			50%	74,218	7,120	11,393
			75%	111,326	10,681	17,089
			100%	148,435	14,241	22,785
2010	440,138	146,388	34.2%	50,065	4,803	7,685
			50%	73,194	7,022	11,236
			75%	109,791	10,533	16,853
			100%	146,388	14,044	22,471
2011	432,334	143,792	34.2%	49,177	4,718	7,549
			50%	71,896	6,898	11,036
			75%	107,844	10,347	16,555
			100%	143,792	13,795	22,073
2012	422,823	140,629	34.2%	48,095	4,614	7,383
			50%	70,315	6,746	10,794
			75%	105,472	10,119	16,190
			100%	140,629	13,492	21,587
2013	412,055	137,048	34.2%	46,870	4,497	7,195
			50%	68,524	6,574	10,519
			75%	102,786	9,861	15,778
			100%	137,048	13,148	21,037

주: 여성고용보험 가입자 비율(2007년) = 여성 고용보험피보험자수/15세 이상 여성 인구수 (15.7%), 여성 평균 임금 = 월 1,599천원으로 가정 (49세 이하 여성의 평균 임금)

자료: 연도별 출생아 수: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2008. ; 여성 고용보험피보험자수: 『고용보험통계』, 2007. ; 15세이상 여성 인구수: 『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 여성 평균 임금 수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7.

□ 3안: 전체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표 4-36>참조)

- 현재 수준의 육아 휴직 이용율(34.2%)을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7천억~7천 6백억원의 예산 소요
 -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로 확대 시 연간 1조 1천억~1조 2천억 예산 소요
- 육아 휴직 이용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한다면 연간 약 1조~1조 1천억원 예산 소요
 -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 확대 시 연간 약 1조 6천억~1조 8천억원 예산 소요

- 여성 취업자 전체가 육아 휴직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2조 1천억~2조 2천억원 예산 소요
 -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 확대 시 연간 약 3조 3천억~3조 6천억원 예산 소요

〈표 4-36〉 시나리오 3안: 여성 취업자 대상 (여성 인구의 52.1%)

(단위: 명, 억원)

연도	출생아수	대상자수	이용율	이용자수	비용(억원)	
					급여수준 50%	급여수준 80%
2009	446,293	232,520	34.2%	79,522	7,629	12,207
			50%	116,260	11,154	17,846
			75%	174,390	16,731	26,770
			100%	232,520	22,308	35,693
2010	440,138	229,313	34.2%	78,425	7,524	12,039
			50%	114,657	11,000	17,600
			75%	171,985	16,500	26,400
			100%	229,313	22,000	35,201
2011	432,334	225,247	34.2%	77,035	7,391	11,825
			50%	112,624	10,805	17,288
			75%	168,936	16,208	25,932
			100%	225,247	21,610	34,576
2012	422,823	220,292	34.2%	75,340	7,228	11,565
			50%	110,146	10,567	16,908
			75%	165,219	15,851	25,362
			100%	220,292	21,135	33,816
2013	412,055	214,682	34.2%	73,421	7,044	11,270
			50%	107,341	10,298	16,477
			75%	161,011	15,447	24,716
			100%	214,682	20,597	32,955

주: 여성고용보험 가입자 비율(2007년) = 여성 고용보험피보험자수/15세 이상 여성 인구수 (15.7%), 여성 평균 임금은 월 1,599천원으로 가정 (49세 이하 여성의 평균 임금)

자료: 연도별 출생아 수: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2008. ; 여성 고용보험피보험자수: 『고용보험통계』, 2007. ; 15세이상 여성 인구수: 『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 여성 평균 임금 수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7.

바. 자원 확보 방안

□ 기업의 법인세 인하

- 법인세 인하 분 중 일부를 “부모보험” 재정을 위하여 기여하도록 함.

-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비율은 25%로 이는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아일랜드 12.5%, 싱가포르 20%, 홍콩 17.5%).
- 높은 법인세율로 기업 활동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법인세 인하는 기업이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법인세 인하를 조건으로 인하분의 일부를 부모보험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기업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부모 보험료 징수
 - 자녀 양육은 국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부모보험 재정의 일부분을 사회 보험료의 형태로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함.
 -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혼자 및 자녀 양육기 (30~40대)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사. 기대효과

- 현행 육아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수입의 손실 때문에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급여 (최대 수입의 80%)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취업에 강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여성 취업률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
- 남성 배우자로 하여금 육아 휴직을 활용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양성 평등적인 부부 관계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부부의 공동참여를 가능하게 함.
- 1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자녀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

3. 결혼지원기금조성 방안

가. 결혼지원기금조성의 필요성

- 출산율이 낮아진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 원인으로 유배우 부인의 출산 감소와 결혼연기 및 혼인을 감소가 있음. 이 중 최근 함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의 배경으로는 미혼자의 결혼 연기 및 혼인을 감소가 더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김승권, 2004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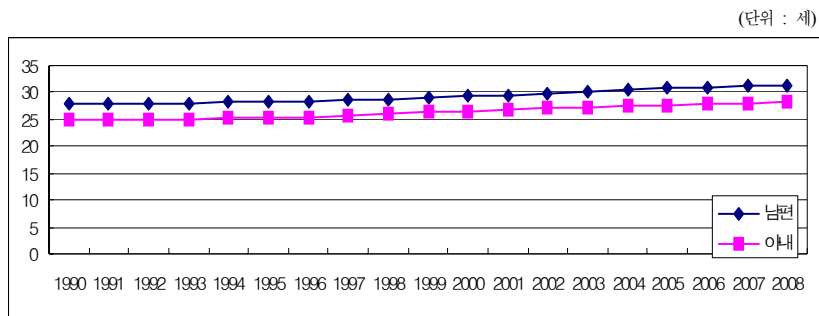
〈표 4-37〉 평균 초혼연령 추이

(단위 : 세)

년도	남편 초혼연령	아내 초혼연령	년도	남편 초혼연령	아내 초혼연령
1990	27.79	24.78	2000	29.28	26.49
1991	27.91	24.84	2001	29.55	26.78
1992	28.01	24.93	2002	29.77	27.01
1993	28.09	25.01	2003	30.14	27.27
1994	28.21	25.14	2004	30.53	27.52
1995	28.36	25.32	2005	30.87	27.72
1996	28.40	25.45	2006	30.96	27.79
1997	28.59	25.71	2007	31.11	28.09
1998	28.83	26.02	2008	31.38	28.32
1999	29.07	26.2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4-2〕 평균 초혼연령 추이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50) 김승권,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1-34, 2004.

- 2008년 현재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1.38세, 여성이 28.32세로, 1990년 각각 27.79세, 24.78세였던 것에 비해 3.59세, 3.54세 증가하였으며, 모의 첫째아 출산 연령 역시 1990년 평균 25.85세에서 2007년 29.42세로 3.57세 증가하였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여성의 첫째아 출산 연령이 30세에 육박하는데, 여성은 30대 이후부터 출산력이 감소(출산력 저하의 원인: 난소 기능 및 배란능력의 저하, 착상 능력 저하 및 자연유산의 증가 등)하기 시작하므로,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 여성이 설사 나중에 결혼하여 혼인율이 회복되더라도 임신 연령의 증가로 인한 출산력의 저하를 피할 수 없음(서경, 2005⁵¹⁾).

〈표 4-38〉 평균 출산연령 및 첫째아 출산연령 추이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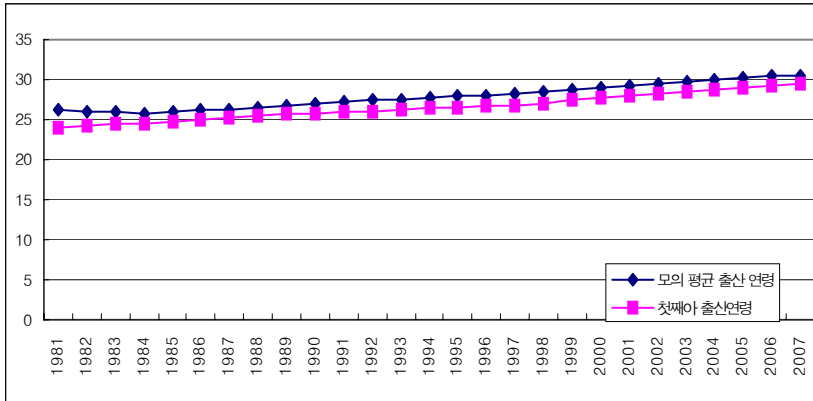
년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첫째아 출산연령	년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첫째아 출산연령
1981	26.15	24.1	1995	27.92	26.49
1982	26.04	24.19	1996	28.09	26.65
1983	25.90	24.38	1997	28.28	26.86
1984	25.84	24.61	1998	28.48	27.11
1985	25.95	24.81	1999	28.68	27.38
1986	26.14	25.01	2000	29.02	27.68
1987	26.33	25.26	2001	29.26	27.97
1988	26.57	25.48	2002	29.49	28.29
1989	26.80	25.68	2003	29.71	28.57
1990	27.03	25.85	2004	29.98	28.83
1991	27.19	25.98	2005	30.22	29.08
1992	27.38	26.05	2006	30.43	29.27
1993	27.55	26.23	2007	30.58	29.42
1994	27.78	26.4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51) 서경, 「고령임신의 위험 및 바람직한 어머니의 출산 연령」,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7회 춘계학술대회 연세집』, 37-40, 2005.

[그림 4-3] 평균 출산연령 및 첫째아 출산연령 추이

(단위 : 세)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이러한 만혼화는 교육수준의 상승 및 그로 인한 첫 취업 연령의 증가, 결혼 비용 마련 기간 소요 등 다양한 요인에 그 원인이 있음.

○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4년제 대졸 직장인들의 이력서를 분석한 결과 신입사원 입사 나이가 1998년에는 남성 평균 만 26.0세, 여성 평균 만 23.5세였으나, 2008년에는 남성 평균 만 28.7세, 여성 평균 만 25.6세로 10년 사이에 2.2세가 증가해 남성 대졸자의 경우 우리나라 나이로 30세 정도에 첫 직장에 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매일경제, 2009.06.22).

○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2007년에 결혼한 신혼부부 321쌍에 대해 결혼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총 결혼비용이 17,245만원으로 1억 7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2005년은 12,852만원), 신랑측의 평균 비용이 12,850만원, 신부측의 평균 비용이 4,39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혼집이 12,260만원으로 70% 정도를 차지함(결혼정보회사 선우 부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8⁵²⁾).

○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2005년 결혼비용 조사 결과에서

52)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7년도 한국결혼비용조사』, 2008.

신랑과 신부 모두 가족이 전체 결혼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였으며, 신랑측의 경우 대출 금액이 전체 결혼 비용의 13.6%, 신부측의 경우 3.9%로 나타났다(결혼정보회사 선우 부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6⁵³⁾).

〈표 4-39〉 2007년도 전체 결혼 비용 및 부담 비율

(단위 : 만원, %)

항목	신랑측 부담액		신부측 부담액		총결혼비용	
	평균비용	%	평균비용	%	평균비용	%
약혼식/합들이	112	0.9	80	1.8	192	1.1
예단	313	2.4	665	15.1	978	5.7
예물	507	3.9	313	7.1	820	4.8
혼수	109	0.8	1,229	28.0	1,338	7.8
결혼식	658	5.1	546	12.4	1,204	7.0
신혼여행	282	2.2	171	3.9	453	2.6
신혼집	10,869	84.6	1,391	31.6	12,260	71.1
전체	12,850	100.0	4,395	100.0	17,245	100.0

자료 : 결혼정보회사 선우 부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08), 「2007년도 한국결혼비용조사」.

-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이인 자사회원인 20~30대 미혼 직장인 1,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경기불황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을 연기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8.1%(남성 54.3%, 여성 40.5%)이며, 실제로 올해 결혼 계획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는 46.6%가 경기불황으로 결혼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기한 기간은 평균 2년으로 집계되었음(경향닷컴, 2009.01.21).
- 동 조사에서 결혼을 미룬 이유(복수응답)로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 잡지 못해서(57.8%)”, “결혼을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42.2%)”, “당장 목돈이 없어서(35.4%)”, “펀드, 주식으로 경제적 손실이 커서(16.7%)”, “부모님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14.5%)”로 경제적인 이유가 많음(상동).
- 이에 결혼 비용을 저리로 장기간 빌려주어 혼인 연령을 당길 필요가 있

53)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5년도 한국결혼비용조사』, 2006.

으며, 조선시대에 이미 가난하여 혼기를 놓친 자는 소재지 관사에서 비용을 보조한 선례가 있음(김재문, 2008⁵⁴).

- 뿐만 아니라, 결혼에 드는 비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결혼 지원 계좌를 만들어 계획성 있는 저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 외국의 결혼지원 관련 경제적 정책 현황

(1) 미국 : Marriage Development Accounts⁵⁵)

- 목적 : 결혼했거나 약혼한 커플이 빚을 없애고 저축을 늘리며,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
- 대상자 : 워싱턴 DC 거주자. 소득이 연간 5만달러 이하이며 자산(집과 자동차 한대 제외)이 만달러 이하. 약혼했거나 결혼한 커플 대상. 약혼한 커플은 프로그램 중 결혼해야 함.
- 혜택 : 1달러 저축하면 3달러를 매칭해줌. 이 금액으로 첫 집을 사거나 (DC에) 대학이나 직업학교에 다니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데 쓸 수 있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저금할 수 있으며, 9천 달러까지 매칭해줌(3천달러 저금 + 9천달러 매칭 → 12,000달러).

※ 결혼 상담 교실에 4번 이상 참석하면 300달러 보너스를 받고 약혼한 커플이 이 프로그램을 하는 중 결혼하면 200달러를 받음(결혼 허가증이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 제한 : 참가하는 커플은 최소한 8시간의 돈 관리 훈련과 선택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 훈련을 받아야함(집을 사는 것이 목적이면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와 관련된 훈련),

54) 김재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화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9) - 경국대전 예전(3) ; 혼가(혼인) ; 혼기를 놓친 가난한 집의 딸에게 국고에서 혼수물과 비용을 지원 해 줘라」, 『사법행정』, 49(2), 8-42, 2008.

55) 사이트 <http://caab.org> 참조 (Marriage Development Accounts Brochure 등)

최소한 한 달에 50달러나 3달에 150달러를 저금해야함. 처음에 5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함(계좌 관리를 위한 비용), 할당된 매칭 펀드를 다 사용한 경우 새로운 신청자는 받지 않고 대기자에 올림.

- 운영 : 비영리기관인 CAAB(Capital Area Asset Building Corporation).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시설 단체, 개인 기부에서 매칭 펀드를 받음.

※ 제도 도입 배경이 저소득 흑인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예방하고 결혼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임.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 Marriage Fund (1990년대 초에 United Arab Emirates' Marriage Fund Foundation을 만들)⁵⁶⁾

- 목표 : 젊은 커플들로부터 결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UAE 남성들이 UAE 여성과 결혼하도록 장려(oil 붐으로 소득 증가에 따라 신부 지참금이나 결혼 비용 증가 → 이 비용이 없는 많은 UAE 남성들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게 됨)
- 대상자 : UAE 시민이고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이며, UAE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 젊은이들이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도록 2005년에 연령 제한을 둬. 결혼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함(이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이 기금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간주).
- 상황 : 매달 일정 금액 상환. 자녀 1명 낳을 때마다 상환금의 20% 공제

다. 제도설계

(1) 결혼자금대출 설계 방안

- 대상: 20~30대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남녀

56) Rashad, H., Osman, M., & Roudi-Fahimi, F., "Marriage in the Arab World",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5.와 사이트 <http://uaeinteract.com> 참조

- 대출액수: 전체 결혼 비용 중 주택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 비용에 대한 대출(주택 비용은 전체 결혼 비용 중 70~80%를 차지하며, 본 제도 외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과 같은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제외)과 결혼 전체 비용에 대한 대출 두 가지 시나리오 제시. 주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 비용 대출에서는 30%, 50%, 80% 대출 지원 가정, 전체 결혼비용에서는 30%, 50% 대출 지원 가정
- 향후 제도 설계 시 논의 사항
 - 대출 액수를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 및 대출액의 상한선에 대한 논의 필요
 - 상환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상환 기간, 연리, 출산시 인센티브-자녀를 두 명 이상 낳는 경우 한 명당 일정 금액 면제- 등)
 - ※ 학자금 상환 방법 참고 : 미국의 경우 졸업후 6개월 거치, 12~30년간 상환, 연리 8.25% 미만 정도이며 영국은 금리 1~3%대이며 졸업후 소득이 만프랑 이상일 때부터 상환, 일본은 졸업후 최대 20년간 상환하며 1종 장학금은 이자 없이, 2종 장학금은 연리 최대 3%까지(2004년 4월 1일 현재 연리 0.6%가 적용되고 있음)이며, 학자금 재원 마련 방법은 영국, 네덜란드, 일본은 정부가 학자금 재원을 조성하는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대출기관이 학자금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채재은, 2005⁵⁷⁾).
 - 대표성 있는 샘플에 의한 정확한 결혼 비용 산출 필요
 - 만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및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 연령을 몇 세까지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57) 채재은, 「OECD 주요국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비교 분석 연구」, 『비교교육연구』, 15(1):143-166, 2005.

〈표 4-40〉 결혼자금대출 도입 방안 시나리오

시나리오	대상자	대출 항목	대출 액수
1안	20~30대 결혼 예정 남녀	주택비용을 제외한 결혼 비용	주택비용을 제외한 결혼 비용의 30%, 50%, 80%
2안		전체 결혼 비용	전체 결혼 비용의 30%, 50%

(2) 결혼지원계좌(매칭 펀드) 설계 방안

- 대상: 20~30대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신혼부부 중 저소득층
- 매칭 비율 및 액수: 월 최대 5만원까지 1:1 매칭(참고 : 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하며(5만원을 초과하여 저축할 수 있으나, 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칭되지 않음), 최대 매칭 액수를 180만원(3년까지)까지로 제한함
- 비용 사용시 출처를 제한(결혼식 비용, 주택 자금 등)하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해당 사용처로 지급
- 향후 제도 설계 시 논의 사항
 - 신청 대상자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 마련 필요
 - 항목별 비용 제한액을 둠(알뜰한 혼례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 이율에 대한 논의 필요

라. 소요 예산

(1) 결혼자금대출

- 1안 : 결혼비용 중 주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30%, 50%, 80% 대출 지원(<표 4-44> 참조)
 - 2008년 수준의 연령별 혼인율을 가정하고 20~30대 대상자 중 소득 수준 하위 30%에 대해 주택 비용을 제외한 결혼 비용 중 30%를 대출해 줄 경우 연간 1조1천억원~1조1천8백억원의 대출 비용 필요

- 대출 비용을 50%로 확대시 연간 1조8천5백억원~1조9천8백억원의 대출 비용이 필요하며, 대출 비용을 80%로 확대시 연간 2조9천6백억원~3조1천6백억원의 대출 비용 필요
- 2008년 수준의 연령별 혼인율을 가정하고 20~30대 대상자 중 소득 수준 하위 50%에 대해 주택 비용을 제외한 결혼 비용 중 30%를 대출해 줄 경우 연간 1조8천5백억원~1조9천8백억원의 대출 비용 필요
- 대출 비용을 50%로 확대시 연간 3조8백억원~3조2천9백억원의 대출 비용이 필요하며, 대출 비용을 80%로 확대시 연간 4조9천3백억원~5조2천7백억원의 대출 비용 필요

〈표 4-41〉 2008년 20~30대 연령별 혼인율

(단위 : %)

	남편	아내
20 - 24세	6.6	24.1
25 - 29세	51.8	79.0
30 - 34세	54.5	35.4
35 - 39세	19.7	11.3

주 : 연령별 혼인율은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혼인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text{연령별혼인율}(\%) = \frac{\text{연령별 발생한 혼인수}}{\text{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 인구}} \times 1,000$$

〈표 4-42〉 2009~2013년 연령별 추계인구

(단위 : 명)

연령	2009		2010		2011		2012		201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24세	1,647,301	1,498,331	1,641,439	1,471,727	1,649,499	1,469,058	1,685,321	1,488,561	1,734,956	1,517,816
25-29세	1,995,603	1,873,965	1,921,508	1,799,133	1,838,922	1,708,581	1,748,638	1,617,814	1,675,891	1,541,910
30-34세	1,975,428	1,852,896	1,977,245	1,851,203	2,003,438	1,874,186	2,030,537	1,897,688	2,031,220	1,898,822
35-39세	2,234,979	2,121,343	2,194,306	2,075,908	2,128,489	2,010,829	2,055,154	1,938,946	1,995,114	1,876,49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표 4-43〉 2009~2013년 연령별 결혼 추계 인원

(단위 : 명)

연령	2009		2010		2011		2012		201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24세	10,872	36,110	10,833	35,469	10,887	35,404	11,123	35,874	11,451	36,579
25-29세	103,372	148,043	99,534	142,132	95,256	134,978	90,579	127,807	86,811	121,811
30-34세	107,661	65,593	107,760	65,533	109,187	66,346	110,664	67,178	110,701	67,218
35-39세	44,029	23,971	43,228	23,458	41,931	22,722	40,487	21,910	39,304	21,204
20-39세	265,934	273,717	261,355	266,590	257,261	259,451	252,853	252,770	248,267	246,813

주 : 2008년 연령별 혼인율을 적용하여 2009~2013년 연령별 추계인구로 구함

〈표 4-44〉 결혼 비용 대출 시나리오 1안: 주택 비용을 제외한 결혼 비용 기준

(단위: 명, 억원)

연도	20~39세 결혼 추계 인원		소득 수준 기준	이용자수		비용(억원)								
						비용 중 30%			비용 중 50%			비용 중 80%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09	265,934	237,717	하위 30%	79,780	71,315	4,741	6,427	11,168	7,902	10,712	18,614	12,644	17,138	29,782
			하위 50%	132,967	118,859	7,902	10,712	18,614	13,170	17,853	31,023	21,073	28,564	49,637
2010	261,355	266,590	하위 30%	78,407	79,977	4,660	7,208	11,867	7,766	12,013	19,779	12,426	19,220	31,646
			하위 50%	130,678	133,295	7,766	12,013	19,779	12,944	20,021	32,965	20,710	32,033	52,743
2011	257,261	259,451	하위 30%	77,178	77,835	4,587	7,015	11,601	7,645	11,691	19,335	12,231	18,705	30,937
			하위 50%	128,631	129,726	7,645	11,691	19,335	12,741	19,485	32,226	20,385	31,176	51,561
2012	252,853	252,770	하위 30%	75,856	75,831	4,508	6,834	11,342	7,514	11,390	18,903	12,022	18,224	30,245
			하위 50%	126,427	126,385	7,514	11,390	18,903	12,523	18,983	31,506	20,036	30,373	50,409
2013	248,267	246,813	하위 30%	74,480	74,044	4,426	6,673	11,099	7,377	11,121	18,499	11,804	17,794	29,598
			하위 50%	124,134	123,407	7,377	11,121	18,499	12,295	18,536	30,831	19,673	29,657	49,330

주: 1) 결혼비용은 남성 12,850만원, 여성 4,95만원임

2) 소득 하위 50%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결혼 비용이 줄어들어 대출 비용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자료) 연령별 추계인구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혼인율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전체 결혼 비용 :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7년도 한국결혼비용조사

□ 2안 : 결혼 전체 비용 중 30%, 50% 대출 지원(〈표 4-45〉 참조)

- 2008년 수준의 연령별 혼인율을 가정하고 20~30대 대상자 중 소득 수준 하위 30%에 대해 전체 결혼 비용 중 30%를 대출해 줄 경우 연간 3조8천5백억원~4조8백억원의 대출 비용 필요

— 대출 비용을 50%로 확대시 연간 6조4천1백억원~6조8천억원의 대출 비용필요

- 2008년 수준의 연령별 혼인율을 가정하고 20~30대 대상자 중 소득

수준 하위 30%에 대해 전체 결혼 비용 중 30%를 대출해 줄 경우
연간 6조4천1백억원~6조8천억원의 대출 비용 필요

－ 대출 비용을 50%로 확대시 연간 10조6천9백억원~11조3천3백
원의 대출 비용 필요

〈표 4-45〉 결혼 비용 대출 시나리오 2안: 전체 결혼 비용 기준

(단위: 명, 억원)

연도	20~39세 결혼 추계 인원		소득 수준 기준	이용자수		비용(억원)					
	남	여		남	여	비용 중 30%			비용 중 50%		
						남	여	계	남	여	계
2009	265,934	237,717	하위 30%	79,780	71,315	30,755	9,403	40,158	51,259	15,671	66,930
			하위 50%	132,967	118,859	51,259	15,671	66,930	85,431	26,119	111,550
2010	261,355	266,590	하위 30%	78,407	79,977	30,226	10,545	40,771	50,376	17,575	67,951
			하위 50%	130,678	133,295	50,376	17,575	67,951	83,960	29,292	113,252
2011	257,261	259,451	하위 30%	77,178	77,835	29,752	10,263	40,015	49,587	17,104	66,691
			하위 50%	128,631	129,726	49,587	17,104	66,691	82,645	28,507	111,152
2012	252,853	252,770	하위 30%	75,856	75,831	29,242	9,998	39,241	48,737	16,664	65,401
			하위 50%	126,427	126,385	48,737	16,664	65,401	81,229	27,773	109,002
2013	248,267	246,813	하위 30%	74,480	74,044	28,712	9,763	38,475	47,853	16,271	64,125
			하위 50%	124,134	123,407	47,853	16,271	64,125	79,756	27,119	106,874

주: 1) 결혼비용은 남성 12,850만원, 여성 4,95만원임
2) 소득 하위 50%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결혼 비용이 줄어들어 대출 비용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자료) 연령별 추계인구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혼인율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전체 결혼 비용 : 한국결혼문화
연구소 2007년도 한국결혼비용조사

(2) 결혼지원계좌

□ 10,000쌍에 대해 월 5만원씩 12개월 지원할 경우 연간 60억원이 소요되며,
20,000쌍에 대해 월 5만원씩 12개월 지원할 경우 연간 120억원이 소요됨.

〈표 4-46〉 결혼지원계좌 예산

이용 카플/부부	매칭 비용
10,000쌍	10,000쌍 × 월 5만원 × 12개월 = 600,000만원
20,000쌍	20,000쌍 × 월 5만원 × 12개월 = 1,200,000만원

마. 자원 확보 방안

- 결혼지원대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자원 확보 방안이 다름
 - 정부에서 기금을 마련해 그 기금에서 직접 비용을 대출해 주는 경우는 기금 마련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며, “결혼지원기금”을 만들거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기금”을 만들어 결혼 지원 및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저출산 대응 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기금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세원 확보가 필요함.
 - 은행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정부 보증 예산 및 이자 지원 예산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은행과 협의가 필요함.

바. 기대효과

-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커플에게 결혼 비용을 대출해주고 일정 부분 지원해줌으로써 결혼 연령 및 출산 연령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출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리라 예상함.
- 특히 출산과 연계하여 제도 운영시 효과가 더 크리라 예상함.
- 결혼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개인에게만 전가시키지 않고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결혼이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과 정부가 함께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킴. 그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결혼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함.

제3절 재원확보 방안

1. 세수 기반 확대

- 재원확보의 일반적 방안은 크게 세원의 확대,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국채발행, 조세지출제도 정비,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를 들 수 있음.
 - 담배, 주류, 경마나 도박등에 대한 sin tax 강화
 - 국유재산의 매각, 임대등 유휴재산 활용도 강화등을 통한 국가자산관리 효율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대
 - 음성탈루 소득 적발을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와 소득과악률 제고
 -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세등 각 개별세의 세원기반 확대
 - 조세지출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 확보
- 현정부의 세율인하 기조로 인하여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는 어렵고, 경제위기로 인한 지출증가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균형예산기조로의 복귀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한 세입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소비세 인상등이 검토되었음.
 - 외부불경제 품목인 술, 담배, 에너지 과다소비 제품등에 대한 과세강화가 검토되었음.
 - 주세의 경우는 주세의 80%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원이 되어, 행안부, 문광부, 농림수산부의 지역발전사업등에 쓰이고 있음.
- Sin Tax 강화: 담배
 -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담배세 인상의 필요성이 있음.
 - 담배세 인상은 흡연자에게 흡연의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흡연의 감소와 담배부담금의 건강증진사업에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담배가격 인상을 권고하고 있는 WHO의 담

배규제 기본협약과 더불어 흡연을 감소를 위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 끝에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낮은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는 62%로, OECD평균 (70.35%) 에 비해 낮은 수준
- 현재 우리나라 담배소비세수는 약 2조 7천억원이며, 이외에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약 1조 5,753억원 (2007년 기준)

〈표 4-47〉 담배소비세 국제비교

OECD평균	G7 평균	미국 (켄터키)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한국
70.35%	67.5%	38.7%	62.7%	77.1%	80.4%	73.6%	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부문의 재원확보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 Sin tax 강화: 경마, 카지노등 도박관련세 강화

- 경마, 카지노관련 세금은 현재 관련 객장에 정액으로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와 경마 경륜등의 발매금의 10%로 부과되는 레저세(지방세)가 있음.
- 도박은 심리적 장애, 집중력부족, 활동성 장애, 물질 남용이나 의존증 등 질병을 유발하며, 대인관계 손실, 직업상실, 범죄등에 이르게 함.
- Chetwynd는 도박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정책은 도박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제시. 높은 도박의 조세는 예방 정책 중 하나임.
- World Bank는 도박에 대한 높은 조세는 도박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제안
- 정부 규제정책을 통해 카지노세가 카지노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카지노세로 인한 세부담은 사업자가 주로 지게 되므로 형평성 악화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음(김정훈, 2002⁵⁸⁾).

□ 국가자산관리 효율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대

- 국유재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기준 총 국유재산은 약 270조에 달함.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국유재산의 증가율 (전년대비)	7.53%	13.53%	11.63%	3.95%	18.73%	10.13%	1.34%

- 국유잡종재산 실태조사 결과 매각 및 임대 대상으로 분류된 재산, 장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적극적으로 처분하여,
 - 예산, 인력 등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유휴재산의 활용도 제고하고 추가적 세입으로 활용
 - 매각, 임대 국유재산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유휴재산의 활용도 제고
-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과세기반의 확대 (소득과악을 제고 방안)
- 음성탈루소득의 적발을 통한 세원확대 및 세입증대
 -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을 노출시키는 방안 적극추진
- 세원확대 방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축소
-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세편의 차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의무가 없어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 등 근거과세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전체 자영업자 소득과악이 잘 안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제도적 빌미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많음.
- 세원확대 방안.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개인이 보유한 비상장, 미등록 주식에 대한 과세와 법인이 보유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및 등록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되고 있음.
 - 그러나 OECD국가의 경우 다수가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58) 김정훈,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폐광지역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2.

-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가 된다는 의견들이 있음.
-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면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 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게 할 뿐 아니라,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음.

□ 조세지출제도의 정비

- 2008년도 총 조세감면액 규모는 29조 6,3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됨.
- 조세감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 비과세 · 감면 증가율	7.2%	18.9%	4.4%	9.5%	6.6%	7.6%	29%

- 조세지출은 감추어진 보조금의 역할을 함으로 조세제도 안에 조세지출이 많이 포함될 경우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 2008년 현재 총 189개의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체계를 왜곡함.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의 차이를 초래함.
- 업종 간 중립성을 저해하여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초래함.
- 조세감면제도의 범위는 주로 근로자 및 농어민 등 서민충치원, 중소기업과 R&D 및 설비투자지원, 교육, 문화, 환경 및 사회보장 지원, 국방 및 일반행정 지원 등으로 나뉘지고 있는데, 특정사항에 대해 조세감면이 집중화되고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조세지출은 특혜성 보조금 지급으로 호를 가능성이 많고, 취지와는 달리 주로 고소득층에 의해 활용이 되고 있으므로, 역전된 보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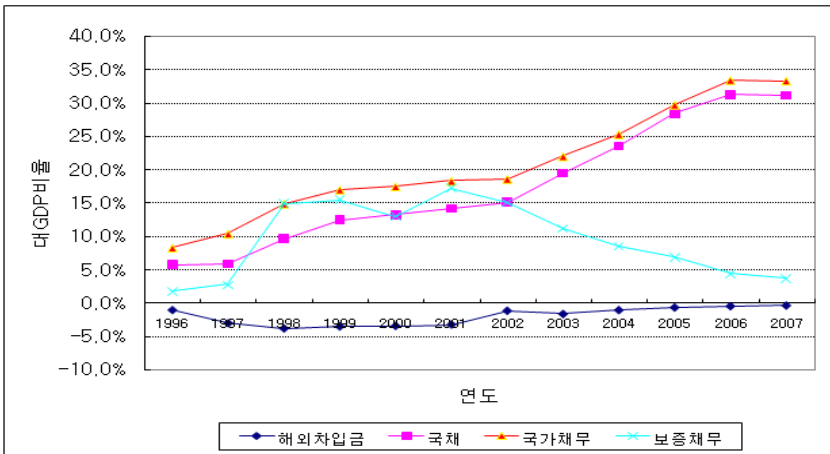
성격을 띠게 될 수도 있음.

- 일몰이 도래한 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는 등 항구화 기득권화 현상이 보이고 있음.

□ 국채발행

- 우리나라의 국채발행량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환위기 이전 1996년에 5.7%수준이던 국채잔액이 2005년에는 28.4%에 달하고 있음. 이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차입금 등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으로 구성되는 국채 발행량은 해마다 증가하여서 2004년에는 GDP 대비 7.9%까지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국채(0.7%)만이 신규 발행되었음.
- 저출산 대책사업의 효과는 인적자본형성으로 인한 경제성장 원동력 제공등 후세대까지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후세대가 현세대보다 더욱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국채발행의 타당성도 존재함.

[그림 4-4]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변화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각 년도.

2. 목적세, 기금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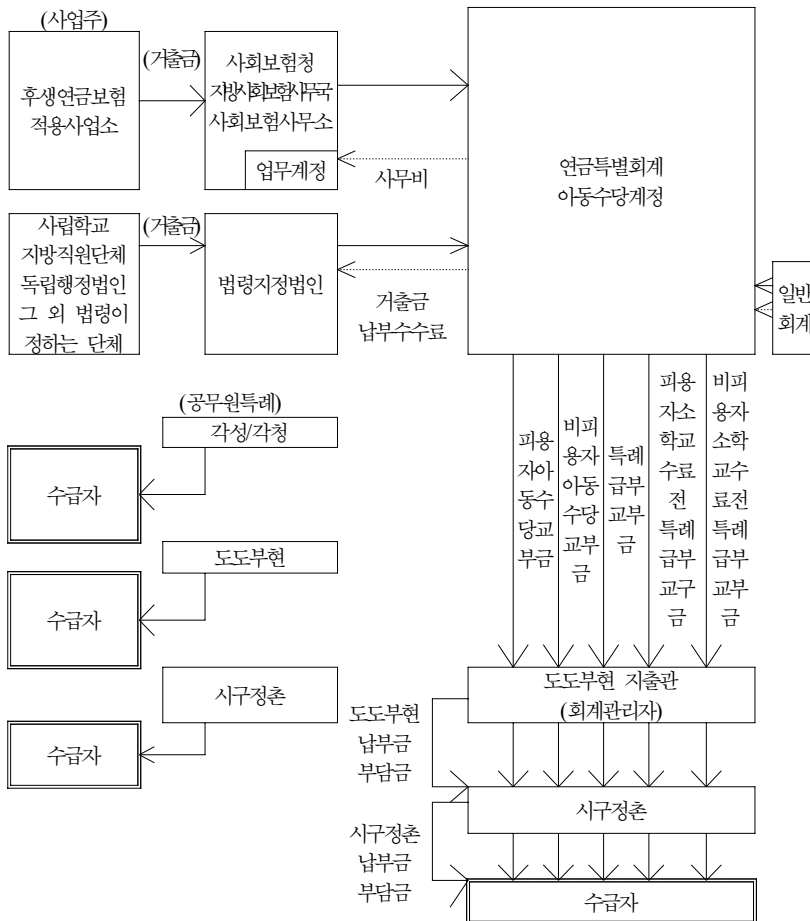
- 세입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재정여건의 호조는 저출산 대책사업의 재원 확보를 용하게 할 수 있으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하여서는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 사업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 출산율제고와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의 성격을 띄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경우 그 정책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친 투자에 의해 나타나는 정책과 효과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안정적 재원확보가 정책효과를 담보하게 되므로 기금, 목적세등을 통한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효율적일 수 있음.
- 현재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중 모자보건사업등 신생아와 임산부 건강과 관련된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단위사업	세부사업	08예산(A)	08예산(B)	증감(B-A)	증감률
			단위: 백만원		단위: %	
<국민건강증진기금>	저출산대응인구정책 모자보건사업	피임시술 사후관리	13,369	18,243	4,874	36.5
		가임기여성건강증진지원	15	10	△5	△33.3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1,802	1,213	△589	△32.7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4,317	4,797	480	11.1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5,071	7,303	2,232	44.0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294	492	198	67.3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1,870	3,968	2,098	112.2
		찾아가는 산부인과(신규)	-	460	460	순증

- 저출산대응 및 가족정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등을 운영하거나 사회보장제와 같은 목적세를 징수하는 해외사례가 있음.
 - 오스트리아의 경우 가족수당의 재원조달을 위해 주정부, 연방정부, 고용주 각출료 (4.5%)등을 가족수당평형기금 (Family Allowances Equalization Fund)로 이전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3세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은 고용주가 70%를 부담하며, 고용주 각출료 (0.13%)는 사회보험청이 징수하여 연금특별회계의 아동수당계정으로 들어가 운용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 출산 및 질병관련 급여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사회보장세(CSG)가 개인소득에 부과됨. 고용주는 임금의 일정율을 각출료로 부담함. 출산 및 질병관련 급여의 재원조달에는 이외에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부가세(12%), 주세, 담배세, 제약회사 광고비에 대한 목적세를 부과하여 재원조달하고 있음.
- 포르투갈의 경우 가족수당은 피보험자, 고용주, 자영업자의 각출료로 구성된 연금보험 재원중 일부를 가족수당 재원으로 활용함.

[그림 4-5] 일본의 아동수당 재원조달 및 운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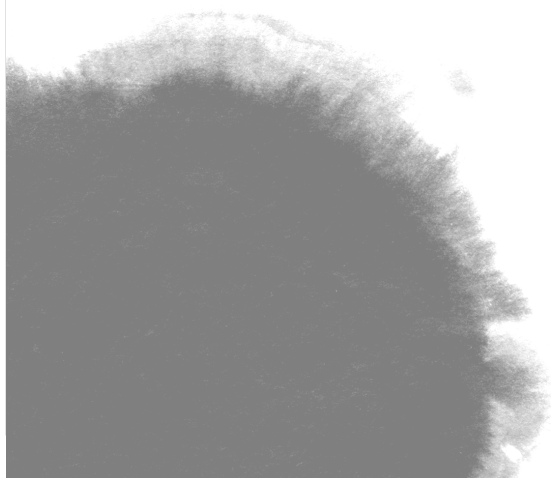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 내부자료.

- 저출산대책을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정권의 교체, 기타 경제 및 재정여건등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용하여 장기적인 사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그 타당성이 있음.
- 새로운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거나, 특별회계의 세출계정으로 세입과의 연계를 유도할 수 있음.
- 현재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중 보건관련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재원조달
- 향후 담배가격인상 등으로 인하여 건강증진부담금등 수입금이 증가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자녀 양육비 경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며,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추가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여, 보다 안정적인 기금을 통한 재원조달 가능
- 이때 세입원은 담배소비세의 일부, 경마 도박관련 개별소비세의 일부 등 sin tax재원을 활용할 수 있음.

5장

결론



제5장 결론

- 21세기에 들어 OECD국가 대부분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의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함.
 - 본 연구의 결과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0~2015)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저출산현상 지속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인구감소국으로 전환할 것이며,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노동부족국가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인구고령화가 압축적으로 진척되어 세계 최고령국가가될 전망이다.
-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인구문제는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의 지속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음.
 -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노동력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며, 아동산업, 교육산업 등 위축으로 생산이 축소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임.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재정 위험도가 급증하여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 결과적으로 저축률 하락, 자본스톡 증가율 둔화 등과 함께 경제성장률을 크게 둔화시킬 것임.
 -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수의 축소 및 학교통폐합이 불가피하여 지역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무시되는 폐단이 발생하고, 교원 수요 감

소로 교육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의 미충원율이 증가하여 대학의 슬림화 및 그로 인한 내실 있는 고등교육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보육료 내실화 방안, 일가정 양립제고 방안,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방안 등을 제안

○ 보육료 내실화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비용 국가책임제 확립(둘째아 이상 보육비용 조건없이 전액지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보육시간별 비용 및 지원기준 이원화(종일제 추가 지원) 등 필요

○ 일가정 양립제고 방안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전기간 지원,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상향 조정(장기적으로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 '10년 155만원 수준),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고용 친화적 개편(육아휴직기간별 지급액 차등화, 복귀 6개월 후 보너스 지급, 자녀수별 정률제 적용기간 차등화, 원직장 복귀 후 계속 취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 등), 육아휴직급여제도 정률제 개편, 육아휴직기간 중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액의 사회적 부담 확대 등 필요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방안으로 현행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지원제도 개선(자녀수와 자녀연령을 고려하여 크기 등 적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일부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공동생활거주 물량 일부 배정), 융자지원제도 개선(대출한도 확대 및 이자율 감소, 주택면적제한 상향조정 또는 철폐), 주거비경감을 위한 다자녀 가족주택수당지원 도입 등 필요

□ 장기적인 방안으로 아동수당 도입, 부모보험제도 도입, 결혼지원기금 조성 및 결혼자금대출 방안 도입 등을 제안

□ 저출산대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일상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재원 투입으로 별도 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 기존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등) 활용, 특별회계의 세출계정으로 세입과의 연계 유도, sin tax 재원(담배소비세, 경마 도박관련 개별소비세의 일부) 활용 등 고려

□ 결론적으로 저출산은 사회·경제 분야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간적으로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파급효과 발생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정한 계성 존재

－ 경제성장률 제고는 고령화로 인한 부담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 자체가 불확실

－ 해외투자의 확대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현저하게 줄여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 외국인력 유입을 허용하는 것에 따른 득이 있지만, 그것이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 곤란

－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는 고령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으나, 실현 가능한 정도에 대해 불확실

○ 결과적으로 출산을 회복만이 미래의 파급효과를 방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 효과가 높은 대안임.

－ 다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 속도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통계』, 2008.
- _____,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각년도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국민연금재정계산 보고서, 2008.
- _____,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국민연금재정계산 자료집, 2008.
- 국민은행, 『2007년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2007.
- 국토해양부, 『2007년도 임대주택 업무편람 매뉴얼』, 2007.
- _____,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 2009.
- _____, “다자녀가구 지원현황”, 내부자료, 2009.
- 국회입법조사처, 전재희 의원실 입법조사회답자료 “스웨덴부모보험제도의 운영현황”, 2008.6.30.
- _____, OECD factbook, 2008.
- 김광석, 『우리경제의 성장요인과 성장잠재력 전망』, 세계경제연구원, 1998.
- 김승권,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을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1-34, 2004.
- 김승권 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김영태, 「주거복지의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 17, 2006.

김용하,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사각지대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5.

김재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와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9) - 경국대전 예전(3) ; 훈가(훈인) ; 훈가를 놓친 가난한 집의 딸에게 국고에서 혼수물과 비용을 지원 해 줘라」, 『사법행정』, 49(2), 8-42 2008.

김정훈,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폐광지역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2.

김주숙,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복지학』, 40, 68-96, 2000.

김진수 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김진욱, 「계층별 동등화 소비단위」, 『공공경제』, 제 8권, 2003.

김현숙·서병선,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숭실대학교·보건복지가족부, 2008.

김현숙 외, 『연령별 적정학급규모를 통한 유아의무교육대비 표준교육비 산정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8.

김현숙·우석진,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보건복지가족부, 2009.

김혜원 외, 『산전후휴가급여 사회화 확대 검토』, 노동연구원, 2008.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7.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현황”, 내부자료, 2009.

문형표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6.

민희철 외,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

- 국조세연구원, 2007.
- 박기백 외,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2005.
- 박형수·류덕형,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한국조세연구원, 2006.
- 박형수 외,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 방하남 외,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한국개발연구원, 2004.
- 배성일 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보육통계』, 2009.
- _____,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2009.
- _____, 『보육사업안내』, 2009.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의 출산을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2008.
- 서경, 「고령임신의 위험 및 바람직한 어머니의 출산 연령」,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7회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37-40, 2005.
- 서문희 외,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_____, 『민간보육시설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평가』, 여성가족부, 2007.
- _____,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서문희·박수연,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8.
- 서문희·최혜선,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
- 스웨덴 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in Figures, 2008』, 2008.
- 신유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스웨덴 정책을 통한 시사점 모색」,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2008(1), 44-60,

2008.

신윤정 외,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_____, 『국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구축』,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이선주 외,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이태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주거급여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보건복지부·노동부·기획예산처,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2007.

정부합동,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2006.

정형선 외, 『중장기 국민의료비 규모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연세대학교의료복지연구소, 2007.

조애저 외,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채재은, 『OECD 주요국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비교 분석 연구』, 『비교교육연구』, 15(1):143-166, 2005.

최숙희·김정우,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5.

_____, 『획기적인 출산을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6.

최준욱 외, 『재정 금융 분야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2005a.

_____,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b.

- 최준욱·전병목, 『인구고령화와 재정』,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고령
화대비 협동 연구 시리즈 04-07, 한국조세연구원, 2004.
- _____,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I):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3.
- 통계청, 『2004 출생·사망통계』, 2004.
- _____, 『2008년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2009.
- _____, 『가계조사』, 2008.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2008.
- _____, 『도시가계연보』, 2007.
- _____, 『인구동향조사』
- _____, 『인구주택총조사(1995, 2000, 2005)』.
- _____, 『장래인구추계』, 2006.
- _____,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05년도 한국결혼비용조사』, 2006.
- _____, 『2007년도 한국결혼비용조사』, 2008.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2007.
- 한국금융연구원, 『2008년 금융동향과 2009년 전망』 세미나발표 자료, 한
국금융연구원, 200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부문의 재원확보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5.
- 한진희 외, 『고령화 사회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2006~2080』, 한국
개발연구원, 2007.
- _____,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 2012』, 한국개발연구원,
2002.
- Barro, Robert J. and Xavier Sala-i-Martin, 『Economic Growth』,
McGraw-Hill, New York, 1995.

- Boersch-Supan, Axel, "Labor Market Effects of Population Aging",
NBER Working Paper Series, #8640, NBER, December 2001.
- Bosworth, Barry P. and Susan M. Collins, "The Empirics of Growth:
An Updat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2003,
No.2, pp.113-179, 2003.
-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Handbook of Methods』, 1997.
- Collins, Susan and Barry Bosworth,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Accumulation Versus Assimil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35-91, 1996.
- Culter, David, James M. Poterba, Loise M. Sheiner, and Lawrence H.
Summers, "An Aging Society: Opportunity or Challeng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0.
- 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Census of child care services.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childcare>)
- EU, MISSOC, 2007.
- Feldstein, M. and C. Horioka, "Domestic Saving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The Economic Journal Vol.90 No.358 pp
317-329 June 1980.
- Gauthier, A.,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6, 2007.
- Gauthier, A. and J. Hatzius,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Model", Population, 51, pp. 295~346, 1997.
- Global insight, 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2007.3.
- Goldin, C. and Katz, L.F., "The legacy of U.A. Educational
Leadership: Notes on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20th Century", AEA Papers and Proceedings, v91 n2, May

- 2001.
- Grant, J. et al.,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Options, 2004.
- Hahn, Chin Hee and Sukha Shi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Post-crisi Growth Performance of the Korean Economy", in Lee, Sanghyup and Hahn, Chin Hee eds., Reforms for Korea's Sustained Growth, KDI and East West Center, 2007.
- Heller, Peter and Steven Symansky, "Implications for Savings of Aging in the Asian Tigers," IMP Working Paper, 1997.
- Housing Affordability DATA System, 2007.
- International National Security, "Social security in Sweden", 2001.
- Kohler, H, Billari, F. and Ortega, J., "Low Fertility in Europe: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in F. R. Harris(ed.), The Baby Bust: who will do the work? who will pay the Taxes?
- Laroque, G. and B. Salani, "Fertility and Financial Incentives in France," CESIfo Economie Publique 13(2), pp. 61~94, 2003,
- _____, "Fertility and Financial Incentives in France," CESIfo Economic Studies 3/04, 2004.
- _____, "Does Fertility Respond to Financial Incentives?", mimeo, 2005.
- Lundberg, S. and Polak, R, "The American Family and Family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1, No 2, 2007.
- Lundberg, S., and Polak R, and Wales, T., "Do Husbands and Wives Pool Their Resources?: Evidence from the United Kingdom Child Benefit.," Journal of Human Resources, 32(3), 1997.
- Moss and O'Brien,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 Related Research 2006』,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No. 57, 2006.
- OECD, 『인구전망 2000~2050』, 2002.
- _____,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Paris, 2004.
- _____, Society at a Glance 2009.
- _____,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 _____, OECD Factbook, 2005.
- _____, OECD Health Data 2008, Paris: OECD, 2008.
- _____,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 1980-2001, 2004.
- OECD, 『인구전망 2000~2050』, 2002.
- _____,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06.
- _____, 『Women and Men in OECD Countries』, Paris, 2007.
- _____, (Dang, Thai Than, Pablo Antolin and Howard Oxley), "Fiscal Implications of Ageing: Projections of Age-related Spending,"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305, 2001.
- Sleeboos, Joelle E, "Low Fertility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 Oct. 2003.
-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Europe, 2008』,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08.
- Susan Kell Associates, 『Parental Leave and Carers Leave :International Provision and Research』, Department of Labour, UK, 2006.
- Rashad, H., Osman, M., & Roudi-Fahimi, F., "Marriage in the Arab World",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5.
- Ray, 『A Detailed Look at Parental Leave Policies in 21 OECD Countries』, CEPR, 2008.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 Five Years with the
Maxim Fee. English summary of Report 294, 2007.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

Young, Alwyn,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641-680, 1995.

매일경제,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345752>,
2009.06.2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
01211014171&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11014171&code=940100), 2009.01.21

<http://caab.org/> (Marriage Development Accounts Brochure)

<http://uaeinteract.com>

<http://www.rfv.se>